

정부3.0 우수사례집 : 중앙행정기관편

Open government!

Competent government!

Service government!

정부3.0  
행복한 우리나라  
만들기

발

—

간

—

사

—



안전행정부장관 유 정 복

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 개개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일생 전반에 걸쳐 다루지 않는 게 없는 실정입니다. 공직자가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소홀히 하면 국민에게는 커다란 불편과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한 편으로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면 국민 일상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업무성과를 창출하는 데는 조직과 예산도 중요하지만, 공직자 개개인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목표의식, 그리고 헌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3.0』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입니다. 지난해 6월 비전 선포 이후 6개월여간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오로지 국민행복만을 위해 열정을 쏟아 정책현장 구축구석을 발로 뛰며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기존의 낡은 틀과 관행에서 벗어나 문제의 본질에 천착해 해결방안을 고민한 결과 적지 않은 우수사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과를 널리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정부3.0, 조금 더 행복한 우리나라 만들記’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3.0』은 정부출범 초기 일회적·단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책이 아닙니다.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해 박근혜정부에서 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프로젝트입니다. 아직은 시행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열정과 사랑, 그리고 창의를 밑거름 삼아 추진하면, 궁극적으로 국민행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3.0』과 그 첫 성과물인 이 우수사례집이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Contents!

# 활~짝! 정부3.0!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방 / 국민참여 민·관협력

유치원알리미, 학부모 실질 부담금 최초 공개	교육부	012
군 환경정화기술 공개 하여 민간사업 쏙쏙~ 해외시장 개척 쏙쏙~	국방부	016
전세버스 정보, 미리 체크하면 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국토교통부	020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이력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국토교통부	024
무작정 창업은 NO! 외식업경기지수에 먼저 귀 기울여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	028
농지가격 현정조사는 No! No! 집에서 어디든지 알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032
요금 추천받고 통신비 다이어트 스마트초이스!	미래창조과학부	036
통일법무에 관한 모든 DB '통일과 법률'에서 검색하세요.	법무부	040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한 곳에서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	044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결과, 이제 아이사랑보육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048
우리고장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안전행정부	052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제 youth.go.kr 한 곳에서 비교 검색하세요.	여성가족부	056
환경영향평가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환경부	060
일본 수입식품 방사능 불안감을 잡다 - 방사능 검사정보 공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064
경찰청 '유티스' 내비 - 운전이 스마트해집니다.	경찰청	068
간간한 기상예보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킵니다!	기상청	072
보다 자세한 바다날씨 예보로 국민의 해상안전을 약속합니다!	기상청	076
문화재 규제지역 정보, 지도에서 쉽게 찾아보세요!	문화재청	080
계약부터 대금지급까지 계약 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소방방재청	084
우리 집이 산사태 위험지? 이제 원클릭으로 확인하세요!	산림청	088
백두대간 생태지도 따라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산림청	092
원자력안전에 국민이 감시자로 참여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096
공기처럼 물처럼 늘 우리 곁에 있는 환경방사선량, eRAD@NOW로 확인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	100
내가 투자한 회사, 공사정보를 내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한다.	금융감독원	104
국립공원 등산 시 내 체력에 맞는 탐방로 등급을 미리 확인하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	108
내가 원하는 부동산 가격정보를 알기쉽게~ 한눈에~ 돈이 되게~	국토교통부	112
3차원 지도서비스, 이제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116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는 공공저작물,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다!	문화체육관광부	120
기술표준정보, 이제 '정보은행'에서 찾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	124
농업인에게는 소득작목을! 도시민에게는 귀농정보를! 맞춤형 농촌정보를 쏙쏙~	농촌진흥청	128
영양만점 식품 정보공유로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농촌진흥청	132
산·유적지·동식물 안내 내비게이션, 등산이 이제 더 즐거워집니다.	산림청	136
디자인어, SNS로 지식재산권과 소통하다.	특허청	140
언제 어디서든 신고하세요.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척척! 해결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	144
생활 속 민원, 주저 말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안전행정부	148
같이가요! 바꿀 수 있어요! 여가부가 소외여성의 손을 잡습니다.	여성가족부	152
나와 이웃이 함께 참여하는 안심치안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경찰청	156
탈세감시로 투명사회를! 바른 세금으로 복자국가를!	국세청	160
방위사업 3.0시대! 소통과 정보공개로 국민의 애로사항 해결!	방위사업청	164
생활 속 크고 작은 불법행위 공익신고 스마트앱으로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168
나와 관련 있는 정책, 국민신문고를 통해 참여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172

# 정부3.0 스타일!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부처간 칸막이 제거 / 협업지원 시스템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행정 구현

기관간 급식정보공유로 학생들을 식중독에서 지킨대!	식품의약품안전처	178
머리 좋은 CCTV가 차량범죄자를 잡는다!	경찰청	182
부처간 정보의 칸막이를 없앴더니 실종자 찾기가 쉬워졌어요!	경찰청	186
해외에서도 운전면허증을 쉽게 갱신할 수 있어요!	경찰청	190
채납자 숨긴 재산, 바로 콕 찍어 찾아내게!	관세청	194
공항출입정보 공유는 안전하고 빠른 여행의 지름길!	관세청	198
원산지 표시와 단속이 우리 일자리와 행복을 늘립니다.	관세청	202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신청을 위한 농지원부, 이젠 제출하지 마세요.	국세청	206
운전면허증, 신체검사 받지 않고 발급·갱신 받으세요!	복지부 / 경찰청	210
산림재해 (X제로)를 목표로 산불·산사태·병해충을 통합관리한다.	산림청	214
선박출입항중합정보시스템 개방으로 해양서비스 2NE1실현!	해양경찰청	218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합니다.	금융위원회	222
자동차 리를 사고처리, 소비자 안전이 최우선!	국토교통부	226
신선농산물 항공수출지원으로 수출업계에 희망의 숨결을 불어넣다!	농림축산식품부	230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해 여가부 - 교육부가 팔을 걷었다!	여성가족부	234
화학사고로 인한 국민불안, 부처 협업으로 해소하다!	환경부	238
식품안전정보!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42
관세청과 국세청이 손잡고 역외탈세를 차단합니다.	관세청 / 국세청	246
부처 간 소통과 협업으로 장병먹거리에 안전과 신뢰를 높인다.	방위사업청	250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재권에서 창업, 사업화까지 특허청·미래부가 협력해드립니다.	특허청	254
출원인 주소자동변경시스템으로 특허권 소멸을 없앤대!	특허청	258
죽음의 붉은 띠 적조! 다함께 손잡고 이겨낸다!	해양경찰청	262
상속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절차는 간소화~ 대상기관은 확대~	금융감독원	266
손 안의 재난상황정보, 스마트빅보드(Smart Big Board)!	안전행정부	270
미리 알고 대비하니까 범죄가 발 디딜 틈이 없다!	경찰청	274
농업기상관측망으로 날씨를 지배하니까 농산물 수확이 달라진다!	농촌진흥청	278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점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중소기업청	282

# 정부3.0 서비스센터!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중심 맞춤서비스제공 / 협업을 통한 창업기업지원 /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 새로운 정보기술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일을 통해 일어서는 당신, 「일모아」가 응원합니다  
비 오는 날! 홍수가 궁금하다면 홍수알리미를 확인하세요.  
전국호환 교통카드 한 장이면 전국 어디서나 OK!  
부동산 서류 하나로 편리하게 '일사편리' 부동산종합증명서  
농림축산검역, 계산 곳에 직접 찾아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내 형사사건? 방문NO! 전화NO! 인터넷과 모바일로 원스톱 서비스 받으세요.  
꼭 필요한 때 꼭 알려주는 알파 여성정보 지원서비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넓히고 높이고!  
해외여행 가시나요? '모바일 영사하이라인' 다문받고 안전하게 떠나보세요.  
나에게 필요한 생활법령정보! 이제 맞춤형으로 찾아보세요.  
조달물자 대금납부, 은행에 가지 않고 가상계좌로 쉽고 빠르게!  
이제 행정심판이라면 청구에서 재결까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해결하세요.  
집배원이 전국 방방곡곡!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를 배달한다!  
복잡한 기업행정은 이제 기업지원 통합포털 G45에서 하세요!  
기술지원 원하는 중소기업 1379 출연연구소들이 원스톱 상담!  
중소기업, 관세청 FTA 컨설팅을 받고 해외수출이 늘어났어요!  
납세담보 면제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의 새 출발의 꿈을 응원한다.  
사업계획에서 마케팅까지! 농축식품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프로그램 실시!  
창업초기 중소기업, 이제는 공공조달시장으로 오세요!  
아이디어만 가지고 오세요, 특허청이 창업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선 채용, 스마트폰으로 OK!  
탈북청소년들의 두 번째 엄마! 11 전달코디네이터 제도  
취약계층에 맞춘 기상정보 서비스가 기상복지를 실현합니다.  
청각언어장애인, 집, 사무실, 공공기관에서 수화로 민원상담하세요.  
우리 가족의 귀갓길!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로 지킨다.  
수신을 원신지,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하고 안심하고 드세요.  
스마트폰 바코드 App으로 안전한 수입식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전세계 하늘 길에서 우리의 기상정보로 안전하게 여행하세요!  
휴대전화 속 인간문화재와 함께 우리 소리 한 소절을~  
스마트 폰이 나의 문화유산 해설사!  
시각장애인의 글자 도우미, '보이스아이 코드'  
산행정보와 조난신고 등을 내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고용노동부	288
국토교통부	292
국토교통부	296
국토교통부	300
농림축산식품부	304
법무부	308
여성가족부	312
여성가족부	316
외교부	320
법제처	324
조달청	328
국민권익위원회	332
우정사업본부	336
미래창조과학부	340
미래창조과학부	344
관세청	348
국세청	352
농촌진흥청	356
조달청	360
특허청	364
고용노동부	368
통일부	372
기상청	376
국민권익위원회	380
안전행정부	384
해양수산부	388
관세청	392
기상청	396
문화재청	400
문화재청	404
문화재청	408
국립공원관리공단	412

t h e  
**first**  
chapter

# 활~짝! 정부3.0!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방 / 국민참여 민·관협치

정부가 아닌 국민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  
국가 공공기관이 갖고있는 공공정보 및  
데이터를 사실 그대로 개방합니다.  
공공사업, 식품, 교통, 지리, 기상 등  
평소 궁금하고 필요로했던 정보를  
이젠 편하게 제공받고, 제공받은 데이터로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고...  
불편사항이나 좋은 의견도 제시하고...

이젠 국민 모두가 활~짝 열어갑니다.  
활~짝! 웃어라! 우리의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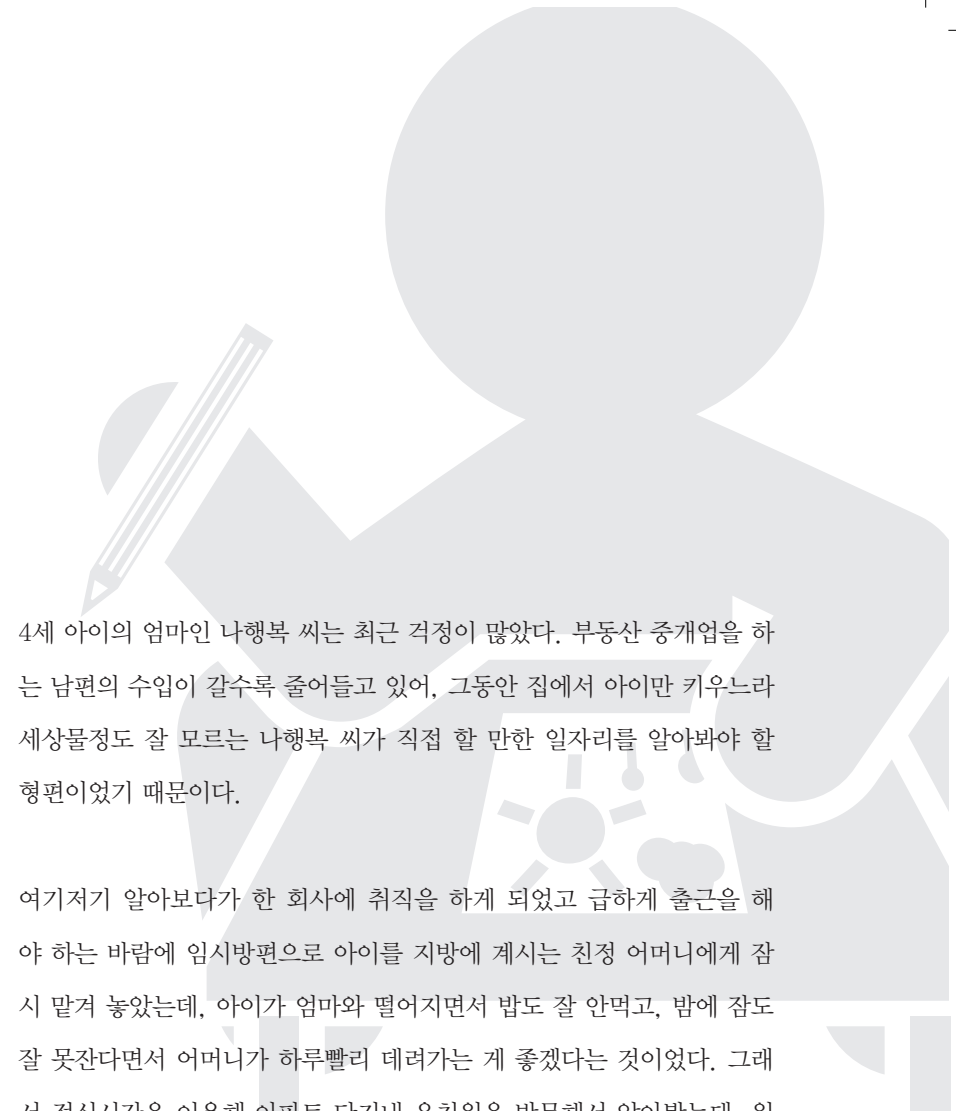
# 유치원알리미, 학부모 실질 부담금 최초 공개!

정보공개 · 교육부



우리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데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가 얼마인지...  
교육은 어떤 내용을 받는지...  
꼼꼼히 알아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시다구요?





4세 아이의 엄마인 나행복 씨는 최근 걱정이 많았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남편의 수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그동안 집에서 아이만 키우느라 세상물정도 잘 모르는 나행복 씨가 직접 할 만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급하게 출근을 해야 하는 바람에 임시방편으로 아이를 지방에 계시는 친정 어머니에게 잠시 맡겨 놓았는데,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면서 밥도 잘 안먹고, 밤에 잠도 잘 못잔다면서 어머니가 하루빨리 데려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을 방문해서 알아봤는데, 원비가 너무 비싸 보낼 엄두가 나질 않았다. 직접 부담해야 할 원비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지... 주변 유치원들을 꼼꼼히 알아보고 보내야겠는데, 좀처럼 시간을 낼 수도 없고 직접 알아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우연히 TV를 보다가 교육부에서 8월부터 유치원알리미를 통하여 실제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 원비현황과 정규과정 외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 특성화활동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공시한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 '이번 공시부터 유치원비를 학부모의 실질부담금과 국가부담금을 구분 · 공표하게 해 과거 자료와 달리 실제 학부모가 내는 비용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공시하는 유치원 특성과 활동현황을 보면 만 5세 기준으로 원아 1명당 특성화 활동비가 사립 3만8천784원으로, 공립은 3만3천551원이다. 주당 운영횟수는 사립이 6.2회, 공립은 3.9회 등이다.' ('13.9.2, 연합뉴스)

그래서, 곧바로 유치원알리미에 접속하여 유치원 원비현황을 검색해보니, 학부모 부담금과 정부지원금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비가 전국평균을 기준으로 국 · 공립은 대략 월 7,800원에서 13,300원이 소요되고, 사립유치원을 보낼 경우에는 월 19만1,000원에서 19만3,000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치원별로 특성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의 상세한 정보도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었다. 결국, 나행복 씨는 유치원알리미 덕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마음에 드는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었다.

특히, 유치원 원비를 학부모 부담금과 국가 부담금을 통합하여 공시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금년 9월부터는 학부모 부담과 국가 부담금을 분리하고, 방과 후 과정 특성화활동 운영현황에 대한 세부공개도 추가 공시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실제부담금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치원알리미 원비현황 중 교육과정 교육비 부분 공시화면

군 환경정화기술 공개 하여  
민간사업 쑥쑥~  
해외시장 개척 쪽쪽~

정보공개 · 국방부



국방부가 환경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적한  
국제적 수준의 기술 및 노하우를  
민간사업에서 활용할 수는 없을까?

국방부는 반환 미군기지 중 국내 환경오염기준을 초과한 17개 기지에 대해 2008년 2월~2012년 8월까지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완료하였다.

정화사업은 국내 환경 전문업체에서 오염치유를 하였고, 환경부에서 인증한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염정화완료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걸쳐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부지로 재탄생시켜 환원하는 프로젝트였다. 정화기간 중에는 환경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대표, 언론을 대상으로 약 30여회 걸쳐 정화과정 공개와 현장 설명을 실시하였다.

보통 수십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환경정화시장 규모에 비해 총사업비가 5천억원 규모이고 기 집행된 사업비만도 2천억원이 되는 이번 군 환경정화사업의 집행 그 자체가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크다.

첫째는 그 어떤 사업보다 방대한 규모이며, 둘째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정화사례이고, 셋째는 국제적 수준의 다양한 기술, 공법, 노하우가 집적 되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이를 민간에 개방할 경우 첫째, 다양한 사례와 공법, 노하우 등이 고스란히 민간에 전파되어 국내 환경정화사업과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둘째, 잔여 물량에 대비 첨단기술이 개발되고 취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도 크게 기대된다.

구체적 사례로는 반환미군기지 토양오염 복원사업을 맡아 수행한 경험을 밑거름으로 GS건설은 국내 건설사 중 첫 해외 토양복원사업을 수주(6,800만 달러)하여 세계 토양오염 복원시장 시공자격 확보 및 추가 사업 참여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였고, 롯데건설 및 (주)비제이씨 등 토양정화 관련 특허와 신기술 개발 등 민간전문업체의 환경특허 및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바 있다. 이는 특히 국내 토양오염정화사업이 미진한 상태에서 향후 녹색환경의 중요성으로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정화사업의 민간시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연간으로는 약 9.6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약 99조원의 신성장 시장 창출 및 민간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또한, 그동안 축적된 군의 환경정화사업에 대한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는 국내 환경정화기술 발전과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 일자리 창출효과 : 향후 3천억원 정화사업시 연간 약 9.6만여명의 일자리 창출**

- $96\text{명} / \text{억} \times 3,000\text{억} = 288,000\text{명}$ ,  $288,000\text{명} \div 3\text{년} = 96,000\text{명} / \text{년}$

**+ 민간시장 규모 : 약 99조원**

- 국내 유류 사용량 : 군 1% 이하, 민간 99% 이상
- 국방분야 환경정화사업 발주총액 : 약 1조원
- 민간시장 : 약 1조원  $\times$  99배 = 약 99조원

반환된 미군기지는 정부의 환경오염정화를 통해 안전한 토지 상태로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는데 특히 춘천 도심 한복판의 캠프 페이지가 올 6월 전면 개방되어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며, 내년 4월 개방을 목표로 부산시에 위치한 하야리아 기지는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토양세척

#### + **환경정화사업 • 기술의 민간개방을 통해 국민들에게 어떤 것들이 좋아지는지 정리한다면?**

먼저, 국방부의 환경정화정책이 과정에서부터 공개됨에 따라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술을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기술자들의 기술개발 소스도 다양해집니다. 또한, 민간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일자리창출효과 및 반환된 토지의 편의시설로의 활용을 통한 복지효과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로 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함께 떠나는 여행,  
내가 타고 가는 전세버스는  
안전할까?  
더 이상 노심초사 하지 마세요!

전세버스 정보,  
미리 체크하면  
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1-3 정보공개 · 국토교통부





가을이 깊어갈 즈음,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으로 조 회 요청서가 물밀 듯이 들어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근무시간이 끝나 갈 때 즈음, 한 초등학교 직원이 정말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학교직원** : 내일 아침 수학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운전자 한명이 갑자기 감기몸살로 운전을 못하게 되는 바람에 급히 운전자와 차량이 바뀌게 되었어요? 어떡하죠?

**담당직원** : 당황하지 마시고요, 새로 배정된 운전자와 차량정보를 적어서 조회요청서를 보내주세요.

**학교직원**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 드릴게요.

**담당직원** : 선생님! 확인 결과 해당 운전자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차량이 점검기관이 만료되었네요.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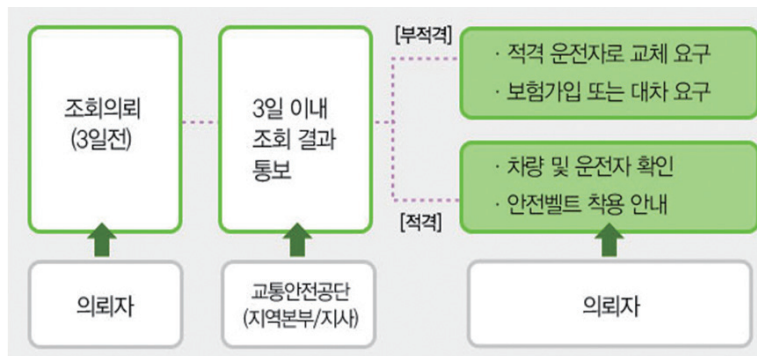
**학교직원** : 확인하지 않고 가면 큰일 날 뻔 했네요.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다른 차량 구할 때 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학교에서는 새로운 차량정보를 보냈고, 확인결과 문제가 없는 차량임을 학교에 통보해주었다. 그 다음날 아침 해당 직원이 다시 전화를 해 덕분에 학생들이 무사히 출발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했다. 기관이 가지고만 있던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 되면서 국민 안전을 지켜준 순간이었다.

국토부는 경주 남사재 관광버스 추락사고(사망 18명) 등 사고가 나면 여러 명의 사상자를 발생하는 전세버스 교통 사고 예방 대책을 고심하던 차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운전자 안전정보와 차량 안전정보를 더하여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제공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시행 초기 체험학습 등 전세버스 이용이 많은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처음 시도한 2010년에는 정보조회 요청이 1,113건에 불과하였다. 이듬해 교육부와 공식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제공을 반대하는 전세버스 사업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성하면서 2013년에만(11월까지) 무려 70배가 증가한 78,320건의 정보조회 요청이 있었다. 568,095명의 운전자 중 5,154명의 부적격 운전자와 368,871대의 차량 중 6,237대의 부적격차량을 통보해 주었다. 이 제도 도입 이전인 2009년에는 전세버스 사망자가 72명에 달했으나 2013년 11월 현재 20명(잠정)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서비스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도 안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예정이다.



정보제공 프로세스

내차의 연식은? 압류나 저당은?  
자동차검사일자는?  
자동차세는 모두 납부했나?  
정비는 언제 받았나?  
보험은 언제 가입했나?  
한번쯤은 궁금했지만 그동안 어떻게  
알아보아야 하는지 답답하셨죠?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이력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1-4 정보공개 · 국토교통부

과거 대다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위와 같은 질문을 받거나 궁금증이 나면 잠시 당황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비치된 “자동차등록증”을 꺼내 본다. 그러나 손에 든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을 등록할 당시의 상태로 머물러 있어 최근 정보를 알 수가 없어 “보험가입증” 또는 “할부이용계약서”등을 뒤져서 꺼내보고 서류에 적혀 있는 고객센터로 전화하기 일쑤이다. 그래도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면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는 등록관청 민원전화를 통해 문의를 시도하고 자동차세, 성능상태, 정비이력 등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 받지 못하여 예전 거래했던 중고차 매매상사나 소재지 세정 공무원에게 또 다시 전화를 시도하다가 문득 이런(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뭐 별일 있으면 관련 기관에서 연락주겠지! 뭐... 자동차 참 어렵네~” ) 생각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이 보다 손쉽게 자동차관련 생애주기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소통의 편의를 위한 정보연계체계를 포함한 자동차 생애주기(제작에서 폐차까지)이력을 공유하고 개방할 수 있는 정부3.0의 기조와 동일한 “자동차 토털이력정보 서비스”라는 정보의 협력 · 소통 · 공유 · 개방의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완료하였다.

✚ 국토교통부(제원, 소유권, 압류, 저당정보), 교통안전공단(정기검사 이력), 제작사 · 정비업체(정비이력), 보험개발원(사고이력), 행안부(자동차세), 매매업체(성능상태기록)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및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현재까지 221만 여건('12년 : 108.8만건, '13년 : 112.7만건)의 정보를 대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약 165억/년) 발생 방지 등 국민편익 증진시키고 있다.

✚ 자동차 민원행정 BPR 보고서 · (국토해양부, 2008년도) 참조 : 자동차관리법 위반관련 지방세외수입(1,146억 원, 행안부, 04~06년 평균) × 스마트폰 보급률(41.2% = 2000만대/4858만명) × 승용차 보급률(35% = 1700만대/4858만명)



자동차토털이력서비스 운영체계

더불어 최근(13.12.1)부터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및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정비이력과 성능상태점검기록이 추가로 제공되어 믿고 사고파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단순 정보제공이 아닌 민원업무를 연동하여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압류내역 조회 후 압류해지납부가 가능하도록 민원서비스를 연동 제공할 예정이며 정비된 부품이 중고부품인 경우 인증여부 등을 제공하도록 추가적인 부처 칸막이를 제거하여 연계하는데 지속적 노력을 할 예정이다.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음식점창업을 계획하는 분이라면  
외식업경기지수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현실을 알고, 미래를 살피며’  
성공적인 창업가’로 거듭나세요!



무작정 창업은 NO!  
외식업경기지수에  
먼저 귀 기울여보세요



### ‘창업희망자 K모씨의 이야기’

지난 달 은퇴하고, 음식창업을 희망하는 1인입니다. 주변 지인의 말을 들으니, 요즘 00업종이 뜬다는데, 무작정 창업할 수는 없고...투자비용이 얼마데,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창업설명회랑 창업박람회도 가보고, 돈 들여 컨설팅도 받고. 그런데 웬지 창업하면 다 성공할 것 같아... 이 느낌 맞는 걸까요?

정확한 건지 믿을만한 건지... 00업종을 창업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 ✦ 잠깐! ‘11년 기준 폐업한 외식업체수가 18만개에 달한답니다.

그런데 무작정 창업할 수는 없죠! 업종별 외식업경기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3/4분기 한국외식업경기지수가 발표한 결과를 살펴볼까요?

외식업경기지수 72, 9분기 연속 80선 아래... 방사능 우려에 00식당 직격탄 00류 전문점이 68.78로 음식점업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태 여파로 소비자들이 00 소비를 꺼리는 데다 여름철 비수기까지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중략]

이런, 외식업경기지수에 따르면 00창업은 요즘 창업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혹시, “한국외식업경기지수”를 처음 들어보셨나요?

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국내 외식산업 동향을 지수로 표현하여 한식·치킨·제과·서양식·음료 등 각 업종별 경기를 지역별/상권별 등으로 분석하여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한 청년, 전직 전업주부, 갓 은퇴한 베이비부모 세대까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음식점 창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외식사업자 60만, 음식점 창업자수 18만명(12년 기준)에 달하는 정보수요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때에 맞춘 발빠른 정보를 제공코자 개발한 것이 “한국외식업경기지수(Korean Restaurant Business Index)랍니다. 외식업소의 매출, 고객수, 영업이익 등 핵심요소들의 변화를 분석하여 외식업계의 성장과 위축의 정도를 수치화하여 나타내는 지표이기에 국내 외식산업의 경기동향과 향후 전망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업경기지수는 K씨와 같은 예비창업자들에게 객관적인 현실을 반영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무작정 창업이 아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외식업이나 식품제조업 등의 종사자들에게는 현명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지요.

산업의 질적성장과 미래경쟁력은 ‘정보의 예측가능성’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외식업경기지수는 국내 외식산업정보의 질적 성장에 한축을 더했다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3.0에 앞선 발빠른 공공정보로 거듭날 것입니다.



# 농지가격 현장조사는 No! No! 집에서 어디든지 알 수 있어요~

1-6 정보공개 · 농림축산식품부



귀농 · 귀촌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농지가 얼마인지 모른다고요?  
소유하신 자금으로 어디 농지를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알고 싶다고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민을 위해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한다는 “정부3.0”의 추진차원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농지 실거래가격」을 행정구역별, 이용상황별로 분석하여, '13년 11월부터 온라인 공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 ✦ 1 \_ 귀농 · 귀촌을 준비하는 베이비부머

퇴직을 준비하는 P씨는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여유롭게 생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어렸을 때 부모님 어깨 너머 배운 농사기술을 활용하여 주말마다 정성을 다해 가꾼 텃밭을 보며 퇴직 후 농사를 짓기로 결심하였는데, 도대체 농지구입에 어느 정도 자금이 소요 되는지? 귀농 희망 지역의 농지가격 수준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전국 부동산 사무소에 일일이 전화하여 알아 볼 수도 없고,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도 전국의 농지가격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는 데가 없어 전전긍긍하며 귀농의 계획마저 시들해지고 있다.

## ✚ 2 \_ 농지를 매매하려는 농지소유자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L씨,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유 농지를 처분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소유 농지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공시지가는 알 수 있지만 실제 거래가격 수준이 궁금하여 애를 태우고 있다.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는 이런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농지은행 포털사이트(<http://www.fbo.or.kr/>)를 통해 전국 농지 실거래가격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농지 실거래가격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개별성이 강한 토지의 특성으로 시장왜곡 현상(기준가격 역할로 가격상승 유발) 발생 및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민감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모색, 협의 후 읍면동별 거래건 및 평균가격, 최고·최저가격만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면, P씨처럼 귀농하고자 하는 도시는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귀농지역의 농지가격 시세 정보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농지 구입 계획을 세울 수 있어 귀농·귀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지 가격사정에 어두운 농지 구입자의 권리 보호와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공정하고 투명한 농지가격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지은행
농지은행

사업소개
사업현황
매출
농지가격
자료실
계산서

[로그인](#)
[회원가입](#)
[이메일](#)

푸른 꿈, 푸른 미래  
농지은행의 꿈, 당신의 미래입니다.

## 농지가격

농지가격 및 거래현황

## 농지가격 및 거래현황

[▶ 농지가격](#)
[▶ 농지가격 및 거래현황](#)

제공되는 농지 싼가격가격은 \*부동산가격계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현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 공개한  
 싼가격으로, 즉 미공시이 농, 밭, 과수원인 농지입니다.

< 이용시 주의사항 >

- 「도시지역」 농지 및 통상적인 가격 수준을 벗어난 특수거래의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농지는 개별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농지 가격 적용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강원도

출원시 출원시

조회기간 2010

년 2013

월 년

검색 검색

### ■ 강원도 출원시 조회결과

(단위: 원/㎡)

지역	농업지역내						농업지역외					
	농			밭			농			밭		
	원가	최고가	평균가	원가	최고가	평균가	원가	최고가	평균가	원가	최고가	평균가
관내	6,489	180,800	4,005	200,501	-	1,839	403,226	1,477	603,000	60,277	60,277	-
	42,904	100	49,381	48	-	68,165	872	63,680	2029	60,277	1	-
도면	-	-	-	-	-	-	3,123	75,980	3,956	114,645	-	-
	-	-	-	-	-	-	36,375	19	30,311	74	-	-
동선면	17,927	180,800	18,692	76,517	-	5,962	206,946	3,071	397,649	-	-	-
	59,621	14	45,056	7	-	59,171	197	59,028	463	-	-	-
신동면	-	-	-	-	-	-	24,217	175,409	17,744	310,945	-	-
	-	-	-	-	-	-	63,670	59	65,467	87	-	-

농지은행
농지은행

사업소개
사업현황
매출
농지가격
자료실
계산서

[로그인](#)
[회원가입](#)
[이메일](#)

다양하고 복잡한  
통신관련 정보!  
그동안 정보 찾기가  
쉽지 않았죠?

요금 추천받고  
통신비 다이어트  
스마트초이스!



1-7 정보공개 · 미래창조과학부



과거에는 음성과 문자 위주로 구성되었던 표준요금제가 최근 들어 정액요금제,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전용요금제, 선불, 결합상품 등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로 진화하였습니다. 선택권 확대라는 장점도 있지만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찾기는 더욱 어려워져 고민을 토로하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분산되어 있는 통신관련 정보를 통합·체계화하고, 이용자들이 본인의 이용패턴에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작년 2012년 12월, 통신요금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를 오픈했습니다.



스마트초이스의 핵심 서비스는 ‘요금제 추천 서비스’입니다. 이용자가 본인의 연령과 서비스 종류, 약정기간, 월 평균 이용량 등을 입력하면, 가장 저렴하게 쓸 수 있는 통신 3사 및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평범한 4인 가족이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추천받은 요금제로 변경 시, 월 37,288원, 일 년이면 약 44만 8천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초이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월 평균 이용량 정보를 취합하여 요금제는 물론 실제 월 평균 요금까지 시뮬레이션 해주고 있습니다. 약정기간 까지 반영하여 할인된 총 금액을 계산해주기 때문에 실제 요금제 변경 시 참고하기 용이합니다.

2013년 8월, 미래부는 이용자가 지난 3개월간의 정확한 사용량을 토대로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한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실제 사용량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스마트초이스에 업로드하면 적합한 요금제가 추천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더불어 HTML5 기반의 모바일에 최적화된 스마트초이스 모바일 홈페이지(m.smartchoice.or.kr)를 오픈하여, 이용자가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스마트초이스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했습니다.

현재 스마트초이스에서는 요금제추천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통신 유료방송 미환급액 및 명의도용, 모바일상품권, 본실 도난 단말기 조회 서비스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조회 서비스를 스마트초이스 한 곳에서 조회(Single Window)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을 추구하고 있으며, 통신 분야 전문가들의 콘텐츠와 통신 뉴스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재방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통신정보와 관련한 원스톱서비스를 추구한 결과, 사이트를 오픈한 이후 8개월간 일평균 약 3,000명이 방문했고, 누적 인원은 95만 명 정도로 많은 이용자가 스마트초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스마트초이스

가계 통신비 절약

# 통일법무에 관한 모든 DB! ‘통일과 법률’에서 검색하세요~

1-8 정보공개 · 법무부



이산가족 상속,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상담은 어디에 해야 할까?

### 통일에 관한 모든 법무자료 검색은 어디에서 해야 할까?

그동안 통일에 대비한 남북법률 통합 관련 연구가 각부처(법무부, 통일부, 법제처, 통일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관련 연구성과 공유가 안되고 중복연구 등 낭비발생 우려가 있었으며, 남북관계 및 통일관련 법률자료는 자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학계 및 실무전문가들도 자료 입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연구의 저변 확대가 어려운 게 그동안의 현실이었다.

이에 법무부 통일법무과에서는 정부부처 및 민간 연구단체, 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관련 자료를 쉽게 공유하기 위해 통일법무 DB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지난 8월 20일 [통일과 법률]을 오픈하였다.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통일부,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14개 통일법무 관련 유관기관과 민간 연구단체, 학계 등에 시스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10,000여건의 자료수집과 1,250건의 원문을 공개(나머지 9,000여건은 목차 공개)하는 등 통일법무자료를 집대성 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시스템에는 통일부,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14개 통일법무 관련 유관기관과 민간연구단체, 학계 등에서 발간한 자료 10,000건이 등재되어있고, 1,250건의 원문을 공개(나머지 9,000여건은 목차공개)하는 등 통일법무자료를 집대성 해 두었다.

아울러 문서제목, 주제어, 내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독창적인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갖추었으며, 정부부처 및 민간 연구단체, 학계에서도 관련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는 차별적 기능 탑재로 민·관 합동 융합연구 인프라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이산가족 상속,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상담은 어디에 해야 할까?

최근 대법원에서 북한주민 4명이 한국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달라며 제기한 친생자 관계 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리는 등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 관련 분쟁과 북한주민이 상속, 유증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의 보호와 관리 등을 위하여 [남북 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다.



이와 관련한 각종 신고, 신청, 허가 등을 신속히 접수, 처리하고 상담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불어 늘어나는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적 고민에 대한 상담 등도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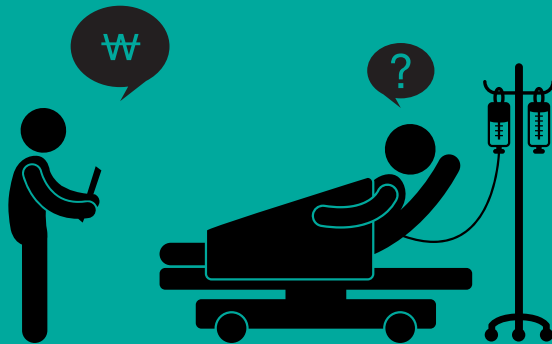
그 결과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관리 민원은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등록, 결혼과 이혼, 국적, 출입국 등 정착에 필요한 법적 문제, 북한 내 발생한 민형사사건 처리 등 법적상담도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체감도를 제고하였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통일부, 법제처 등 정부부처간 협력하여 통일 관련 법률자료를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개방 공유하고, 정부부처간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법률통합 연구를 더욱 활성화 하며,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의 민원에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3.0’ 시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갈 것이다.



#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한 곳에서 확인 가능!

1-9 정보공개 · 보건복지부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이 병원이  
진료비가 비싼 편인지, 저렴한 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검사라면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비가 저렴한 병원을 선택해서  
치료받고 싶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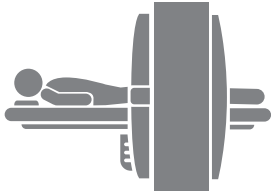


‘13년 이전에 캡슐내시경 진료를 받았던 어느 환자의 생각이다. 캡슐 내시경은 알약처럼 삼키면 위와 대장을 따라 내려가면서 소화기 내부를 촬영하는 장비다. 기존 내시경보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 77만원~최고 146만원으로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이뿐만 아니다. 온 몸의 암을 찾아내는 정신 양전자 단층촬영(PET)을 하면 최고 155만원이 든다.

같은 검사라면, 진료비가 가장 저렴한 곳은 어디일까? 앞으로는 이러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진료 항목에 대해 가격비교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국내에 의료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 비급여 가격비교 사이트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는 비용인 △상급 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료(PET)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13.1월 공개) 및 △MRI 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양수염색체검사료 등 4개 항목(‘13.9월 공개)을 비교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전국 43개 상급종합병원이다. 단, 치과임플란트료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치과(대학)병원 8개를 더 추가하였다. 이로써, 비급여 진료비용 중 총 10대 항목 32개 세부항목을 공개하였다.

심사평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3월부터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시범조사를 하였으며, 정부 및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개할 세항목을 정하여 2012년 10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공개하기로 확정하였다. 시범 조사한 자료에 대한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2013년 1월에 6개 항목 공개 이후 9월에 4개 항목을 심사평가원과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하였다.



상급병실료차액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에 따라 1인실은 최소 8만원에서 최대  
48만원까지 6배, 2인실은 최소 5만원

에서 최대 21만5천원까지 4.3배 차이를 보였다. MRI진단료는 뇌혈관의 경우 최소 28만원에서 최대72만원까지 2.6배, 뇌의 경우 최소 37만8천원에서 최대 77만7천원까지 2.1배 가격차이를 보였다. 치과임플란트료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약458만2천원까지 4.6배 차이를 보였다.

병원별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여야 하나 그 형태가 다양하여 일반인이 찾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비급여 진료비용을 찾기 위해서는 최대 9단계까지 홈페이지 이동경로를 거쳐야만 하는 곳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상급종합병원 대상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에 고지 방식을 건강보험법 고시의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따르도록 표준화하고 구체적인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쉽게 고지할 수 있고 국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분야로 분류하고, 시술료, 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토록 권장하여 전체 비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료기관 내의 비치 장소를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하여 안내판을 설치하게 하고, 홈페이지 첫화면에 배치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여 찾기 쉽도록 하였다.

향후 전체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하고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감독할 계획이며, 심평원을 통한 가격공개에 박차를 가해 공개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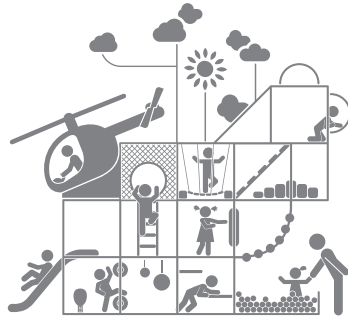


“예전에는 우리 아이 보낼만한 좋은  
어린이집을 찾으려 해도 어린이집마다  
평가인증 받은 시설인지 여부만 표시되어  
있어 별 도움이 안되더라구요...  
게다가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시설이었구요... 그런데 이제는  
어린이집별 평가인증 점수가  
평가영역별 점수까지 상세히 나와있어  
많은 도움이 되더라구요”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결과!**  
이제 **아이사랑보육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1-10 정보공개 · 보건복지부



“동네 주변 어린이집들을 검색하고 나서 평가인증 결과를 상호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우리아이 보낼 어린이집 고르는데 유용한 자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2013년 9월6일부터 평가인증 결과공표 시행으로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http://www.childcare.go.kr)) 및 평가인증알리미([info.childcare.go.kr](http://info.childcare.go.kr))를 통해 누구나 쉽게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만을 조회할 수 있어 어린이집 선택에 활용 가능한 정보가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결과공표 시행 이후 인증 여부 외에 총점 · 영역별점수와 종합평가서 등 개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상세정보는 물론이고 지역별 · 유형별 · 기수별 평균점수 등 어린이집 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2005년부터 평가인증제도 시행으로 어린이집 전반의 보육서비스 수준 및 전문성 향상 등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가 극히 제약되어 국민들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 및 특징 등 자세한 정보를 접할 길이 없었으며, 어린이집 입장에서라도 해당 시설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기에 부족하였다. 또한 가까스로 커트라인을 통과하든 고득점을 받든 간에 단순히 “인증어린이집” 으로서만 공개되어 어린이집 간 서비스 경쟁을 이끌어 내는데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여 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어린이집 간에 선의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자 평가인증 결과 공표를 추진하게 되었다.



금번 평가인증 결과공표 시행으로 국민들이 자녀를 보낼 어린이집을 부모의 기준으로 보다 꼼꼼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 향상 노력을 자극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어린이집 위치로 찾기 화면 \_



맞춤형 어린이집 찾기 화면 \_



시설별 공개 세부내용 \_



매년 열리는 우리 고장의  
행사·축제에는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들고 과연 수익이 나는지  
궁금하시죠?



우리고장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1-11 정보공개 · 안전행정부



분당에 사는 A씨는 주말을 이용해 가족들과 함께 1박 2일로 “화천 산천어축제”에 참가해 얼음축구, 썰매타기 등 어릴 적 추억이 되살아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A씨는 축제기간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정리하면서 갑자기 축제를 위한 행사요원 인건비, 시설물설치비, 각종 행사 및 기타 부대행사 경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 입장료를 받아서 그 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있을까 등이 궁금해졌다. 더구나 최근 언론 등에서 지자체의 행사·축제가 비숙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예산낭비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도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알아보고 싶었다. 그런데 지난 9월부터 주요 행사축제의 비용과 수익을 공개한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A씨는 “화천 산천어축제”의 비용과 수익을 검색해 보았다.

‘화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보니 화천군에서 2012년 개최한 행사·축제에 대한 주요내용과 각 행사·축제에 투입된 원가회계 및 사업수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화천 산천어축제에 투입된 인건비, 행사직접비, 홍보비 등 세부비용(총 27억원) 및 사업수익(보조금 수익 4억, 입장료 수입 20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입장객 수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축제 전반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서 그 인기와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정부3.0 시대에 맞게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2013년의 지자체 공개대상 행사·축제는 예산집행액을 기준으로 광역단체 1억원, 기초단체 5천만원 이상으로 건수는 1,700여건(전체 개최건수의 25%), 집행액은 5,800여억원(전체 집행액의 84%)이다.

2014년부터는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를 대상으로 점차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항목도 2013년에는 인건비, 행사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7개 항목이었지만, 2014년부터는 비용을 보다 세분화해 총 1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 17개 항목** : 인건비, 행사직접비(인쇄비,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운영비), 대외홍보비(홍보 및 광고비), 시설장비비(행사관련시설비, 임차료), 참가자보상비(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비), 감가상각비, 기타

아울러,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개최되는 행사·축제의 대부분이 주민화합,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의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활력소로 기능하고 있음에 따라 목적·내용별로 유형화\*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 유형화**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우호 친선·협력, ⑥ 기타

또한, 안전행정부에서는 지자체홈페이지에서 공개한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중 일정규모 이상(광역 5억, 기초 3억 이상) 행사·축제에 대하여 안전행정부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spa.go.kr>)를 통하여 통합 공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의 원가회계정보 공개는 궁극적으로 경쟁력 있는 행사·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순기능을 최대한 살려나가고 불요불급한 행사·축제를 줄여 예산절감은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방학 중 우리 아이가  
참여할 만한  
청소년 캠프 관련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제 **youth.go.kr**  
한 곳에서 **비교 검색**하세요

7-7 맞춤형서비스 ·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각종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어도 정보를 알 수 없거나 알았다고 하더라도 모집이 종료 되어 참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믿을 만한 기관·단체인지에 대한 문의 창구도 마땅치 않아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도 운영 하는 곳에 문의할 수 밖에 없어 안전이나 과거 문제 발생 이력 등 활동 참가 여부 결정을 위한 중요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 7월 태안 안면도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안전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의 종합 제공과 이러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더욱 증가 하게 되었고, 기존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의 기능 개선을 통해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 기존에 청소년활동 정보를 사이트 운영 관리자가 취합하여 등록하던 방식에서 청소년시설·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자가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자료를 실시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네이버,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청소년활동'으로 검색 시 우선적으로 사이트가 노출 되도록 하여 수요자의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청소년 및 학부모 등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댓글쓰기’ 등을 통해 활동 소감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참가자들이 선택 시 참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취합된 활동 정보의 관리도 강화하여 전국 16개 시도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활동 운영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프로그램의 안전성 등 세부 내용을 모니터링 하여 청소년, 학부모 등 수요자의 전화 문의 등 질문 시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 안내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여름·겨울방학 등 청소년활동 집중 시기에 맞추어 방학 중 청소년 활동 맞춤 정보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 정보 제공 사이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를 청소년과 학부모는 ‘정보 획득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 운영 시설 및 기관에게는 ‘활동 홍보의 장’으로 활용되게 하여 명실공히 청소년활동 관련 대표 사이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조용하던 우리 동네에  
공장이 들어온다는데  
혹시 환경피해는 없을까?



환경영향평가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작년 한 해 환경부는 4,518건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큰 규모의 계획이나 사업이 전국적으로 연간 오천 건 가깝게 새로 생겨나는 셈이다. 조용하던 우리 동네에 공장이 들어온다는데 환경피해는 없을까?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쉽게 알 수 있을까? 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업무 시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또한, 천 페이지가 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정보공개청구하고 보름간을 기다리는 수고와 비용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다.

이럴 때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다른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우리동네 인근의 사업현황을 검색할 수 있고, 로그인 없이도 환경영향평가서 원문을 조회하여 어떤 환경영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도 바로 이야기할 수 있다.

환경부는 문서고에 쌓여있던 환경영향평가 정보를 손쉽게 보관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인터넷기반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과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지리정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시스템의 활용으로 평가서 작성 및 협의기간 단축, 평가정보의 활용, 평가서 보관비용 절감 등 연간 169억원의 직접편익이 발생하고, 평가협의기간의 단축으로 산업단지 조성기간이 단축되면 연간 1조 8천6백억원의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내부이용자 위주로 제공되던 시스템은 올해부터 정보수혜를 국민들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대폭 개편되었다. 정보공개 범위를 넓히고, 정보에 접근하기 쉽게 메뉴구조를 바꾸었으며 복잡한 인증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구축된 데이터를 앱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민간에 개방하고 있다.

모바일웹 기반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신뢰를 높이고, 주민감시를 확대하여 평가기법 향상과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사업자와 국민이 시스템을 통해 서로 소통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복지국가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원문정보 구축을 위해 대기중인 문서들



DB 품질관리 용역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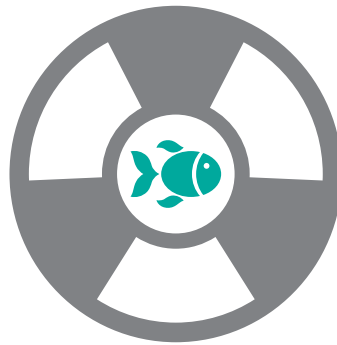


정보지원시스템 클센터 운영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11.3.11)이후  
방사능 물질이 해양에 누출되고,  
SNS를 통해 방사능에 대한 비과학적  
루머가 확산됨에 따라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일본 방사능 사고지역 주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방사능 검사결과 공개 확대'  
등 국민 안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일본 수입식품 방사능 불안감을 잡다

— 방사능 검사정보 공개 확대 —



1-13 정보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1년 3월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로 일본산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본이 출하 정지한 품목을 즉시 수입 중단하고,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은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였다.

또한, 방사능 안전관리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일본 방사능 피해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선 세습기준 강화 등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하지만 2013년 7월 도쿄전력이 기자회견을 열어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고 특히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우려가 심화되었다.

이 시기에 인터넷을 타고 비과학적 루머가 확산되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일본산 수산물 불안의 여파로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가중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결과를 매일 공개하고 검출 수치를(기준에는 적합여부만 공개) 포함하여 공개정보를 확대하였으며 주요 언론사, 소비자 단체 등 총 663개 기관에 주간단위 검사결과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 힘썼다.

또한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및 방사능 분야 전문가 15명이 Q&A형태로 정리한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45가지의 방사능의 오해와 진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 Q&A 예시

#### 방사선은 얼마나 피폭하면 위험한가?

： 일반인이 경험하기 어려운 100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선량에 의해 1,000명 중 5명이 암에 걸려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가 늘 받고 있는 자연방사선 수준인 3~10밀리시버트에서는 방사선의 위험도가 보행 중 교통사고나 물놀이중 익사사고의 확률보다 낮으며 태아의 피폭에서도 100밀리시버트 이하에서는 기형을 유발하지 않는다.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누출 사건 이후 방사능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국내 유통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한 길거리 홍보, 수산물 시식회, 민생현장(수산시장 등) 방문 등 국민과의 소통노력으로 최근 일본 방사능과 관련된 불안감이 완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방사능 피해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는 한편 검사현장 개방, 소비자단체 설명회 등을 통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부3.0 핵심가치인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일본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 발표



노랑진 수산 시장 방문



부산 감천항 수입수산물 검사현장 점검



교통체증에 답답하고,  
사고라도 날까  
늘 노심초사하던 운전,  
이제 경찰청 UTIS 내비게이션이  
운전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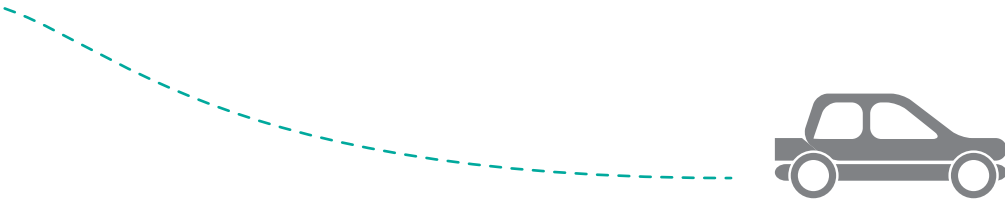
## 경찰청 유티스\* 내비

– 운전이 스마트해집니다!

1-14 정보공개 · 경찰청



**+ 경찰청 유티스(UTIS)** : 경찰청과 전국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구축하는 '첨단 교통 인프라'로, 차량과 교통정보센터간 실시간 무선 통신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함.(별도 통신비 들지 않음)



회사원 A씨는 요즘 운전할 때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낀다. 얼마 전 구입한 UTIS 내비게이션 덕분이다.

예전엔 어디가 막히는지 몰라 항상 가던 길만 다녔는데 UTIS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막히지 않는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준다.

특히, 교통경찰들이 현장에서 수집한 교통사고·행사 등 돌발 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해주기 때문에 꽉 막힌 도로에서 우회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운전하면서 짜증나는 일이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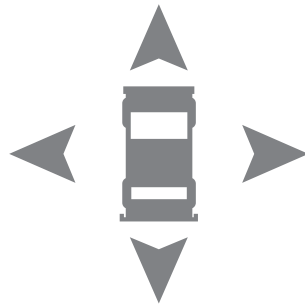
또한, 가는 길의 교통상황을 간단하게 도표로 제공해줘 지도나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주부 등 여성운전자들도 쉽게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 편의 중심으로 서비스 중이다.

현재 개발 중인 신형 UTIS 내비게이션은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교통정보센터에 접수를 해준다고 한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신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상을 당해도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다니 안심이 된다. 또, 내 주변 차량에도 사고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2차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다른 내비게이션이 갖추지 못한 장점이다.



아울러 조만간 기상 상황과 연계해 비가 오면 상습 침수지역이나 산사태 구간을, 눈이 오면 상습 결빙구간을 알려주는 등 나의 상황에 맞게 안전 정보를 제공해 줄 예정이다.

누구나 운전을 할 때 불편하고 힘들어서 이런 건 꼭 있었으면 하고 상상하고 바랐던 일들이 경찰청 UTIS 내비로 가능해진 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이제 운전이 편안하고 즐거워진다.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강한 집중호우가 많아지는  
여름 장마철.  
매년 반복되는 침수, 산사태,  
도로붕괴 등으로 걱정인 분  
많으시죠?



간간한 기상예보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킵니다!



1-15 정보공개 · 기상청



한여름이 무섭다 싶을 정도로 폭우가 점점 늘고 있다. 2011년 7월 26~28일 사흘 동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우면산 산사태는 속절없이 많은 인명을 앗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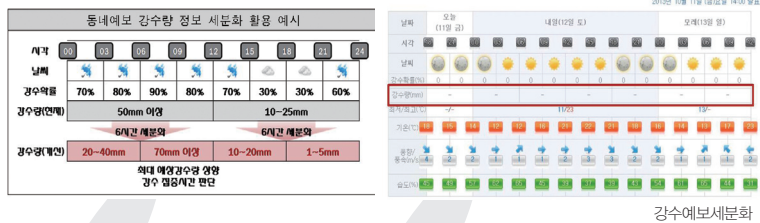
기상청은 장마철을 앞둔 지난 2013년 5월 30일부터 동네 예보의 강수량 예보 간격을 종전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고, 예상강수량 최대치도 70mm 이상까지 높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예보는 무엇보다도 강수가 집중될 시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과거에 “0시~12시 예상 강수량이 50mm 이상”이라는 예보가 나오면 12시간 내내 마음 졸이며 비 피해를 걱정해야 했던데 반해 이제는 “0시~6시 예상 강수량 70mm 이상, 6시~12시 10~25mm”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해 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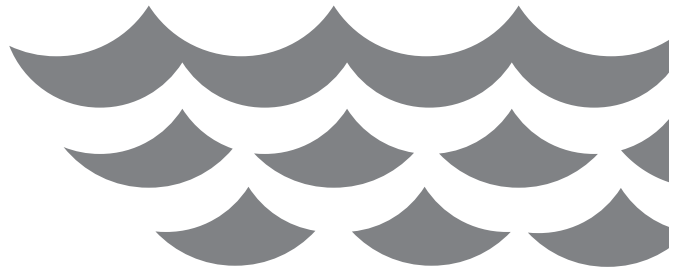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최대 예상강수량에 대한 판단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 과거 예상강수량 최대치는 “50mm 이상”이었지만 우리나라 호우 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70mm 이상”으로 개선하였다. 단순히 20mm 개선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적 세분화의 효과까지 고려하면 12시간 기준 50mm 이상에서 140mm 이상으로 3배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큰 비에 대비해 축사나 비닐하우스를 관리해야 하는 농민들이나 잦은 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처럼 상세해진 강수량 예보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상청은 “10일 예보” 서비스를 시작하며 다시한번 국민들의 기상편의를 도모하였다. 이는 과거에 +7일까지 제공되던 주간예보를 3일 연장하여 오늘과 향후 10일간의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문화·레저 활동 계획은 물론이고 농어촌 지역 수확일정이나 산업현장의 작업 계획 등 국민들의 다양한 활동에 편의를 더하고 있다.



제2의 영토,  
무한한 식량의 보고인 바다를  
지키는 건 군과 해경만이 아닙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해양기상정보로  
국민의 해상안전을 지켜갑니다.



보다 자세한  
바다날씨 예보로  
국민의 해상안전을  
약속합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0만 명 이상의 어민이 바다를 터전삼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해운 물류량과 해상레저산업의 성장 추세를 고려할 때 해상에서의 안전한 경제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해양기상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08년 5월 4일 일요일, 충남 보령시 남포면 죽도 갯바위에는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휴일의 낮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잔잔하던 바다에서 갑자기 어른 키 두 세 배만한 파도가 발생해 해안가를 덮쳐 순식간에 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사고원인은 기상해일(이상파랑)로 주로 봄철에 나타나는데 흔히 않은 현상인지라 전 세계적으로 이를 감시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술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불과 4~5년 전에도 국내 역시 이를 예측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없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기상청은 연구하기 시작했고 기상해일을 실시간으

로 감시하고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측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기상해일 발생가능성 및 예측정보를 해양경찰청 등 사고방재 기관에 문자와 핫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변과 해상 활동의 안전을 위해 기존에 4종류로 제공되던 파랑 정보에 폭풍해일에 관한 7종류의 정보를 추가하여 해양기상현상 예측정보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기상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해양기상 모바일 웹 서비스를 통해 우리국민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위성통신설비 등이 빈약한 소형 선박으로 조업하는 어민의 경우 폭풍해일의 접근 상황이나 이로 인한 파도의 상태, 위험 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받기가 어렵다. 하지만 더욱 풍성한 바다날씨 정보를 모바일 웹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조업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상청은 갑작스러운 적조현상이나 급격한 수온과 염분 변화 등 연근해 양식장에 큰 피해를 끼치는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여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3차원 해양 환경 예측정보도 새롭게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해역은 주변 강대국의 전략적 요충지이면서 어업, 해운, 해양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바다가 단순히 어업의 터전이자 뱃길이던 시대는 지나갔다. 많은 국민들이 바다를 찾고, 그 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있다. 그러기에 더욱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시대이다. 기상청의 해양기상예측능력은 전 세계 4위권에 진입해 있다. 정부3.0에 발맞춘 기상청의 선진화된 해양기상정보 확대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것이다.



폭풍해일 피해



저염수 폐사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문화재 보존지역이면 어떻게 하지?  
문화재가 어디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없을까?



문화재 규제지역 정보,  
지도에서 쉽게  
찾아보세요!



문화재는 소중하게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우리 모두의 자산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곁에서 불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정문화재 주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건물높이, 증·개축이 제한되고, 고고유적에 해당하는 매장문화재는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퇴직이후 바닷가에 펜션신축을 위해 관할군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조건부허가를 받았다. 건축예정부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물 최고높이 7.5m, 2층 이상의 건축행위가 불가하고, 조개더미 유적이 있어 발굴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원래 계획을 변경하여 1층으로 펜션을 건립했다. 게다가 유적 발굴조사비용까지 부담하여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유적훼손 원인제공자의 비용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사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재 규제지역 정보는 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 누리집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는 문화재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자체 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개방식은 정보공개 범위가 너무 작거나 정보접근이 쉽지 않아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모든 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의 구역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확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 보존관리지도서비스 (<http://gis-heritage.go.kr>)를 실시하게 되었다.



우선 각종 법령에서 문화재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모든 규제구역의 위치 정보를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게 하였고, 각 구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과 관보에 있는 고시문·고시도면, 문화재 보존대책 협의절차 등에 대한 상세내용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밖에 최신의 규제정보 갱신을 수시로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문화재의 위치, 설명, 사진 등을 모니터링하여 제공정보의 품질을 향상시켰다.

무엇보다도 크게 바뀐 것은 지도서비스에서 정보이용이 쉬워졌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고시도면에서 규제지역을 확인하거나 단순히 해당위치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항공사진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도에서 상세 규제구역까지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검색도 지번, 새주소, 공간검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한번의 검색으로 해당지역의 모든 문화재 규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도서비스에 공개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문화재 지표조사 생략이 가능하고, 유적분포지역을 미리 확인하여 사업부지에서 제외시킨다면 발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A씨와 같은 불편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감수해야만 했던 비용들을 연간 약 115억원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 참 고마운 온라인지도서비스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 계약부터 대금지급까지~ 계약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1-18 정보공개 · 소방방재청



공공기관 계약정보  
많이 궁금하셨죠?  
이제는 발주계획에서 대금지급  
까지 일련의 계약 전 과정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됩니다.





2013년 7월 15일부터 중앙부처 최초로 소방방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 일련의 계약 과정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그동안 계약 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정부행정에 불신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공기관 계약은 왜 이리 복잡한지, 계약 서류도 왜 이리 많은지’ 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한두 번쯤 있었을 것이다. 또한 사업부서나 계약 담당 부서에서는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인해서 임금을 못 받았다는 항의전화가 종종 오곤 한다.

**민원인 :** ○○업체에서 일하고 돈을 못 받았습니다. ○○업체에서 계약한 사업에 대해서 대금 지급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담 당 :** 네 저희 청 홈페이지에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시면 계약에서부터 대금지급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인 :**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나요?

**담 당 :** 아닙니다. 인증서가 없어도 클릭만 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민원인 :** 간편해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중앙부처 최초로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정보 중 하나인 계약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공개되는 정보는 소방방재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공사관련 발주계획, 입찰정보, 계약정보, 대금지급, 계약법규 및 계약서식 등으로 민간 사업자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손쉽게 실시간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특히,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평가점수까지도 공개함으로써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였다. 무엇보다 대금지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의 대금 수령 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임금체불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정부3.0이라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 가져온 변화 중 작은 하나일 뿐이다. 2013년 6월 19일 정부3.0 비전 선포식 개최 후 불과 6개월만의 일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개인의 알권리를 보장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3.0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열쇠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접속방법



계약정보시스템 조회화면



서울이라는 큰 도시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우면산 산사태!  
우리 동네라고해서 예외는  
아니겠죠?



우리 집이  
산사태 위험지?  
이제 원클릭으로  
확인하세요~!

1-19 정보공개 · 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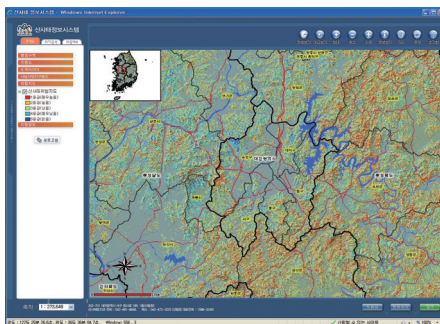


‘서울 방배동 래미안, 우면산 산사태로 아수라장’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단 번에 사로잡은 긴급뉴스의 제목이다. 바로 몇 해 전 서울시에서 발생했던 우면산 산사태 이야기다. 일반적으로 산사태라고 하면 큰 산이 있는 산간지역에서나 일어나 계곡을 휩쓸고 내려와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정도로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우면산 산사태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발생하여 나와 이웃의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귀중한 생명까지도 앗아 갈 수 있다는 실재를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사례였다.

그 날 이후 산과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나는 혹시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몰려오곤 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산사태 위험정도가 어떠한지 쉽게 알기 어려웠기에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젠 그런 불안감을 떨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위험지도 덕분이다.

산사태 위험지도란 국립산림과학원이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토양깊이, 사면경사도, 숲의 상태 등을 분석해 산사태 발생 확률을 5등급으로 구분, 사전에 산사태 발생을 예측하기 위해 만든 지도이다. 강수량이 미치는 영향 등이 반영되지 않은 종전 산사태 위험지도에 습윤지수 등 분석인자를 확대 적용하여 정확도를 향상시켰으며, 산사태 발생확률에 의한 위험등급을 세분화하여 변별력을 향상 시켰다.

또한 비가 올 경우 산사태 예측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이 있는 곳 주변의 산사태 위험정도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다. 산사태를 주의해야 하는 경우에는 노란색 불, 그리고 산사태의 위험이 매우 큰 지역에서는 빨간색 불이 켜지는 위험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산사태 위험에 따른 행동요령도 알 수 있어 이 애플리케이션 하나면 나와 내 가족이 산사태로부터 안전해 질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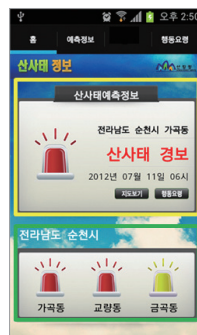
현재 운영 중인 산사태정보시스템



이뿐만 아니라 최근 산림청과 국토교통부가 협업을 통해 도시방재 DB를 연계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산사태 위험정보와 국토부가 구축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www.upis.go.kr)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도시계획 단계부터 사전에 산사태 위험정보를 반영하여 재해 발생 가능성을 파악해 보다 효과적인 도시방재계획을 수립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3.0」이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산사태 예측 애플리케이션 제공뿐만 아니라 국민이 기대하지 못했던 편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 속담처럼 모든 일은 혼자 하기 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해보며, 앞으로 기관 간 정보 공유로 보다 많은 산사태 위험 정보가 국민에게 제공되어 국민 행복이 더 증진되기를 바래본다.



산사태 예측정보 애플리케이션 – 위험 알림



산사태 예측정보 애플리케이션 – 국민 행동요령

다음 휴가는 계곡과 바다,  
유적지, 해외여행도 좋지만  
자연도 느끼며 공부도 할 수 있는  
백두대간 생태여행을  
아이와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백두대간 생태지도 따라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1-20 정보공개 · 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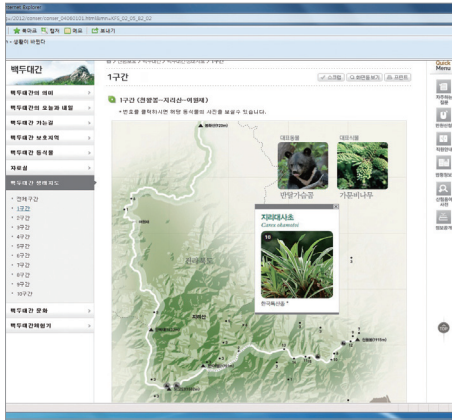


“엄마, 백두대간이 뭐야?” 9살배기 딸의 질문에 순간 머릿속이 멍해진다. 백두대간이 무엇인지 알아보라는 숙제를 받았다는 말에 무슨 대답을 해주어야 할지 순간 멍해졌다.

백두대간... 인터넷에 백두대간이란 단어를 검색해보니 바로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의미한다는 설명이 나온다. 하지만 백두대간을 이렇게만 설명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하다.

백두대간의 의미에 대해 인터넷 검색으로 숙제를 해결해 주다 보니 백두대간 생태지도라는 것이 검색되어 나의 흥미를 끌었다. 백두대간 생태지도가 무엇일까?

백두대간 생태지도(ecology map) 페이지로 가보니 백두대간에 사는 우리의 귀중한 동,식물들을 자세히 알려준다. 산림청의 백두대간 자원실태조사(2006~) 결과 등을 토대로 야생 동식물이 출현한 위치의 좌표 값을 입체적인 백두대간 지도(설악산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의 백두대간을 10개 구간으로 구분)에 표현하고 있었다.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한 생태지도 서비스



산림청 · 녹색연합 · 언론 공동 현장답사

백두대간에서 가장 희귀한 식생으로 평가되는 아고산대 식생대를 비롯하여 주목,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등의 군락, 멸종위기종인 포유동물을 비롯하여 꼬리치레 도롱뇽, 까치살모사 등 희귀하거나 법적 보호를 받는 종의 구체적인 위치와 사진을 함께 보여준다. 또한 백두대간 식생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다. 백두대간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나무는 신갈나무, 가장 많은 관목군락은 철쭉꽃. 이외에도 가장 많이 심어진 조림수종, 가장 많은 침엽수종, 가장 대표적인 한국 특산종 등 식생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정부3.0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 실로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는 딸과 함께 손을 잡고 백두대간 탐방에 나서보리라. 그리고 탐방 중 오늘 본 눈이 예쁜 다람쥐를 만난다면 딸에게 저 동물은 우리가 꼭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하는 동물이라고 설명해 주리라.

이렇게 작고 사소해 보이는 정보들로부터도 나 같은 사람들이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을 보니 정부3.0으로 더욱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공개로 인한 이득을 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3.0아 정말 고맙다.



〈 구간별로 정리해 놓은 백두대간 생태지도 〉

# 원자력안전에 국민이 감시자로 참여합니다

1-21 정보공개 · 원자력안전위원회



꼭 필요하지만  
단 한번 실수만으로도  
치명적인 원전,  
국민이 직접 원전의 안전과 비리의  
감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3.11) 발생 이후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담아 독립적이고 공정한 원자력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2011.10.26)하였으며, 제1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부위원회 최초로 위원들의 주요발언 등을 요약한 회의록과 심의안건 원문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이후 국내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건 등이 발생하자 언론은 연일 원전비리에 대해 보도를 하였다. 그 결과 국민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성은 낮아지고, 원전에 대한 불안심리는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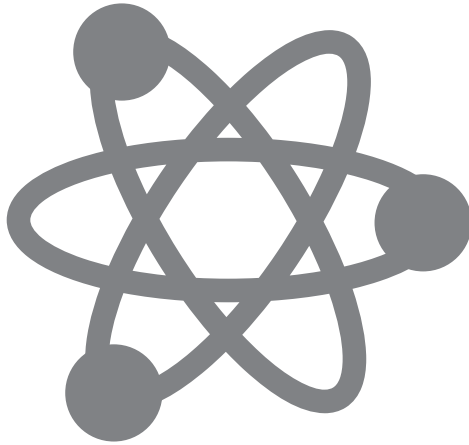
이런 행정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국민 원전 신뢰회복”과 “대국민 원전 불안 제로화”를 위해 제2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3년 8월 12일 개최된 제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정책결정 과정을 누구나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위원들의 구체적인 발언이 기록되어 있는 속기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국민의 위원회 회의방청권을 허용하였다. 위원회 회의방청을 원하는 국민들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위원회 속기록 공개와 회의방청권 허용 결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및 원자력안전에 대한 불안감 제로를 만드는 기반을 공고하게 만들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중 의사결정을 위해 토론하는 장면



공기처럼 물처럼  
늘 우리 곁에 있는  
**환경방사선량!**  
eRAD@NOW로  
확인하세요



1-22 정보공개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랭지 배추로 유명한 대관령 정상에서  
동해바다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을  
맞을 때에도, 동의보감의 본향 산청에서  
한방축제 참여를 통해 우리가족의  
건강을 챙길 때에도, 희귀식물 한라돌쩌귀  
로 유명한 한라산 탐방길을 오르면서도,  
그리고 청풍호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는  
유람선상에서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엑  
스레이 사진을 찍는 병원에서도, 우리 생활  
속의 ‘방사선’은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  
고 등으로 국민들의 방사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  
(단체) 등에서 임의로 발표한 환경방사능(선) 자료의 정확도가 낮아 국민들  
에게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122개 지방 및 간이측정소에서 측정한 환경방사선 감시결과와 최근 5년간 전국토 방사능 분석자료를 빅데이터화 하여, 실시간 환경방사능 정보앱 eRAD@NOW를 개발해 5개월여의 시험운영을 거쳤고, 드디어 2013년 9월부터 전국어디에서나 국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현재 시각의 환경방사선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그 지역의 방사선량을 일자별로 비교 가능토록 그래프 형태로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반국민들의 환경방사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실시간 환경방사능 정보앱 eRAD@NOW는 환경방사선 개념, 방사선의 종류 및 계측기에 대한 정보제공, 환경방사능(선)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자동감시망 이상경보 발생시 대응방법 및 원자력이용시설 사고 발생시 사고대응 체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실시간 환경방사선량 이외에도 주변·해양에서의 방사능 조사결과 등 신뢰성 있는 안전정보를 국민과 공유해 ‘원자력안전 불안감’ 제로(ZERO)를 만들어 갈 것이다.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발생을 철저히 사전예방하고 원자력안전 관련 부처간 비상시 대처방안을 상호공유 하는 등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안전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내가 투자한 회사의  
공시정보를 검색하려면  
매번 전자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야  
해서 번거로우셨죠?



내가 투자한 회사  
공시정보를 내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한다!



금감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 <http://dart.fss.or.kr>, <http://m.dart.fss.or.kr>)에 접속하지 않고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개인 홈페이지, 포털 등)를 통해서 원하는 공시 정보를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는 DART 「오픈 API」서비스를 제공하였다.

DART 「오픈 API」란 금감원이 보유한 공시정보를 他 정보시스템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기술이다. 금감원이 「오픈 API」이용자에게 공시정보를 제공하면, 「오픈 API」이용자는 자신의 목적에 적합한 화면을 제작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개인 및 기업의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의 정보 제공 페이지, 언론사의 뉴스 페이지,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은 물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많은 개인 및 기업 이용자가 투자정보 분석, 학술연구, 자사공시 서비스, 주식정보서비스, 기업정보서비스, 공시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용도로 DART 「오픈 API」를 사용하고 있으며, 누구든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이용이 점차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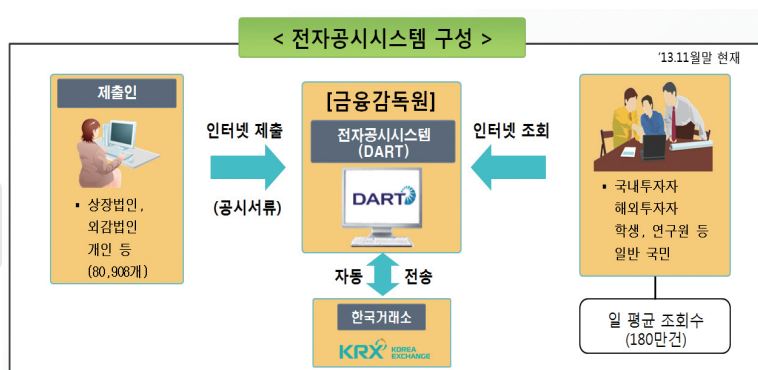


**+ 공시정보 이용자** : 저는 일반투자자입니다. 금감원의 DART 「오픈 API」서비스 제공으로 이제는 전자공시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제가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원하는 공시정보를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어 좋습니다.

**+ 기업홈페이지 담당자** : 금감원의 DART 「오픈 API」서비스를 이용해보니 우리 회사의 공시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받을 수 있고, 디자인 또한 회사 및 고객 기호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 기업 이미지 향상 및 홍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개인 블로거** : 주식이나 기업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개인 블로거입니다. 제 취향에 맞게 투자관련 공시정보를 블로그에 배치하여 최신 정보를 자동으로 표시할 수 있어서, 제 블로그 방문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금감원은 DART「오픈 API」이용자에게 활용 know-how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장 및 공시정보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공시정보의 개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DART「오픈 API」이용자들이 확장된 공시정보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경우, 민간부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산갈 때 산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탐방로 난이도를  
모르고 방문했다가  
내 체력으로는 무리인 코스여서  
고생했던 경험이 있으시죠?



국립공원 등산 시  
내 체력에 맞는 탐방로  
등급을 미리 확인하세요~

1-24 정보공개 ·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학교 1학년 때였다. 친구 6명이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기로 하고 산행을 시작했다. 당일로 천왕봉까지 다녀올 수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만 믿고 운동화 차림으로 가볍게 산을 올랐다. 젊은 기운에 산을 쉽게 생각하고 도전하였지만 가도 가도 끝없는 돌길과 코가 땅에 닿을 듯한 가파른 등산로 때문에 로타리 대피소에서부터 지쳐서 지나가던 등산객이 건네준 초코파이 덕분에 겨우겨우 천왕봉에 올랐던 기억이 새록새록 하다.

누구나 산에서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설악산, 지리산, 덕유산 등 큰 산을 쉽게 생각하고 별다른 준비 없이 산을 오르게 되면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2013년 10월부터 국립공원의 모든 탐방로에 난이도 5단계(매우 쉬움,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어려움)의 등급이 매겨져 탐방코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국립공원은 연간 4,000여만 명이 방문을 하는데 이 중에 등산이나 산책을 즐기기 위한 탐방객은 전체 탐방객의 66%에 이르고, 이들의 80%는 탐방로(등산로) 노선에 대한 정보를 가장 궁금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 국립공원 탐방이용행태 연구, 국립공원연구원)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2011년 탐방로의 경사도, 거리, 노면상태, 암릉·암반의 비율, 소요시간 등에 따라 탐방로의 종합적인 난이도를 산출해 탐방로 등급기준을 마련하였다. 탐방로 등급기준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의 탐방로 등급 운영사례를 조사·검토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5단계 형식의 탐방로 등급체제로 도입하기로 하고, 국내 공원시설업무 담당자, 안전관리 담당자, 등산안내원, 교통약자, 학자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 국립공원지형에 적합한 탐방로 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치악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삼아 실증까지 마쳤다.



탐방로등급안내판\_이용모습



마련된 등급기준에 따라 전국 21개 국립공원 1,855km의 탐방로에 등급을 적용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립공원 직원들이 GPS를 이용하여 탐방로 측량 및 전수조사를 시행·분석하였다. 탐방로 중에서 가장 많은 등급은 '보통' 등급(69%)으로 나타났고, 등산 숙련자에게 적합한 '어려운' 등급, '매우 어려운' 등급은 각각 15%, 3%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 이름에 '악' 들어간 산은 험하다고 하는데 실제 분석결과 설악산, 월악산, 치악산, 월출산 등은 어려움 이상의 등급 비율이 높은 산들이었다. 이 정보들은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공원에서도 탐방로입구나 주요 갈림길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표지판을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2014년 2월부터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도서비스를 통해서도 탐방로 등급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협의 중이다.

국립공원에는 2012년 한 해 동안 248건의 사망이나 부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탐방객 자신의 체력이나 신체 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심장돌연사나 골절, 탈진과 같은 무리한 등산으로 인한 사고들이었다. 탐방로 등급제가 국립공원에 정착될 경우 1,800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등산인구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며, 안전사고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부동산 가격정보를  
알기쉽게~ 한눈에~  
돈이 되게~

2-1 데이터 개방 · 국토교통부



내가 진짜 원하는  
부동산 가격정보만 알기쉽게  
쑥쑥 빼서 정리해서 알려주니깐...  
어라? 이게 돈이 되네?

통합부동산 가격정보 서비스 T/F 회의



「A씨는 소규모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일감이 없어서 걱정이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격정보 데이터 광장을 알게 된 후로 매출이 쭉쭉 늘기 시작하였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특성과 욕구를 쉽게 파악하고 맞춤형 영업 전략을 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의 영업 노하우로 아파트 건축 후 10년, 가격이 높을수록, 새로 장만하여 이사 올수록, 인테리어 수요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번에 부동산 가격정보 데이터 광장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쉽게 확보함으로써 그만의 노하우가 대박을 터트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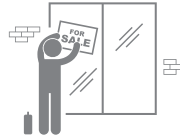
최근 민간부문에서는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관련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아 마케팅, 시장조사 등 산업활동 분야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현재 3개 부서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정보시스템을 금년도에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는 본격적인 「부동산 가격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정보를 한 군데에 모아 대국민 등에게 오픈 API로 맞춤형 가격정보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측에서 볼 때, 분산된 감정평가정보체계(표준부동산 관리), 토지정보시스템(개별부동산 관리) 그리고 실거래가시스템(실거래가)과의 연계와 부동산 가격정보의 집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첫째, 표준과 개별부동산(地, 宅)의 연계로 조사·특성 등 오류 제거로 공시가격의 정확성이 제고되고 둘째, 표준·개별부동산과 실거래 가격까지 상호 연계하면 공시가격의 불균형 등이 해소됨으로써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의 현실화율이 높아져 가격 상승분에 해당하는 세수확보(과표 1%만 올려도 연간 약 1천억 예상)도 가능하다. 넷째, 건강보험료 책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등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른 실시간 모니터링 및 다양한 모형을 분석함으로써 부동산의 제도 운영 및 정책 수립의 적시성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모든 부동산의 가격정보가 한곳에 집적됨에 따라 국민이 관심을 갖는 다양한 정보제공이 가능해졌다. 공시가격의 정확성 등 품질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되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정보를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평가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은 가격정보 데이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 API로 개방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민간은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해 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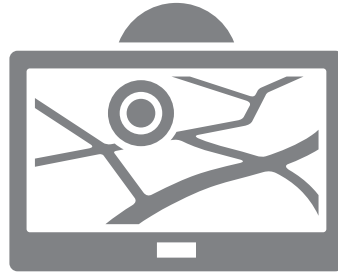
특히 공시업무시 해당지역 감정평가사는 해당지역의 인구변화, 산업구조, 경제기반, 주택공급 및 수요, 개발사업, 실거래가 동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정보를 조사·평가하면서 해당지역 표준지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공시가격이 어떻게 결정·공시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모형화하면 대국민 맞춤형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이처럼 부동산 가격정보의 개방의 폭이 넓어지고, 시장이 요구하는 부동산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되면 민간 영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선 부동산 가격정보를 오픈 API로 제공하면, 민간의 노하우와 융합되어 창의적이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부동산 가격정보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산업(예를 들면 부동산 개발, 부동산 금융, 부동산 중개, 부동산 관리, 부동산 감정평가 등)에서 높은 활용이 기대되며 또한 부동산 비전문가에게도 분석하기 쉽도록 정형화된 모형에 따라 분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와 거래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시작한 사업에 인터넷  
지도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하셨죠?  
브이월드를 통해 다양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3차원 지도서비스,  
이제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사례 1. 3차원 부동산 서비스

인터넷 부동산 서비스를 하고 있는 A업체는 최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별한 지도서비스 개발을 고민하던 중 2차원/3차원, 영상 지도는 물론 지적정보, 토지이용현황정보, 부동산 실거래가 등 다양한 부동산 행정정보까지도 함께 제공하는 브이월드를 찾아내고 이를 기존 서비스와 연계·활용함으로써 비용 부담없이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다. 특히, 고해상 3D 지도를 통한 조망권, 경관정보뿐만 아니라, 3D지적도를 이용하여 고객이 현장에 가보지 않고도 부동산정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 사례 2. 3차원 비행시물레이션 서비스

시물레이션 게임을 개발하는 B업체는 3차원 비행시물레이션 게임을 계획하던 중 3차원 데이터 구축 비용이 수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을 포기하려 하였으나 국토부에서 3차원 데이터를 무상을 서비스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개발 재개는 물론 개발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 ✚ 사례 3. 북한지도 서비스

황해도 향우회장을 맡고 계신 이모 할아버지는 국토부에서 북한지도 서비스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손자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고향인 송화군 용호리를 찾아 어릴 때 살았던 집과 친구들과 뛰어놀던 마을 언덕을 보시고는 “그래 맞다! 여기가 바로 할애비 고향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가족과 함께 실향의 아픔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첨단 3차원 지도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자유롭게 이용하고 레저, 관광,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서비스 산업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도모하고자 국가가 보유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개방과 활용지원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 ([www.vworld.kr](http://www.vworld.kr))를 오픈하여 2차원/3차원 및 영상 지도, 지적도, 산사태위험지도 등 각 부처에서 생산한 22종의 국가공간정보를 대국민 서비스 하고 있으며, 오픈API를 통해 비용 부담없이 누구나 손쉽게 사용자 지도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71개 민간기관에서 브이월드 지도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네이버, 다음, KT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해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브이월드 사용으로 민간기관은 지도구입, 장비구매, 서비스 구축 등 신규 지도서비스 구축에 소요되는 약 342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최근 해외지도서비스 유료화에 따라 발생하는 매년 약 600억원의 비용 유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를 오픈함으로써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에서의 공간정보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차원\_부동산서비스



비행시뮬레이션



#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는 공공저작물!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다!

2-3 데이터개방 · 문화체육관광부



이용하는 절차도 어렵고  
까다로웠던 공공저작물,  
게다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하기  
망설여지셨죠?

자물쇠, 도어락 회사를 운영하는 김사장은 요즘 고민이 많다. 제품들의 기능이 모두 비슷해서 타사 제품과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기가 쉽지 않고 경쟁회사가 많아져서 직원들 월급 걱정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해외 판매로도 눈을 돌려 봤지만 바이어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다른 회사 제품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물어보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김사장은 웹서핑 중 문화포털([www.culture.go.kr](http://www.culture.go.kr))에서 전통디자인 메뉴의 콘텐츠를 보다가 공공누리 마크를 발견하였다. 자세히 읽어보니 상업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무료 저작물이었다. 김사장은 바로 디자이너에게 자물쇠나 도어락에 사용이 가능한 전통문양 콘텐츠를 찾아서 제품디자인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며칠 후 디자이너가 김사장에게 내민 것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양 중 귀면문(도깨비 문양)이었다. 이 문양은 전통적으로 악귀의 침입을 방지하는 문양으로 자물쇠, 도어락에 디자인을 적용하여 제품을 만들면 의미적으로도 제품의 차별화와 홍보 수단으로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김사장은 즉시 제품디자인을 개발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귀면문 문양의 도어락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바이어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제품에 대한 주문이 많아서 전담직원을 배치할 정도가 되었다. 김사장은 오늘도 공공누리 마크가 붙은 다양한 공공저작물을 찾아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누리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들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알려주는 표시제도로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들과 민간 기업에게 아주 유용한 제도이다.

영국의 OGL, 호주의 CCL 등 세계 각국에서는 공공저작물의 개방·공유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의 개방과 활용을 위한 이용절차 및 방법의 부재, 권리처리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유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공공기관 스스로가 공공저작물의 유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공공저작물을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 활용하여 민간산업의 촉진제 역할을 해주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2년 2월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지역별 설명회

개최와 홍보를 통해 공공누리제도를 널리 알려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공공누리 제도를 알리고 공공누리 표시를 보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공공기관들이 아직도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개방해도 되는 것인지, 개방하면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등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만든 것인데 무료로 나누어주기에 아깝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정보센터를 통해 공공기관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처리를 지원하고 공공누리 확산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공공누리는 2013년 9월 말 기준 약 90만 건(출처 : [www.kog1.or.kr](http://www.kog1.or.kr))의 공공저작물에 보급되어 있으며 정부의 ‘정부3.0’ 추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공공누리를 통해 개방되는 공공저작물은 일반 국민들의 취미, 학생들의 학습자료 및 과제작성은 물론이고 벤처, 중소기업들의 제품개발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누리 관련 문의처 : (재)한국문화정보센터 공공사업부 : 02) 3153-2872)

우리나라 기술의 역사를 담은  
기술표준정보,  
‘정보은행’에서 가치 있는 정보  
로 다시 태어난다.

기술표준정보!  
이제 ‘정보은행’에서  
찾으세요~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2003년까지 만들어진 총 정보량이 5엑사바이트(EB, 1EX=10의 18승bytes)인데, 지금은 이를 마다 그만큼의 데이터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구글 에릭 슈미트 회장의 진단이다. 지금 우리는 정보의 폭주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쏟아져 현대인은 정보 비만에 시달리고 있다. 가치 있는 정보는 그래서 더욱 중요해진다.

“5인치대 스마트폰, 인간공학적으로 한국인에 불편.” 모 신문사의 기사 제목이다. 기술표준원의 사이즈코리아(<http://sizekorea.kats.go.kr>) 사이트에 있는 한국인의 성별·연령별 인체치수정보를 활용해 내놓은 분석이다. 관련 기업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정보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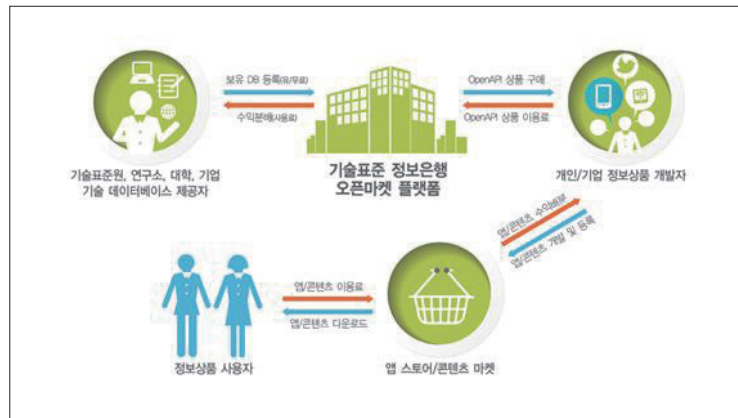
A기업은 국가가 정확도와 신뢰도를 공인한 척도라 할 수 있는 참조표준 중의 하나인 ‘한국인 경동맥 혈관 두께의 표준’을 탑재한 경동맥 초음파 진단 장비를 개발하였다. 현재 12개 병원에서 한국인 맞춤형 심뇌혈관질환

환 진단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류 최대의 유행병’이라 불리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에도 독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처럼 가치 있는 정보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인류행복을 실현하는 ‘창조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사이즈코리아를 비롯하여 KS표준, 국제표준, 한국형 색채표준, 제품리콜, 기술규제, 시험인증, 참조표준 등 다양한 기술표준정보를 축적해 왔으며, 효과적인 보급과 활용에 앞장 서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보에 가치를 더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술표준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얻고, 가공하고,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개방·공유형 ‘기술표준 정보은행 플랫폼’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2013년 6월 기술표준 정보은행 홈페이지([www.ibtk.kr](http://www.ibtk.kr))가 전격 오픈한 것이다. 정보은행은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색채정보, 한국인 인체치수정보, 제품안전정보 등 ‘국민행복형 정보’와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KS 표준정보, 시험·인증기관정보, 기술규제정보 등 ‘기업지원형 정보’로 구분되어 설계됐다. 또 해당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Open-API형태로도 제공하여 누구나 활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정보은행의 활용 촉진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앱 공모전 (2012년 12월 12일~2013년 2월 28일)도 개최했다. SNS시대답게 고등학교 생부터 전문 개발자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최종 88개 팀이 접수하여 6: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개발된 앱 역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앱(예: 우리동네 표지판), 전문 시험인증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예: 숙련도시험기관검색)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표준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기술표준정보는 공개되었을 때 보다 가치 있는 정보, 흥미로운 정보로 탈바꿈한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해 끊임없이 진화해 나아가는 기술표준 정보은행이 될 것이다.

농사짓는데 필요한 농업기술정보를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에서  
맞춤형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면?  
이제 개방된 농업정보와 다른 정보  
간 융합을 통한 가치 있는 농업정보  
생성의 시대가 열립니다!

농업인에게는 소득작목을!  
도시민에게는 귀농정보를!  
**맞춤형**  
농촌정보를 쉽게~



2-5 데이터개방 · 농촌진흥청



최근 농업인은 새로운 소득작목과 가공·체험서비스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도시민은 텃밭과 베란다 가꾸기 및 귀농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는 영농에 필요한 작물별 재배기술 정보와 도시민의 관심정보 등을 서비스 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의 요구분야가 다양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연령이 높은 농업인의 경우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찾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은 사용자의 정보수요에 맞추어 주간농사정보, 작목별 농업기술정보, 품종정보 등을 오픈 API형태로 공개하였다. 현재 137개 농업관련기관이 기관의 고유정보와 개방된 농업기술정보를 활용하여 홈페이지 방문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접속자는 12,518명으로 개방이전에 비하여 8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 귀농인구가 증가하면서 작물별 재배기술정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어떠한 작목이 전망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빠른 기간 내에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지 등 정보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 농촌진흥청은 귀농인이 재배하고자 하는 사과작목을 선택하면 가락시장 출하정보에서 주산지를 확인할 수 있고, 월별 사과재배 관리일정과 주요 재배기술정보 습득이 가능하고, 300㎡ 조수익과 경영비 및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귀농희망지역에 전문농업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작목종합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사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는 그동안 귀농준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힘들다는 불편을 해소하였고 유익한 귀농관련 정보가 서비스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일 10,000명 이상 방문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정부3.0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정보개방을 넘어 개방된 정보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오픈 API :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개방형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어린이에서 성인까지 식습관은  
성장과 질병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넘쳐나는 식품  
정보 속에서 안심하고 언제든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식품영양정보를 공개합니다.

영양만점  
식품 정보공유로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2-6 데이터개방 · 농촌진흥청





최근 건강과 식습관이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식품과 영양에 대한 관심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범람하는 수많은 정보 중 질 높은 정보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식품 영양성분 정보를 담고 있는 “국가 표준 식품성분 DB”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식품분석 체계인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 43종에 대한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영양성분 데이터들은 국가표준식품성분표, 기능성성분표로 농촌진흥청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http://koreanfood.rda.g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어, 건강 및 식생활 관리를 원하는 국민들이 직접 검색하여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책자나 PDF 파일로도 제공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는 이용자는 2012년 50만 명에서 2013년 6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니 국민의 식품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초 식품성분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 통용 단위인 식품 100g을 기준으로 한 영양성분을 어린이, 성인, 노인 등 연령에 맞춰 실제 1회 섭취분량으로 환산하여 “내가 먹는 식품의 영양가가 얼마나 될까” 궁금해 하는 국민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실측 사진과 1회 섭취 분량 당 영양가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실버세대 건강밥상의 경우 노인들이 꼭 필요한 영양소와 섭취 적정량에 대해 식생활 속에서 항상 접할 수 있도록 식탁 아래 깔아 두고 볼 수 있는 실물크기의 식생활 지침서를 쟁반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믿을 수 있는 국가표준 식품성분 DB는 산업계 및 학계 등에 73곳에 활용되었고 그중 닌텐도 Wii fit plus 등 체중 및 식단관리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해 한국인 식생활 관련 질환 관련 연구용 자료로도 활용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활용이 많아지는 시대에 부응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앱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린이 “푸드아바타”와, 성인용 “로리의 건강한 밥상”으로 공개 1년 만에 다운로드 수 약 5000건을 기록 할 만큼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푸드 아바타의 경우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하는 아바타를 통해 식품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줌으로써 식생활을 교정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어 조선일보 베스트 앱 및 스마트 교육 시범학교의 교육 자료로 채택되었다. 또한 2014년 공개 예정인 임신 수유부용 “아기와 톡”과 질환관리용 “매일매일 건강게임”을 통해 정보제공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홍수같이 쏟아지는 식품정보 속에서 믿을 수 있고, 내 몸에 꼭 맞는 영양정보로 국민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생활은 더욱 윤택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뢰성 있는 식품의 영양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어린이용성분표



성인용성분표



노인용성분표



만성질환용성분표



실버세대 건강밥상

산행 중 만나는  
사찰, 폭포, 나무, 식물...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어떤 동식물인지 궁금하셨죠?



산 · 유적지 · 동식물  
안내 내비게이션,  
등산이 이제 더 즐거워집니다



2-7 데이터개방 · 산림청

요즘은 등산 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등산을 즐기고 있다. 한 해 등산인구가 1500만에 이르고 성인의 41%는 월 1회 이상 등산을 즐긴다고 하니 우리 국민의 산에 대한 사랑은 가히 폭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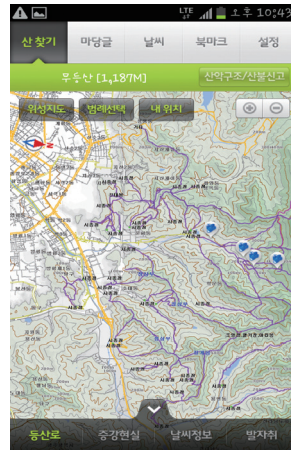
이렇게 산행이 즐거운데 더욱 행복해지는 소식이 들려온다. 등산로·숲길 정보, 국가생물종 정보, 숲해설·숲이야기 정보, 명산 등산로 정보 등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되어 이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제일 기대되어 지는 것은 바로 등산로 안내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앱이 개발되면 산에서 나를 안내해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겠지만 산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줄 것이다. 내가 오르고 있는 혹은 오르고 싶은 산에 대한 정보는 물론 산에 얹힌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등산하고 싶은 날의 기상 정보까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등산로 안내 앱 다운로드



현재 등산로 안내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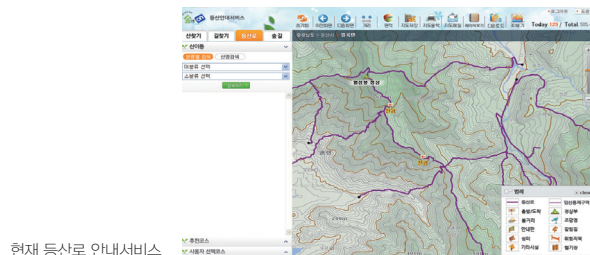


또한 산행 중 만나는 폭포나 사찰 등 주요 지점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되어 산행을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산에서 찍은 사진과 등산로 정보가 연계되어 내가 산의 어느 곳에서 찍은 사진인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식물조희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기대 하는 바가 크다. 식물 조희 애플리케이션은 내가 산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나무와 꽃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산행 중 모르는 꽃이나 나무가 있으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고 나무를 스캔하면 잠시 후 나무의 이름과 학명, 정보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런 것이 산행의 즐거움이 아닌가! 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산구  
절초의 다양한 모습을 찍어서 식물 조회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올려 볼  
테고 다양한 사람들이 찍은 식물 사진DB가 쌓이면 쌓일수록 정합도가 높  
아질 것이다.

처음 정부가 「정부3.0」이라는 이름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는 정책을 뉴  
스에서 접했을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 같다.  
정부3.0이라는 이름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졌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보  
와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국민 생활에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  
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혜택을 받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한 채 말이다.  
바다 속에서 진주를 캐내듯이 이들을 활용하여 얼마만큼 잘 활용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 몫이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이의 활용을 통해 제공  
될 새로운 서비스와 달라질 우리 사회의 모습이 기대된다.



디자인과 디자인 보호에 관해  
다른 많은 디자이너들과 정보를  
공유 · 소통할 수 있는 곳,  
디자인맵으로 오십시오.

디자이너,  
SNS로 지식재산권과  
소통하다



2-8 데이터개방 · 특허청



#### ✚ 그녀가 손에 든 것은 장미?

디자이너 지망생 L씨, 비 오는 어느 날 행인이 손에 든 것은 장미송이라고 여기고 지나치다가, 그것은 다름 아닌 우산임을 알고 그 발상에 감탄했다. ‘나도 저런 디자인을 개발할 수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친구를 통해 페이스북(Facebook)에서 특허청 ‘디자인 맵(map)’과 만나게 된다.

#### ✚ 디자이너, 지식재산권과 만나다.

L씨는 디자인맵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ipoDesignmap>)에서 다양한 디자인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같은 분야의 다른 많은 디자이너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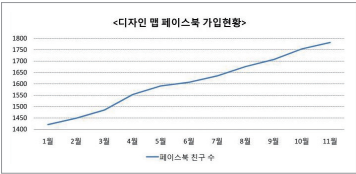
이처럼 특허청은 국내·외 디자인 공보데이터를 가공하여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SNS를 통해 신속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의 ‘장미 우산(상품명: 로젤라)’과 같은 디자인 개발사례를 발굴하여 인터뷰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들은 피부에 와 닿는 개발경험을 친구(fellow)들과 공유·소통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은 최신 디자인 트렌드 및 분쟁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 콘텐츠를 통해 기업이나 디자이너들은 디자인 분쟁에 대비할 수 있으며 향후 디자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디자인맵 페이스북을 일반국민과 소통 및 협력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디자인 관련 정책 및 법령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이 페이스북을 통해 수렴하고, 국민과 함께 결정한 디자인 정책 역시 이 페이스북을 통해 전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맵 페이스북, 웹사이트, 블로그 및 트위터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페이스북에 소개된 대국민 상표 인지도 설문조사



디자인 맵 페이스북 가입현황

✦ 디자인맵 페이스북, 디자이너의 소통팔달로 자리매김하다.

이미 디자인맵 페이스북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2011년 개설 후 누적 조회수가 17만건에 달하고 입소문을 통해 도달한 사용자 수가 2만 8천 건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제공 정보에 대한 사용자들의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디자인맵 페이스북이 지난해 4/4분기에 문화체육부가 선정한 SNS 활용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꾸준히 개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과 협력의 창구로 디자인맵 페이스북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GPS기반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앱 개발을 통해  
도로 이용불편사항 신고를 받고  
이를 기동보수반과 연계 운영,  
신속히 처리하는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도입  
을 추진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신고하세요.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척!척! 해결해드립니다**

초보 운전자 I씨는 파손된 도로를 통과하면서 몇 번의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지만, 운전 중 전화로 신고할 경우 문제가 된 도로의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잊어버려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내가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도로상 불편이 뒤이어 따라오는 수많은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신고의 불편함과 설명의 어려움으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도로는 등급별로 다양한 주체(고속도로-도로공사, 국도-국토관리사무소, 지방도-지자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각 도로관리청마다 신고할 수 있는 전화나 앱이 있으나,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그간 이용자들이 낙석, 차선도색 노후화, 안전시설 파손, 포트홀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도로는 이동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정이 되는 시설물들이 주변에 많지 않아 해당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아 제보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널리 보급된 GPS기반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포장 파손, 낙석, 낙하물 등 이용불편사항을 통합신고받고 이를 기동보수반과 연계 운영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도로이용불편 적적해결서비스』 도입을 추진하였다.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어플리케이션(‘척척앱’)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이용불편 유형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도로의 관리청을 제보자가 알지 못하더라도, GPS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불편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처리 결과 및 현장 조치 사진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로 이용불편 신고의 진행 경과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이용불편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고자가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담당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했다. ‘척척앱’을 통해 간단하게 혹은 상세하게 제보가 가능하지만 긴급한 경우나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직접 통화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전화를 통한 이용불편 제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용불편 위치 부근에서 척척해결 앱의 전화걸기 기능을 이용하면 해당 위치의 도로관리청으로 바로 전화 걸기가 가능하여 전화번호를 따로 기억하거나, 메모해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전화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척척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GPS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도로이용불편 통합 신고서비스를 구축함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과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등 개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도로관리청과의 소통·협력이 강화되고, 신속한 도로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도로이용 만족도를 제고시킬 뿐 아니라,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함께 소송·민원 대응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 감소로 우리 생활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적기의 소규모 유지관리를 통해 도로의 성능저하 속도를 늦추고, 예방적인 도로관리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관리비용을 저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14년초까지 시범서비스를 운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더욱 편리한 제보가 가능하도록 민간 내비업체와 불편신고 기능구현, 정보교환 등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도로이용불편 정보, 공사정보, 교통(사고)정보 및 제설작업 정보 등 도로관리청의 통합적인 도로관제 및 관련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다.



우리 주변 일상생활 속의  
크고 작은 불편사항  
어디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지 막막하셨죠?



생활 속 민원,  
주저 말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3-2 민 · 관협치 · 안전행정부



직장인 김불편씨는 집 근처의 주택가 도로가 깊게 패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운전하는데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나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잊어버리기 일쑤여서 매번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뉴스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서비스를 알게 된 김불편씨는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패인 도로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신고했더니 위치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사진과 위치가 해당 기관으로 바로 전송되어 접수 처리되었다.

민원을 접수한 도로관리 담당 공무원 박해결씨는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도로의 정확한 위치와 도로 패임 정도를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하게 도로를 복구하였고, 조치 사항과 사진을 김불편씨에게 통지하여 주었다.

안전행정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주차 등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기 전에는 전화, 인터넷 등으로 민원제기 또는 민원처리 결과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시공간 제약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었다.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이 확산되고 정보이용과 소통 방식이 변화하면서, 민원 서비스가 기존 전화·인터넷 기반에서 언제·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2012.1월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지능형 기능을 행정서비스에 접목하여, 민원을 제기할 기관을 알지 못하더라도 신고 위치를 GPS를 통해 파악하여 민원이 관할 시군구로 자동 접수되어 처리된다. 또한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간편하게 촬영, 첨부하여 민원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

게 된다. 서비스 이용절차도 간단하여 회원가입이나 실명인증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는 대국민 서비스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 시켰다.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활용률이 14.6%(’12년)에서 현재 27.5(’13.10)%로 크게 증가하였고, 월평균 신고건수도 2,472건(’12년)에서 9,731(’13.9)으로 무려 6배나 증가하였다. 서비스 다운로드 건수도 약 10만건(’12년)에서 현재 28만건(’13.11)으로 세배 가까이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위치와 영상정보가 함께 신고 되므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 파악을 위한 전화문의나 출장이 줄어들어 행정업무 부담과 행정처리 비용이 감소되었으며, 행정처리에 드는 시간도 평균 5일에서 3.7일로 감소되었다.

무엇보다도 국민 스스로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면서 국민과 정부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를 신고하여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운전 중 담배꽂초 무단투기 단속에 시민신고가 활성화 되고, 에너지 낭비 신고를 통해 전력 수급 위기를 대응하는 등 국민의 적극적인 개선사항 발굴과 참여 증진으로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와 국민의 쌍방향 소통 채널로 자리 잡게 되었다.

## 같이가요! 바꿀 수 있어요! 여가부가 소외여성의 손을 잡습니다



3-3 민 · 관협치 · 여성가족부

미혼모,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우리 사회가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여성가족부가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취약계층과 함께 살아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산이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같이가요” 나눔 네트워크를 구축해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누구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모르는 민간과,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연계해주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기로 했다.

그 결과 민간기업의 지원으로 강원도 산골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등에 현장 활동을 위한 차량을 제공하였으며,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5년간 50억원을 지원하는 재단이 설립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리모델링, 청소년 쉼터 건립, 해체된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먼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적 메시지를 고민했다. 여성과 남성, 별 탈 없이 학교생활을 하는 아이들과 학업 중단, 가출, 게임 중독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간에는, 자칫 차이를 외면해서 뜻하지 않는 차별을 낳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들의 차이가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차이를 보듬고 같이 가자는 의미에서 여성가족부가 국민들과 함께할 캠페인 슬로건을 “같이가요”로 정했다.

이 “같이가요”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 핸드폰 문자, 이메일,



버스광고, 지하철과 길거리 전광판, 사보 등과 같은 각종 ‘불거리’ 들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캠페인 내용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7~8월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이러한 ‘민관합동캠페인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한 결과 22개 부처, 17개 시도, 28개 기업, 3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국민 캠페인이 되었다.

특히 전국 740여개의 회원사를 보유한 한국사보협회와 협조하여 다양한 기업들의 사보에 메시지를 실을 수 있었고, 은행, 카드회사, 보험회사, 통신회사들이 직원과 고객에게 보내는 각종 청구서, 광고 DM, ATM기 등은 최상의 전달수단이 되었다. 화장품 매장, 편의점 등은 국민과 밀접한 생활매장에서도 고객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기꺼이 공간을 제공하였고, 포털 사에서도 온라인 카페 등의 페이지를 할애하여 공공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활용해 현재 일 가정 양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새 학기 3월에는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 등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나눔과 행복의 네트워크에 함께하며 같이 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범죄피해를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물며 목격자 제보마저 없다면  
어떨까요?



나와 이웃이 함께 참여하는  
안심치안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3-4 민 · 관협치 · 경찰청



**+ 상황 1**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던 A씨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한다.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좌회전하던 은색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다행히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목격자도 없고 근처 CCTV도 없어 뺑소니 차량 가해자를 찾기 어려웠다.

**+ 상황 2** 회사원 B씨는 얼마 전 직장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집 앞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하는 뺑소니 차량을 목격했다. 쓰러져 있는 사상자를 구호하고 집으로 돌아 왔는데 마침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이 생각났다. B씨는 이동식 메모리에 복사 하는 등 이 영상을 경찰에 제공하기 위해 진땀을 뺐다. B씨가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 상황 3** C경찰관은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용의자에 대한 몽타주를 인쇄물로 제작하여 관내 주요 건물에 게시하고 주민들에게 배포하였으나, 사건단서나 목격자에 대한 제보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위 사례처럼 경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치안 문제를 시민사회의 잠재력과 역량을 활용하고자 경찰에서는 「국민참여형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60여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뺑소니 범죄만 하더라도 약 5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이를 줄이기 위한 국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버스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에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고, 일반 운전자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CCTV도 늘어나면서 각종 사건사고의 영상을 손쉽게 수집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이 보유한 범죄 목적 정보를 공유하고, 경찰활동에 활용한다면 범죄해결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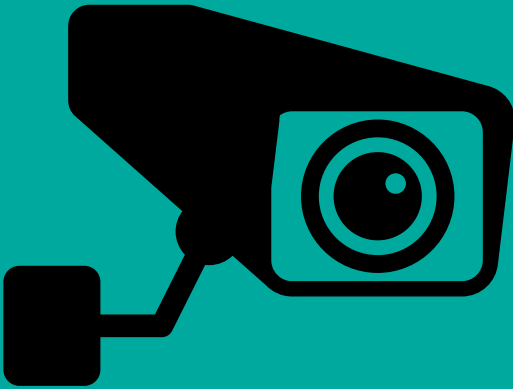
### + 국민 참여형 안심치안 서비스란 ?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목격자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주민이 보유한 스마트폰,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등으로 촬영한 뺑소니 사고 및 각종 사건사고 영상을 손쉽게 수집,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지능형 목격정보 공유시스템임.



# 탈세감시로 투명사회를! 바른 세금으로 복지국가를!

3-6 민 · 관협치 · 국세청



국민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생활 속 탈세를 감시한다면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 투명한 사회가  
앞당겨지고 우리의 삶도  
그만큼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우리 주위에는 언론에 나오는 탈세자에 대해 크게 비난하면서도 정작 물건 값을 깎아 준다는 말에 너무나도 쉽게 현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런 무관심한 행동 하나가 탈세를 부추기는 것일 텐데 말이다. 정당한 세금을 내는 투명사회를 이루려면 국민 개개인이 건전한 납세의식을 갖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성실납세운동을 전개하여 올바른 납세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일반국민 751명이 참여하는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를 발족·운영하게 되었다.

‘바른세금 지킴이’ 서포터즈는 생활 속 탈세를 감시하여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접수하는 것 외에도 업종별·지역별 세원동향 정보와 탈세 근절을 위한 생생한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정책 자료를 홍보함으로써 국민 속에서 성실납세운동을 수행하는 등 탈세감시 파수꾼 및 국세행정 전도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국민이 일상 생활 중 접하게 되는 탈세행위를 언제 어디서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탈세제보 앱(App)을 개발하였으며 국세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메뉴에 혼재되어 있던 각종 제보 기능을 · 탈세제보 · 메뉴로 통합 신설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 활동이 활성화되어 '13.8월까지 탈세제보로 인한 세금 징수액이 전년 동기 3,220억원에서 6,537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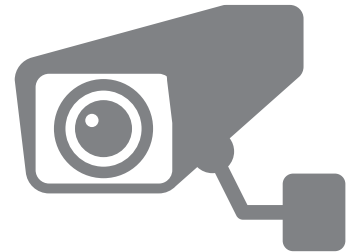
◆ **제보건수** : 7,627건→12,147건(59.3% 증가), **세금 징수액** : 3,220억원→6,537억원(103% 증가)

또한, '13.8월까지 '바른세금 지킴이' 서포터즈로부터 650건의 탈세제보 · 세원동향 등을 제출받아 세무조사와 국세행정 운영에 활용하였다.

아울러 정부 · 기업 · 시민사회 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탈세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능화 · 고도화되는 탈세행위를 차단해 나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에 성실납세의식을 확산시켜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홈페이지 탈세제도 메뉴 신설



# 방위사업 3.0시대! 소통과 정보공개로 국민의 애로사항 해결~

3-6 민·관협력·방위사업청



국방조달 참여는 하고 싶은데  
정보가 없어 선뜻 참여하기  
힘드셨죠?  
국방규격이 너무 까다로워  
입찰을 망설이셨다구요?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은 일정한 품질유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해진 규격을 바탕으로 제작된다. 규격에는 제품의 종류와 분류, 일반적 요구사항, 구조, 부속품, 성능, 시험실 사양 및 시험방법까지 제품제작에 기준이 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규격은 호환성을 높이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방규격은 무기체계가 개발되면서 만들어진다. 국방규격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성과물이며 생산과 공정한 계약의 기준이 된다. 군수품 조달에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 전 국방규격을 통해 납품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입찰에 참여한다. 또한 납품할 때에도 국방규격을 기준으로 품질검사를 받고 납품하게 된다.



정부3.0 구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조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정부 3.0 구현을 위해 처음 부여된 과제는 ‘소통’이었다. 6월부터 7월까지 2달간 규격업무 전문가들이 제작업체 현장방문, 간담회, 설문 등을 통해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한 고객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예상보다 많은 문제점들이 식별되었고, 현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 2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국방조달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입찰 전 국방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알지 못해 겪는 어려움이 있었다. 업체가 국방규격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국방규격에서 제시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제재를 받거나,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곤 했다. 공무원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도 국민들은 접근 경로를 알지 못해 비효율적인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규격 자료 지원절차 안내’ 브로슈어를 즉시 발간했다. 발간된 자료는 국방 중소기업 사업지원 설명회와 지역별 업체 방문시 제공하였다. 최초 제안을 했던 업체와 정보를 제공받은 업체로부터 국방규격 자료와 견본을 열람하기 쉬워졌다고 큰 호응을 얻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체가 생산간 겪는 애로사항을 들었다. 대량생산을 위해 작성된 일부 국방규격은 소량 조달 요구시 업체에게 진입장벽이 되어 입찰을 가로막고 있었다. 대량생산을 위한 소재, 공법, 시험기준 등은 군수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체에는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체가 신규 군수품 50개를 생산 및 납품하기 위해서는 1,000개 생산 분량의 원재료를 구매하고, 값비싼 금형을 새로 만들고, 품질보증을 위해 까다로운 환경시험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이는 비용과 절차 측면 모두 어렵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선뜻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또한 문제를 인식하고도 규격을 개선하는 행정절차가 까다로워 업체에서는 제때 규격개정 요구를 하기가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 담당 전문가들이 발 벗고 나섰다. 먼저 국방규격으로 인한 어려움을 업체로부터 확인했다. 그리고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업체에서 제기한 사항을 확인 후 개선하였다. 또한 국방규격 개선을 위해 제작 및 시험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체가 아닌 정부에서 비용을 투입하여 개선하고 있다.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식재료 원산지 표시위반,  
불법 폐기물 배출 등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해도  
신고하기 쉽지 않으셨죠?



생활 속 크고 작은 불법행위  
공익신고 스마트앱으로  
신고하세요~

3-7 민 · 관협치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뇌물수수, 예산낭비 등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를 파면·해고 등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의 제정(2001년) 이후 10년 만에 신고자 보호의 범위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가 시행(2011년)된지 2년이 지났다.

민간부문의 복잡·다난한 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이 민간부문의 부패행위를 적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부인이 나서서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시행으로 민간내부의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건전한 공익신고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 이후 철도교량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 위험, 유사석유 판매·사용, 의약품 허위·과장광고 등의 적발·처벌이 있었고, B형간염 혈액의 수혈 감염 의혹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과 장비 도입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반국민이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식재료 원산지 표시 위반, 불법 폐기물 배출 등 국민의 건강 ·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하더라도 신고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도 모르고, 신고를 하기도 번거러워 불법 행위를 무심코 지나치거나 방치하여 결국 우리 사회의 불법행위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누군가는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 스마트 어플’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공익신고 스마트 어플은 사진 · 동영상 첨부, 지도검색 및 위치등록 등 편의기능을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생활주변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하였고, 신고자 보호가 중요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명인증, 암호설정, 개인정보저장 · 전송 암호화 등 보안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공익침해행위사례 및 Q&A 등을 카툰 형식으로 소개하여 공익 신고제도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등 신고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부3.0의 구현을 추구하였다.

공익신고 스마트 어플의 활용이 본격화되면, 작은 시골마을에서 일어나는 ‘불법 의약품 판매, 대학 연구실 등에서 안전점검 미 실시, 건설공사장 안전시설물 미설치’ 등 기존에 신고로 연결되기 어려웠던 생활주변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생활 주변의 안전이 증진되고, 결국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사회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공익신고 스마트앱을 통한  
신고 편의성 제고



아이가 둘인 A씨!  
늘어만 가는 학원비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마침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교육  
경감에 관한 정책수립 온라인 토론을  
한단는데 본인의 의견과 정보를  
제시할 수는 없을까?



나와 관련 있는 정책,  
국민신문고를 통해  
참여하세요

3-8 민 · 관협치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 각 기관의 정책은 실제로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그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나 창구가 많지 않다. 또한 그런 기회나 창구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제공받지도 못하고 정보가 있어도 일일이 각종 공청회나 설명회를 찾아다니며 의견을 제시하기도 어렵다.

내가 사는 지역에 댐이 건설되거나 나의 생업과 관계가 있는 새로운 정책이 수립된다는 말은 막연하게 들었지만 누군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준 적도 없고, 설명 내용을 알게 되더라도 어디에다 어떻게 나의 의견을 내야 하는지 막막하게 남의 일처럼 지켜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대해 국민들은 범정부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각종 정책에 대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집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소통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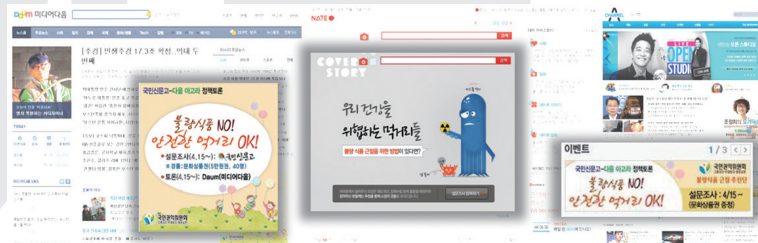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렇듯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 민 · 관 협치 공간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 현재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시스템은 약 100여개 기관의 정책토론 창구와 통합되어 있고, 올해 들어 총 1,121건의 정책이슈들이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였다.



전자공청회, 정책포럼, 설문조사 기능으로 구성된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시스템의 운영으로 정부 각 기관은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정책에 대한 홍보와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국민들은 정부 각 기관의 정책에 있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기관은 다양하게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다시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게 된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 민간포털과 함께 직접 범국민적 온라인 토론회를 실시한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불량식품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Daum, Nate 등 민간포털과 공동으로 실시하였고, 7월에 실시한 “사교육 경감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에서는 9,0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하고, 51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에는 아동 성폭력 문제를 이슈화하여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렇게 진행된 온라인 토론결과는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민원동향과 함께 종합 분석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제공되어 정책수립에 반영되고 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소통창구로 만들기 위해 행정기관 홈페이지, SNS 등을 국민신문고와 연계하는 범정부 정책소통 HUB 시스템도 구축하여 더욱 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t h e  
second  
chapter

# 정부3.0 스타일!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부처간 칸막이 제거 / 협업지원 시스템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행정 구현

정부 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여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정과제들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고 모든 공무원간 디지털  
협업 기반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다양한 형식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안전, 경제, 재난,  
재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등에  
장기적인 미래비전을 세워갑니다.

정부의 새로운 변화 스타일!  
국민을 중심으로한 스타일!  
지금 우리 정부가 일하고 있는  
3.0 스타일 입니다.

여름철이면  
혹시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걱정되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  
이제 식중독 정보와 학교급식 정보를  
공유하여 식중독 확산을 막습니다.



기관간  
**급식정보공유**로  
학생들을 식중독에서  
지킨다!





“ 학교 영양사 A씨는 여름철이면 식중독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 전체 식중독의 52.6%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 업체가 여러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어 동시다발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해도 우리 학교에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식재료가 납품되는지 확인에 시간이 걸려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것이 현실. 이러한 A씨의 불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과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 상호 연계됨에 따라 해소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5,300여 학교에 공급되는 식재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식중독 발생 시 위험 식재료를 공급받는 학교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따라서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3.0의 기관간 정보공유가 전국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사례로, 2013년 12월 17일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협업우수기관 포상’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2006년 6월, 수도권 지역에서 무려 31개 학교 3천여명의 학생들에게 식중독이 일어나는 대형 사고가 있었다. 모두 같은 업체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들이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던 9개 학교 9만여명의 급식이 중단되는 문제로까지 번졌다. 학교급식 사상 최대의 식중독 사건이었으며, 대형

급식업체에 공급되는 식자재 중 단 하나만 문제가 일어나도 전국적으로 식중독이 확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에 2008년 식약처는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 개 학교에서 식중독이 보고되면 해당 정보를 동일한 식재료를 쓰는 학교로 통보하여 식중독을 차단하는 것이 해당 시스템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문제는 각 학교에서 매월 영양사가 그 학교에 들어오는 식자재 정보를 수작업으로 등록해야만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약 30%의 학교에서는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이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지연 입력하여 정작 식자재에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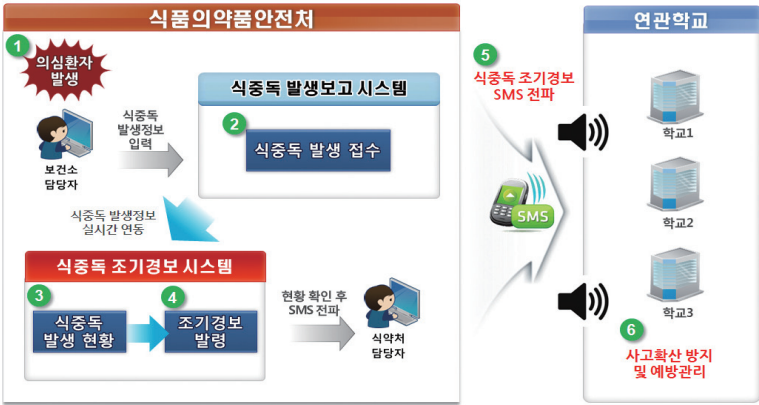
그런데, 학교가 사용하는 식자재 정보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구축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식자재를 납품받는 학교는 5,300여개에 이르기 때문이다. 해당 시스템 속에는 어느 학교가 어떤 식자재를 전자조달로 공급받는지 정보가 이미 입력되어있다.



이에 2014년 1월부터 식약처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두 시스템간의 정보를 공유키로 하였다. 이 두 시스템이 연계됨에 따라 식중독이 발생하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해당 학교에 납품되는 식자재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어 식약처는 즉시 해당 학교에 경보를 전파함으로써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위험 식재료를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도 식중독 확산을 막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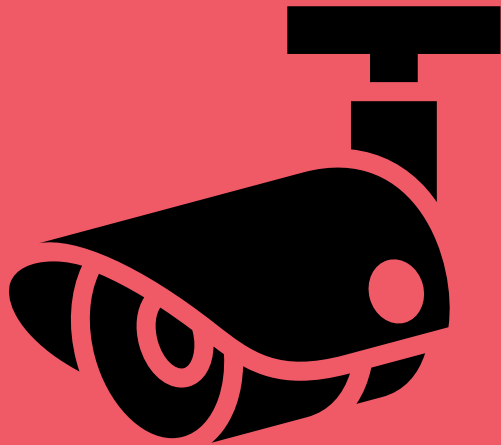
[ 학교 급식 식중독 확산 조기차단 체계 ]



구분	경보발령 절차
기존	식중독발생보고 → 해당학교에 전화해서 납품업체 등록 요청 → 학교 등록 → 납품업체에 다른 학교 납품 확인 → 연관학교에 조기경보 발령
개선	식중독 발생보고와 동시에 시스템 확인 후 연관학교에 조기경보 발령

# 머리 좋은 CCTV가 차량범죄자를 잡는다!

4-2 정보공유 · 경찰청



날로 늘어나는 차량을 이용한 범죄.  
그러나 우리 곁엔 언제 어디서나  
내 가족과 재산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머리 좋은 경찰,  
CCTV가 있습니다

### (사례1) 실시간 차량번호 판독

어느날 가정주부 A씨는 장보러 나온 김에 큰 딸 아이의 하교시간에 맞추어 학교로 가고 있었는데, 멀리 눈앞에서 검은 승용차가 멈추더니 딸아이를 납치하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A씨는 당황한 나머지 맨발로 달려갔으나 딸을 태운 차량은 쏜살같이 도주하였고, 눈물이 앞을 가려 차량번호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112 신고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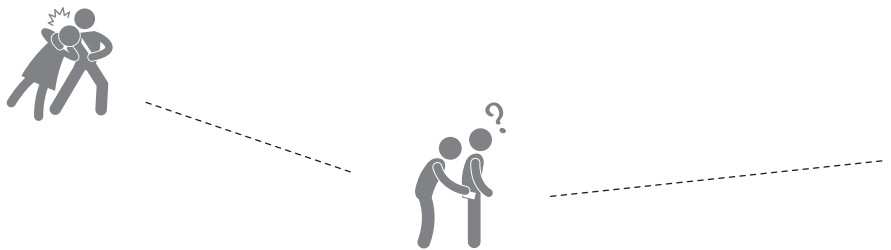
신고를 받은 112 상황실은 ‘수배차량 자동검색시스템’에 곧바로 등록하고, 차량이 CCTV에 포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수배차량 자동검색시스템에서 알람이 울렸고, 이를 확인한 경찰관은 가장 근처에 대기 중이던 순찰차에 검거지령을 내리고 순찰차는 신속하게 용의 차량을 추적하여 검거할 수 있었다.



## (사례2) 통과차량 검색

충청도 00군 00마을에 사는 B씨는 밭에서 수확한 고추를 도로에 널어 말리고 이웃마을 잔칫집에 잠시 다녀왔는데, 그 사이 고추를 누가 몽땅 싣고 간 것을 확인하고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며칠 동안 00군 경찰서는 또 다른 마을에서도 농작물이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하고 이를 동일범에 의한 절도사건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이 발생한 지역 인근의 방범용 CCTV를 모조리 확인했다. 범죄 발생 시간에 도로를 통과한 차량 중 동일한 차량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5대의 용의차량을 확인하고, 끈질긴 탐문 끝에 농산물 절도범을 검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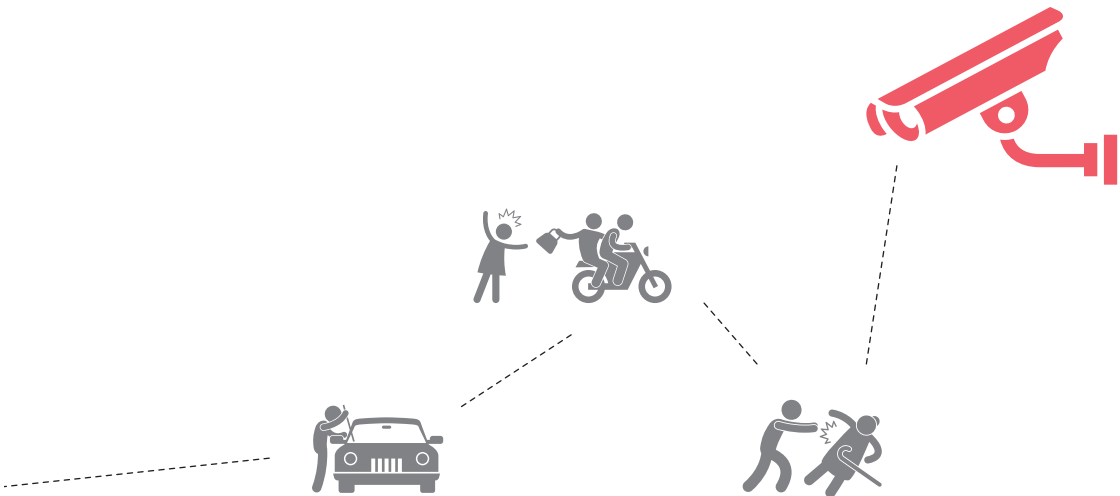


이제 차량범죄는 똑똑한 CCTV가 잡는 시대다.

수배차량 자동검색시스템은 그물망처럼 설치되어 있는 전국 6천여대의 CCTV에 차량번호를 판독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여 수배차량에 대한 실시간 검색 및 광역 수사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초당 2,000건의 통과차량 데이터를 총 150억 건까지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수배차량 통과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알려줘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하게 해준다.

내 가족과 재산을 지켜주는 또하나의 경찰, CCTV. 이제 CCTV가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가족 중 누군가가  
생사도 모른 채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떨까?



부처간 정보의  
**칸막이**를 없앴더니  
실종자 찾기가  
쉬워졌어요~!



4-3 정보공유 · 경찰청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실종아동 등은 42,169명에 달한다. 다행인 것은 경찰청에서 2011년부터 실종 관련 전산시스템이나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해 현재 99.9%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단 한사람이라도 실종의 늪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실종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안타까운 일. 이에 경찰청은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감사원의 도움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정보를 공유하여 실종자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1차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실종자들의 기초적인 연락처 등의 정보를 받아 7,922명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2차로 실종자 명의로 정신병원 및 요양원에 입원중인 사람과 병원 및 약국이용 기록 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확인한 결과, 8명을 찾는 등 짧은 기간 동안 총 8,695명의 실종자를 찾아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심중가족들 수색수사 \_



구체적 사례로 강모씨의 사연을 소개해 보면, 강모씨는 2012년 5월 8일 충남 천안에서 실종된 지적장애인이었다. 건보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강모씨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의료급여를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충남 천안동남서 A경찰관은 병원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강모씨가 입원중인 사실을 파악하고,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그간에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진다. 생사(生死)도 모르고 1년을 찾아 돌아다녔을 가족을 의료급여 청구내역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족의 입장에서 야속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정보도 서로 공유해 연금 부정 수급자를 발견할 수 있게 돕고, 경찰은 더 많은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어린이대공원 행사 \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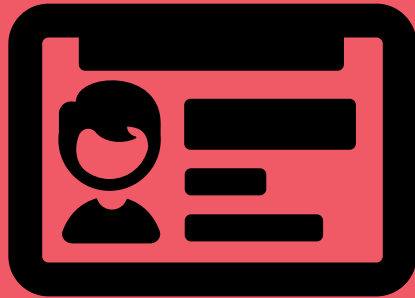


예그린모임에서 전단지배포 \_



# 해외에서도 운전면허증을 쉽게 갱신할 수 있어요!

4-4 정보공유 · 경찰청



운전면허증 갱신하러  
귀국할 수도 없고,  
인터넷과 대리인 방문 접수해서  
국제우편으로 받자니 시간도 돈도  
만만치 않고.  
해외에서의 운전면허증  
갱신 고민되셨죠?

독일에서 유학 중인 A씨. 독일에서는 독일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도 우리나라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운전을 할 수 있어서 중고차를 이용해 통학을 하였다. 그런데 유학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어느덧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되어 버렸다. 주위 유학생이나 교민에게 물어보니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나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A씨가 알고 있는 갱신방법은 인터넷과 대리인의 방문 접수뿐.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더라도 국내 주소로 면허증이 발송되기 때문에 독일에 이를 받으려면 만만치 않은 국제 우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번거로운 부탁을 해야 한다. 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2만원도 납부해야 되는데, 뽕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 고민이다.

그런데, 같은 학교에서 유학 중인 친구가 독일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통해 무료로 갱신을 받았다고 하면서 새 면허증을 들고 와 자랑을 한다. 친구의 말을 듣고 대사관에 문의해 보니, 2013년 5월부터 재외공관에 운전면허증 갱신 접수를 하면 외교부 행랑을 통해 운전면허시험장에 전달하여 갱신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2~4주 가량 소요되지만 새 운전면허증이 도착하는 동안 예전 운전면허증으로 계속 독일에서 운전할 수 있으니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다.

✚ **운전면허 해외갱신 시범 실시 국가 (15개)**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피지, 독일, 스페인, 핀란드, 남아공, 르완다, 이스라엘, 이란, UAE, 과테말라, 도미니카, 페루





대사관에 들러 갱신접수를 하고 돌아오는 길, 무거운 짐을  
덜어버린 듯 홀가분한 기분이다. 주위의 교민들, 유학생들  
도 그동안 운전면허증 갱신이 번거로웠는데 경찰청과 외교  
부의 적극적인 협업 덕분에 재외국민이 편하게 외국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모두 반가워한다.

2013년말부터 더 많은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비  
록 작은 일이지만, 국제화 시대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쟁력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  
「우회수입 체납자 타게팅 시스템」  
으로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숨긴 재산,  
바로 콕 찍어  
찾아내기!



2012년 11월 어느날 사무실에서 고액 체납자 내역을 분석하던 중, 일정한 패턴으로 빈번히 출입국을 하고 있는 체납자를 발견하였다. 조사 결과 그는 無재산이었으며 면담시에도 회사 부도 후 하루하루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였다. 체납자의 말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다. 조금 더 조사하기 시작하니 딸이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자신은 잡무를 처리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어 체납된 세금에 대한 납부 능력이 없다고 자진납부를 회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며칠 뒤 인천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려던 체납자를 불시 신변 검색하여 손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딸 명의 업체의 회계장부, 판매장부, 무역서류, 법인카드 등 확보 했고 본인이 동 업체의 실제 운영자임을 시인했고 현재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중이다.

이러한 체납자 적발을 계기로 부산세관에서는 정보분석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고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체납자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체납업체가 폐업한 시점에 동일한 물품을





기존의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하여 기존의 국내거래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신규업체를 추출하고 타인 명의의 우회수입 여부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특히 신규업체의 외환거래 은행, 수취계좌, 송금인, 수출입 신용장 등을 분석하여 체납자 주변인물 명의의 우회수입자도 파악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외환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주요 송금은행으로부터 자금출처 등 세부자료를 제공받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체납자 분석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관세청 내부자료 활용만이 아닌 국세청, 금융기관, 법무부 등 외부 유관기관 제공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체납자의 제3자 명의 우회수입 분석을 통한 숨긴 재산에 대한 집중추적으로 세수 증대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정부3.0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스템 구축 노하우와 체납자 추적 기법을 안전행정부,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등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공항출입정보 공유는 안전하고 빠른 여행의 지름길!

4-6 정보공유 · 관세청



관세청과 정부기관 간의  
상호 정보공유로  
여행자들에게는  
안전하고 빠른 공항이용을!  
정부기관에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출입국 관리를!

인천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6백여 편 가량의 비행기가 세계 각국으로 오 르내리며,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출입국 하는 국제 허브공항으로서 대 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세계로 열린 관문이다. 공항을 통해 출입국 해 본 사람은 누구나 알겠지만 여러 복잡한 절차가 있다. 다소 번거로운 출 입국절차는 국민생활 보호와 관세국경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며, 이 과정에서 여행자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빠르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느냐 가 공항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관세청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의 가치를 적극 도입하여,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 무부, 검역소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 력과 소통의 자세로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여행자 출입국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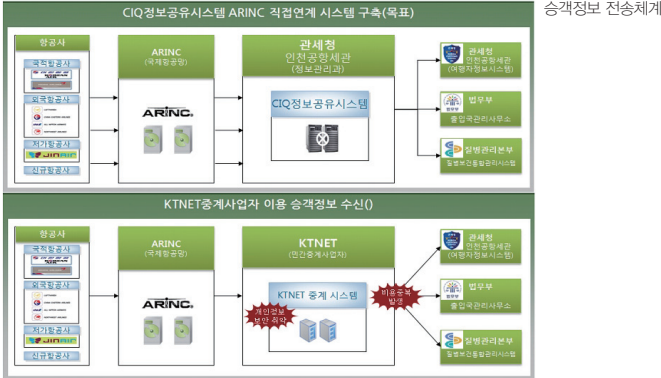


그 동안 CIQ(통관 절차, · 출입국심사, · 검역조사절차)기관은 업무시 필요한 여행자 정보를 항공사에서 각각 입수하고 소요 비용도 각각 지불하였는데 관세청은 우선 정보입수창구를 단일화 하기로 했다. 즉 정보입수에 따르는 비용의 중복을 제거하고 정보품질을 향상시켜 CIQ기관에 제공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CIQ기관과 정보단일화 창구 운영의 주체와 공유정보의 범위를 협의 하였으나, 그간 만연되어 있던 기관 이기주의 등으로 추진의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종속을 우려했고 내부적으로도 타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운영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담으로 인한 반대가 심했다. 기존의 구조 속에서 수익을 보고 있던 민간사업자의 반발도 있었으나 관세청은 정부3.0의 가치를 기반으로 각 이해집단을 설득하고 양보하도록 조율하여「CIQ정부기관 간 정보공유시스템 개발을 통한 여행자출입국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개발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CIQ기관으로 단일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은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CIQ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범여행자 등을 약3만5천 건 적발하였는데 이중 관세청 전체 마약검거 실적 중 51%가 포함되었다. 법무부의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입수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약6만4천 건의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었고 질병관리본부 역시 감염병 추적조사 등에 CIQ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여행자 입국시 CIQ기관의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져 여행자 입국시 소요되는 시간이 국제적 기준보다 3배 빠른 평균 12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13년 6월 국제공항협의회 주관 공항서비스평가에서 인천국제공항이 8년 연속 1위를 달성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 원산지 표시와 단속이 우리 일자리와 행복을 늘립니다

4-7 정보공유 · 관세청



국내 유명 브랜드라고 믿고  
비싸게 샀는데  
값싼 외국 모조품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원인) 요즘 물건 사러 가면 옆에서 물건을 뒤적이며 원산지를 본다는데 원산지가 뭐예요?

(관세청) 원산지는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처럼 어떤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민원인) 아 네.. 그런데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왜 표시하라고 하는 건가요?

(관세청) 혹시 유명한 국가에서 만든 제품인지 알고 사셨는데 나중에 다른 국가에서 만든 것을 알면 속았다는 느낌이 들고 기분이 많이 언짢은 일 없었나요?

(민원인) 글세.. 지금까지는 별 관심 없이 물건을 샀는데....

(관세청)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는 물품에 대해서 생산국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상품 구매 시에 그 생산지에 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비자가 상품 구매 여부 결정 등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민원인) 아~ 그러면 값싼 수입제품이 우리나라 제품으로 둔갑되어 팔릴 수도 있겠네요.

(관세청) 그렇지요. 저가의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비싼 값으로 판매되면 국내 기업의 생산기반이 침해될 수 있고 그러면 우리의 일자리도 줄어드는 거예요. 또 외국물품을 수입하여 포장 등 단순가공을 거쳐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면 우리나라 이미지도 나빠지는 거죠.

(민원인) 관세청에서 왜 다른 정부기관하고 함께 원산지표시를 단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번거롭지 않나요?



(관세청) 수입·유통업자 등은 다양한 단속기관의 중복단속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국회 등은 단속의 비효율을 지적하고, 국내 민간 생산자 단체 등은 업계 피해 호소 및 단속강화를 요청하여 왔어요. 특히 도소매 판매업자는 단속과 처벌위주의 원산지 관리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등 지난 수년간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국민안전과 중소기업 피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원인이 되어 왔어요.

(민원인) 그러면 단속기관간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관세청) 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정책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과 함께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신설해요.

(민원인) 단속성과도 많겠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가요?

(관세청) 관세청은 다른 단속기관 뿐 만 아니라 생산자·소비자 단체와 합동단속을 통하여 판유리 국산오인표시 6개사, H형강 표시방법위반 7개사, 중국산 석재 및 목재 허위 조달납품 4개사, 수공구 360만점을 적발하는 등 584개 업체, 3,107억원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어요.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단속기관과 간막이를 해소하고, 국내 생산자·소비자 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원산지표시 단속과 홍보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 건강·안전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신청을 위한 농지원부, 이젠 제출하지 마세요~

4-8 정보공유 · 국세청



농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면 관할 자치단체에 가서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납세자 :**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민원 담당 :** 농지원부 등 경작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납세자 :** 농지원부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민원 담당 :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납세자 :** 아니 난 서울에 있는데 거기까지 언제 다녀오나요? 꼭 농지원부를 발급받아야 하는 건가요?

8년 자경 감면신청은 연간 10만건 이상 신청되는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감면 항목입니다. 그만큼 농지원부에 대한 국민들의 발급수요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면을 받기 위해서 농지원부를 직접 해당기관에 찾아가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정보화가 고도화된 시대에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며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현재 여러 공공기관 상당부분의 민원서류가 행정정보공유를 통해 연계되어 국민들의 민원처리시 제출이 생략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세청에서는 농지원부 수동발급에 대한 문제인식을 통해 관계부처인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농지원부 조회 및 발급 자료공유 연계시스템을 위해 업무 협의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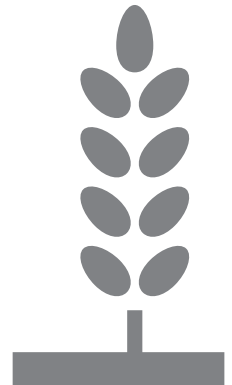
현재



농지원부



향 후



빠른 시일 내에 업무협의를 완료하여 농지원부를 행정정보  
공유센터를 통해 연계함으로써 납세자가 직접 관할 지자체  
를 방문하여 농지원부를 발급받는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운전면허증, 신체검사 받지 않고 발급 · 갱신 받으세요~!

4-9 정보공유 · 경찰청·복지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갱신 받을 때 가장 번거롭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웠던 신체검사.  
게다가 4,000원의 검사비용까지~!  
불편하셨지요?



2013년 8월1일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갱신받을 때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민원 담당** : “최근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신 적 있나요?”

**민원인** : “건강보험공단에서 1년 전에 받았어요.”

**민원 담당** : “그럼 제가 정보를 직접 봐도 되겠습니까?”

**민원인** : “제 검사 내역을 모두 보시는 건가요?”

**민원 담당** : “아니요. 시력과 청력에 관한 정보만 보입니다.”

**민원인** : “그럼 따로 시력, 청력 검사를 안받아도 되는 거죠?”

**민원 담당** : “네. 개인정보 동의만 허락해 주시면 됩니다.”

**민원인** : “간편해져서 너무 좋네요. 신체검사비용 4천원도 절약되었어요.”

정모씨는 이날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왔다가 신체검사 없이 적성 검사 신청서 용지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사인을 하고 2-3분 내에 바로 갱신된 면허증을 받았다.

그동안은 신체검사를 면제받으려면 대상자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을 한 후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지난해 이용률은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다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공동이용시스템에 접속해 시력·청력 검사 결과를 열람한 뒤 발급·갱신을 해주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이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자료를 공유하여 국민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한 정부3.0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다.



현행



제도 시행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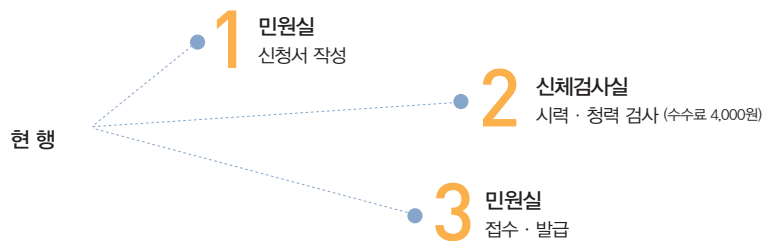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검진 정보 중 시력·청력 정보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에 필요한 서식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행 가능한 방법까지 모색하였다.

이 제도로 연간 약 160만명이 혜택을 보고 약 161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전 국민의 56%에 해당하는 2,800만명의 운전면허소지자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 8월 시행 이후 지난 4달간 약 30억원의 비용절감효과 (약 19만3천명 대상)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절차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시)



1

민원실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공동이용 동의) → 접수·발급

※ 운전면허소지자 2,800만명,  
연간 160만명(신규 74만, 갱신 86만), 161억원 절감효과

# 산림재해 0(제로)를 목표로 산불 · 산사태 · 병해충을 통합관리한다

4-10 정보공유 · 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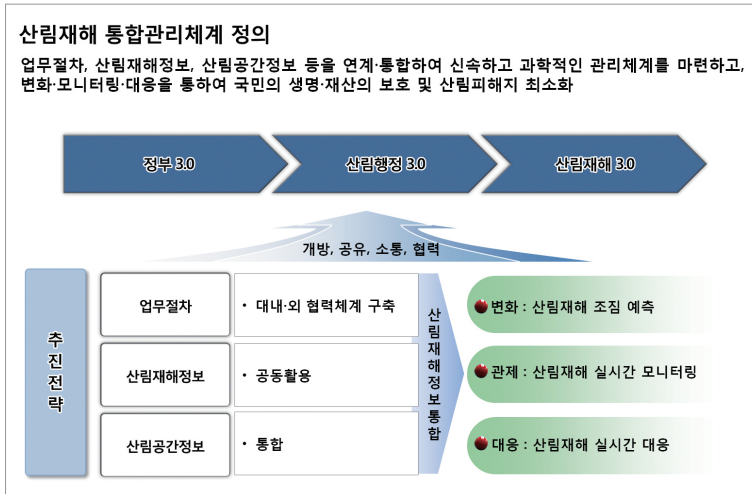


산림재해 정보공개 및 공유로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제 산림재해 걱정은 그만!

순간 아찔했다. 지하철 옆자리에서 혀를 차며 신문을 읽고 계시는 할아버지 눈길이 멈춘 기사를 보고 말이다. 지난 주말 오랜만에 나는 아내와 함께 땀을 흘리며 등산을 하고 아내가 새벽 일찍부터 준비한 김밥을 먹으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오랫동안 둘만의 추억을 남기고자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여러 번 찍기도 했다. 근데 바로 그 장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해 인근의 나무 수백 그루를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됐다는 기사였다.

늘 우리를 포근히 감싸 주는 고마운 존재였던 산이 한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돼 버렸다는 사실에 덜컥 겁이 났다. 그리고 보니 최근에 산과 관련한 재해뉴스를 많이 접했던 것 같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으로 기후·지형·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봄이면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여름에는 연평균 강수량의 대부분이 집중되고 태풍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이 빈번한데다가 근래에는 기후변화에 따라 남방계 해충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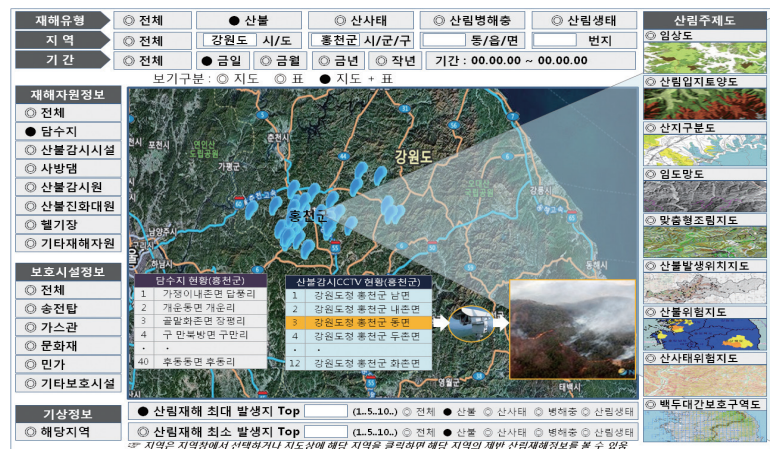


여기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가 대형·복합화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산림을 총괄하는 산림청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순간 밀려왔다. 하지만 이젠 그런 불안감을 떨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산림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산림재해 통합관리 시스템 덕분이다.

산림청에서는 2017년까지 산사태뿐만 아니라 산불, 병해충과 같은 산림 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중인 계획에 따르면 산림청에서는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임도망도

등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산림주제도를 통해 3대 산림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여기에다 재난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기상정보, 한국전력의 고압선 정보, 소방방재청의 일반 재해 정보를 연계하여 재해 발생 예측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의 국가지정번호, 국토교통부의 지형도,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치도 등 다부처의 공간정보를 교차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 중에 있다고 한다.

기관 간 정보 공유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걱정은 그만하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꿔본다.



산림재해 의사결정 서비스 메인 화면(안)

# '선박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 개방으로 해양서비스 2NE1실현! 2N(방문 NO! 서류 NO!) + 1E(Emotion)

4-11 정보공유 · 해양경찰청



입출항을 할 때도,  
사고가 났을 때도, 기름을 넣을 때도,  
해경파출소의 '도장'을 받고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  
너무 번거러웠죠?

## **+ 자가용과 배에 관한 불편한 진실**

### **출근을 할 때.....**

매일 아침 출근길! 자가용을 타고 집을 나설 때 아무도 뭐라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내 배를 타고 바다로 가려면 뭔가 할 일이 많다. 출입항 신고서, 보험증서, 선원승선원 명부 등 5가지 이상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는 해양경찰의 파출소를 방문해서 출항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찍어주는 관인을 받아야만 내 배로 바다로 나갈 수 있다.

### **주유를 할 때.....**

기름을 주유할 때도 자동차야 주유소에 가서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주고 넣으면 되지만 배는 어떨까? 생업을 위해 지원하는 면세유라는 이유로 수협을 찾는다. 면세유는 배를 운항한 실적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어서 수협에 가기 전에 반드시 해양경찰의 파출소를 찾는다.

“0월 0일 내가 여기서 출항신고 했죠? 그때 신고한 서류 1부 복사해 주세요!” 경찰관은 컴퓨터 전산망을 검색하여 서류 한 장을 건네준다. 어민은 그것을 들고 다시 수협으로 가서 서류를 보여주고 받고서야 기름을 살 수 있다.

### **사고가 났을 때.....**

요즘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가 웬만한 건 다 해결하고 나머지 일들도 보험회사 직원이 해결해 준다. 그렇다면 배는 어떨까? 어민들에게 수협 공제라는 보험은 자동차의 책임보험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려면 또 다시 해양경찰의 파출소를 들러야 한다.

“내가 0월 0일 여기서 출항신고 한 서류 있죠? 그리고 우리 선원 중에 000이 다쳐서 보험처리 하려는데 같이 제출한 선원승선신고 사실 확인서도 하나 때 주세요!”

경찰관은 또 컴퓨터 전산망을 검색하여 서류 몇 장을 건네준다. 어민을 그 것을 들고 또 다시 수협을 찾아간다.



#### ✦ 선박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 활용가치

해양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는 어민들 생계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 들이다. 수협과 지자체는 어족자원 관리와 어촌 경제를 위해 매년 일정 부분의 어선을 감척해 나가고 있다. 이때 감척 보상액을 산정을 위한 소득 증빙자료가 없어 어민은 물론 감척 사업자인 수협과 지자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때 조업을 위해 출입항을 했던 기록은 소득 산정의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선원 중 예비군 훈련 소집 대상이 되면 그 기간 중에 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어선원의 승선여부에 관한 정보는 오직 해양경찰만이 갖고 있다. 또 선원과 선주간의 임금 체불에 관한 소송이 발생했을 때 선원의 승선 사실을 입증해 줄 유일한 자료는 해양경찰만이 갖고 있다. 이렇듯 해양경찰의 선박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용도는 어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 ✚ 정부3.0을 통한 문제해결

그동안 수협, 자지체, 해수부는 해양종사자와 어민이 면세유를 신청하거나 보험공제, 해기사 면허 갱신이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증빙서류를 요구했고 어민들은 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시 수협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실정이었다.

정부3.0은 바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그간 선박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선박출입항 신고사실 확인서’와 ‘선원 승선 신고사실 확인서’에 대한 이용도가 전체 민원서류 발급 건수 70,584건의 75%(53,787건)로 가장 높았다. 해양경찰청은 우선 가장 비중이 높은 민원서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 출입항 및 선원승선정보 제공’을 우선 실시했다.

이러한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해양경찰 파출소를 방문해야 했던 방문민원은 92%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전체 민원서류 발급 건수도 30%가량 줄어들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단순 수치의 감소 이외에도 생업 종사자의 시간 절약, 간접비용 절감 및 불편 발생 요인 제거 등의 효과 등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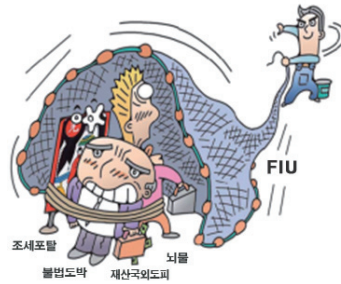


##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합니다

4-12 정보공유 · 금융위원회



투명지갑이라고  
세금 꼬박꼬박 내는 직장인들,  
탈세, 편법증여, 비자금 조성 등 지하  
경제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났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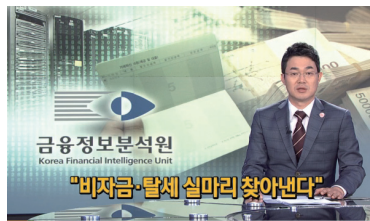
이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이 나섰다! FIU는 법집행기관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나 탈세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지하경제 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탈세목적의 편법증여, 국외 재산도피, 비자금 조성 등 우리 경제를 좀 먹는 지하경제는 합법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이용한다. 금융회사가 이러한 위장거래를 FIU에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면 FIU는 불법 혐의 정보를 선별한 후 엄격한 심의를 거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며,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 정보도 심의를 거쳐 법집행기관에 제공한다.

또한, FIU법 개정으로 국세청과 관세청에 조세·관세 탈루혐의 정보와 체납 관련 정보 등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관간 정보공유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런 FIU의 “자금세탁방지 종합네트워크 시스템”은 법집행기관과 문서처리를 자동화하고 각 기관의 시스템과 상호 연계하여 범죄나 탈세관련 정보를 대량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3.0 과제(정보공유와 협업)의 실현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FIU는 사회를 위협하는 검은 돈을 차단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며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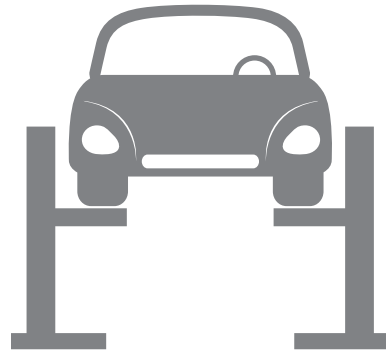




## 자동차 리콜 신고처리, 소비자 안전이 최우선!



5-1 정보공유 · 국토교통부



새로 산 자동차에  
결함이 생겼을 때 여러 기관에  
이중 신고를 해야 해서  
그동안 불편하셨죠?



“ 나운전씨는 새로 산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자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에 각각 자동차 결함 신고  
를 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운전씨의 신고 내용을 분  
석한 결과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으  
로 판단하여 제작결함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제  
작사가 해당 장치의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제작사는 이를 신문 공지 등의 방법을 통해 소  
비자에게 알렸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나운전씨  
의 민원과 유사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리콜내용을 해당  
민원인에게 알려 신속히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리콜조치  
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

위의 가상 시나리오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는 자동차에 하자(결함)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교통안전공단(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과 한국소비자원에 이중으로 신고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자동차의 하자(결함)에 대한 관리는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 모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제작결함(리콜) 및 하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모든 공산품에 대한 품질하자에 대한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어 제작결함과 품질하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 두 기관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안전행정부는 정부3.0의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정보공유가 가능한 업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결함 조사와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고 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 기관의 협업체계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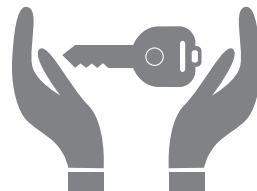
✚ 서로 다른 목적과 업무 영역을 가진 기관 간 협업을 도출하는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협업을 통해 기관의 업무 영역을 확장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공통분모를 찾아 양 기관의 실무자가 협의의 장에 함께 하도록 했으며, 협업의 필요성이 인식된 후에는 실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간부의 관심도를 제고하여 보다 효과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 결함 및 하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업 체계 구축으로 소비자는 기관에 관계없이 결함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양 기관은 신고정보의 통합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2012년도의 경우 두 기관에 접수된 자동차 결함 신고는 8,577건이며 이중 리콜이 시행된 자동차 수는 1,079,019대이었으나, 양 기관의 협업으로 보다 신속한 결함 및 하자에 대한 조사와 리콜이 시행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3.0의 원칙에 따라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은 정보를 개방하고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에 대한 적시 대응 및 다발성 품질하자에 대한 자동차 제작사의 일괄 시정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동차 소비자 권익보호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신선농산물 항공수출지원으로 수출업계에 희망의 숨결을 불어넣다!

5-2 정보공유 · 농림축산식품부



신선농산물, 항공운송이  
빠르고 좋은 줄 알지만  
그동안 높은 물류비용으로  
선박운송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업계에 밝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농수산물식품업계는 주로 선박을 이용해 상품을 수출해 왔다. 그러나 선박운송은 항공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송 중 온도 및 습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의 해상 운송을 거치고 나면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일찍부터 항공운송을 추진해왔으나, 높은 물류비용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을 겪었다. 비싼 운임을 부담하기 어려운 수출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박 운송을 감행했고, 선도 유지가 관건인 신선농수산물은 해외시장에 도착 후, 품질 하락으로 인해 폐기되거나 수입업체의 클레임에 걸리곤 했다.

이에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는 작년 10월, 국내 최대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신선농산물 항공수출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먼저 품목별 농식품 수출업체 모임인 수출협의회를 통해 수출물량을 규모화 하였고, 대한항공과 업체의 협의 중재를 통해 대폭 할인된 협정요금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신선농산물 수출이 주로 일본 시장에 편중되어 있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러시아 시장에 딸기 수출을 공략 하였으며 이는 한국산 딸기가 현지에서 이스라엘산 시설딸기와 경쟁하는 가운데 품질에서 단연 우위를 점했지만, 높은 항공운임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에서 취약하다는 평을 받고 있었다. 항공운송 MOU 체결을 통해 러시아 딸

기 수출 항공운임은 약 17% 절감됨으로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었고, 해상으로 35~40일 걸리던 운송기간도 1일로 대폭 감축되어 신선도 또한 높일 수 있었다. 그 결과, 운임 적용기간인 7개월 간( '12.11월~' 13.6월) 약 3톤에 불과하던 딸기 수출이 12톤으로 266% 증가하였다. 러시아 수출 공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를 발판 삼아, 러시아 현지의 대표적 고급 식료품 유통업체인 'Globus Gourmet'과 딸기 등 한국산 신선농수산물 공급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판로를 확대한 것이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운임 절감에 그치지 않고, 항공수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갔다. 2013년 5월, 대한항공·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는 수출 전 신선도 저하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냉동·냉장 시설, 신선농산물 센터 건립 등 수출기반 확충에 힘쓰기로 협의했다. 또한, 대한항공과는 특별항공운임 적용 시장과 품목을 확대하여, 이번엔 약 7억 인구의 유럽의 새송이버섯 수출 확대를 위해 약 23%의 항공 단가를 인하하였고 그 결과, 유럽 항공수출은 협약체결 이후('13.6~11월) 전년 동기대비 23톤에서 올해 328톤으로 대폭 늘어난 1,426%의 괄목할만한 성장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운임절감에서 수출인프라 확충까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항공수출 확대 노력은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신선농산물의 이미지 제고 노력으로 해

외시장 반응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운송기간의 대폭 단축으로 모든 상품을 신속하게 현지까지 운반함에 따라 상품의 신선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이로써 품질로 인한 수입업체의 클레임이 대폭 줄어들었다. 또한, 이러한 품위 상승은 수출품 단가 인상 및 한국산 이미지 제고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

신선농수산물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의 장거리 시장 항공수출 개척 노력은, 시장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출 및 수출 확대를 통한 농가 및 수출업체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항공화물 수요 저하로 골머리를 앓던 항공물류업계에 ‘신선농산물’이라는 신규 항공화물 수요를 발굴케 하며,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물류여건 개선은 신선한 한국산 상품을 세계 각국의 식탁에 오르게 하며, 결과적으로 ‘Fresh Korea’의 이미지를 구축하게 하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한국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대한항공, 인천공항공사 협약 체결



가내식 (딸기)

##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해 여가부-교육부가 팔을 걷었다

5-3 협업 · 여성가족부



학교를 그만 두는 청소년이  
매년 6~7만 명,  
학교 밖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청소년이 28만 명,  
모두 우리가 보듬어야 할  
아들 딸입니다.

학교를 나온 대부분의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 두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무엇을 해야 할 지 알려주지도 않는 소위 “무중력” 상태로 학교 밖을 배회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정, 학교 등의 관심에서 떨어진 저학력, 사회적 성장 기회의 상실로 워킹푸어, 빈곤층 등 미래의 복지수요자로 전락할 위험이 큰 상황이다.

위기 청소년 지원은 학교 안팎의 구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TF(’13.9월)를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체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활용하여 “학업중단 숙려제”를 전국 확대 실시(’12년 16개 센터 → ’13년 136개 센터) 하는 한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시간제, 출퇴근제” 위탁형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학교 부적응 청소년에 심리적 안정과 또래활동 중심의 교육을 제공(35개기관 236명 참여) 하고, 학교 부적응 청소년 대상 ‘학교 부적응 생활 태도 개선’ , ‘학업 복귀 동기 강화’ , ‘자립생활 기술’ , ‘직업현장 체험’ 등의 종합 과정인 「두드림·해밀」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에서도 교육과 진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아울러 2013년 11월 28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정책관계기관 협의회 (위원장 : 여성가족부 장관) 안건으로 상정 및 발표 ('13.11.28)하고, 학업중단 위기 징후(결석, 수업태만 등)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교, 지역단위 협업을 통해 교내외 상담을 의무화하고, 학교 밖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스마트교실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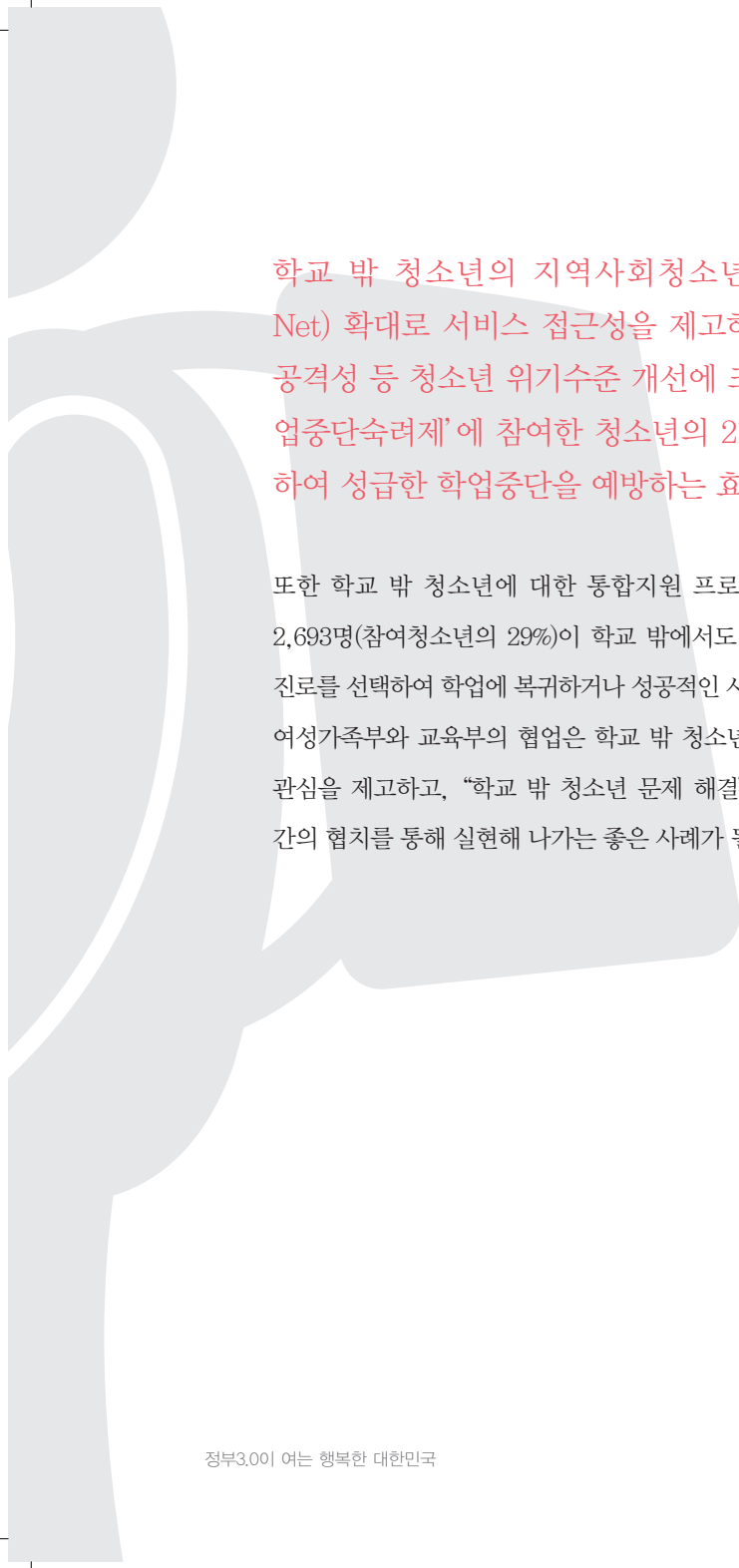


검정고시 합격증 수여식



직업교육훈련 '바리스타과정'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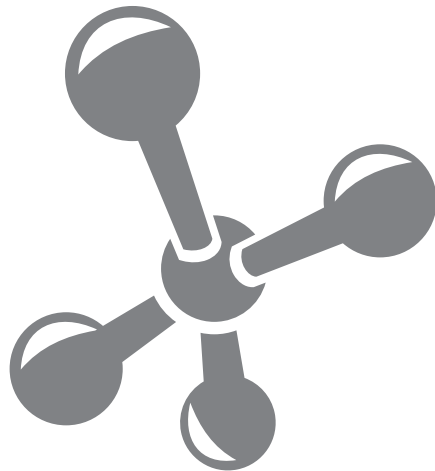
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확대로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울, 불안, 공격성 등 청소년 위기수준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청소년의 21.4%이상 학업을 지속하여 성급한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 프로그램(두드림·해밀)을 통해 2,693명(참여청소년의 29%)이 학교 밖에서도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진로를 선택하여 학업에 복귀하거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이루어 내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협업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심을 제고하고, “학교 밖 청소년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미션을 기관간의 협치를 통해 실현해 나가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부 전담 조직은  
어떤 곳일까요?



화학사고로 인한  
국민불안,  
부처 협업으로  
해소하다



5-4 협업 · 환경부



중앙부처,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칸막이를 허물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 사고시 동시 출동 대응하는 새로운 문제 해결형 협업조직을 정부 최초로 구성한다.

현 정부조직 체계는 화학물질을 부처별 기능에 따라 각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사고 예방·대응 정책과 현장 활동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그간 환경부는 주민건강 보호, 환경오염방지, 고용부는 근로자 보호, 산업부는 고압가스 관리, 산업단지 관리, 방재청은 응급조치 및 인명구조 활동을 목적으로 화학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각각 펼쳐왔다.

하지만, 작년 가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연이어 발생하는 화학사고로부터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7월 19일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범정부 화학재난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이 확정되어 화학사고 예방·대응 조직의 큰 근간이 되는 6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와 화학물질안전원이 설치되게 되었다.

구미, 울산, 여수, 시흥, 서산, 익산 6개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화학사고 예방·대응 유관기관들이 센터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두 들어와 통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조직 형태이라 할 수 있다.

합동방재센터는 환경부, 고용부, 산업부, 방재청, 지자체, 산업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산, 산업단지공단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여 화학사고 예방·대응 분야의 인력·예산·장비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년에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부처별로 안행부에 요구한 공공 인력 증원 요구는 826명이었지만, 정부3.0에 기반한 수평적 협업조직인 합동방재센터의 설치로 138명의 인력 증원으로 줄일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합동방재센터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대한 통합 지도·점검이 실시되고, 사고 발생 시 현장에 함께 출동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두될 수 있는 문제점을 조속히 해소하는 기관간 협의 통로인 “운영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각 합동방재센터별로도 기관간 “실무협의회”를 상시화 하

여 소통과 협력·협업을 강화된다. 운영위원회는 주로 합동방재센터의 연간 운영방향과 국가 단위의 결정사항을 논의하게 되고, 실무협의회는 센터별 수행 업무에 대한 사전 계획, 사고대응결과, 일정조정 등을 협의·조정·공유하게 된다.

한편, 합동방재센터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센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화학사고 예방·대응 전문가 집단인 화학물질안전원도 함께 설치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6개 합동방재센터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화학물질 안전 및 사고대응 정보의 통합시스템 구축과 제공, 사고대응 매뉴얼 개발 및 정비와 사고예방 활동, 화학물질 취급자·소방관 등의 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비로소 우리나라에도 처음으로 화학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전담할 전담 조직이 처음으로 설치되었고,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부 조직 체계가 구축되었다. 합동방재센터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설치는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게 되었다는 점과 함께 정부3.0이라는 국정이념을 활용해 문제 해결형 협업 조직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부 조직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식품안전정보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어요~

5-5 협업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천의 모 학교급식에 부적합 식재료가  
사용되었다는 정보를 알게 된 A부대  
급식담당관 김 중위,  
식재료 구매에 앞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관련 업체의 행정처분정보를  
확인하고, HACPP정보 등을 활용하여  
부적합 식품 납품이력이 없는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새 정부 조직개편으로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일원화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되어 식품안전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  
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환경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식품안전 또는  
사고 등에 관한 정보공유가 어려운 실정이었고, 각 부처 간 정책목표의 우  
선순위가 다르거나 부처 내 정보관리의 차이로 인하여 부처 간 연계가 되지  
않거나, 충돌이 발생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집행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예 : 식품업체 정보관리를 위해 국방부와 교육부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식약처와 지자체는  
인·허가 번호를 사용하여 상호 정보연계 및 활용에 제약이 많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및 227개 시·군·구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를 통합하여 공동활용하고 소비자·생산자·학계 등 대상 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범정부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12개 협업기관의 168종 업무 및 정보를 상호 연계·활용을 위한 표준화를 진행하였으며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추진전략 설명회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범정부 협의회





이를 바탕으로 2013년 12월에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2014년부터 식품안전 행정정보 통합을 시작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식품안전정보 통합·공유 플랫폼이 완성된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마련되면 학교급식 및 식품 관련 업체에 대한 인허가, 지도단속, 군 부대급식, 농축수산물 안전, 전자통관, 보건범죄단속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제반 정보는 하나로 통합되고, 공유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건 발생 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되며, 산업체 및 대학, 연구소, 일반 국민과 같은 민간 영역은 식품안전정보 및 관련 통계를 통합 창구에서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된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은 정부기관간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서 개방·소통·협력·공유의 정부3.0 가치실천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뉴스에서 접하는  
소위 사회 지도층들의  
역외탈세 소식에  
국민 여러분 많이 속상하셨죠?



관세청과 국세청이  
손잡고  
역외탈세를 차단합니다

5-6 협업 · 관세청 / 국세청



부처 간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부처 간 칸막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민감한 수사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는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과 국세청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역외탈세를 철저하게 단속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혐의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관세청은 국경을 넘나드는 재화, 돈에 대한 총체적 관리 기관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이루어지거나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즉 역외탈세는 관세청이 단속하는 불법외환거래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관세청과 국세청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혐의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상대 기관에서의 혐의 추적도 용이해지는 것이다.

최근 뉴스타파에서 조세회피처에 패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정보를 공개하여 이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져나갔다. 편법과 탈법을 동원한 역외탈세행위는 정직하게 사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했다. 가뜩이나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서민들은 이들의 세금부담까지 떠안게 되고, 대체 이 나라에 조세정의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기관의 정보공유 노력은 참으로 반갑다. 보수적이고 딱딱할 것만 같던 관세청과 국세청이 ‘역외탈세 단속’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손을 맞잡은 것만으로도 대단한 발전인데, 벌써 소기의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3.0 아래 두 기관이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에 들어간 3월부터 10월까지 벌써 166건의 혐의거래정보가 교환되었고 그에 따른 역외탈세 추징액이 615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13년 한 해에만 923억원의 세금 징수가 기대된다. 이는 추운 겨울 밥을 굶어야 하는 결식아동 66만 명에게 방학동안 따뜻한 밥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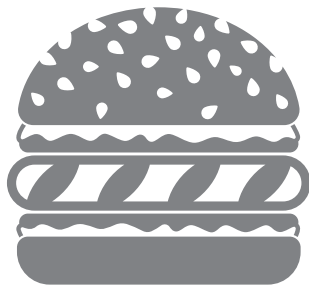


이뿐만 아니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과세를 위한 각종 신고자료의 공유를 통해 매년 1,000억원의 추가 세수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이 지원되는 인공관절, 심장 수술 재료와 같은 의료재료의 수입 가격을 부풀려 건강보험금을 부담하게 수령한 11개 업체 485억원을 적발하기도 했다. 지난 8개월간의 노력 끝에 '13년 한 해에만 약 1,923억원의 세수 증대와 485억원의 국고 손실 방지라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다.

관세청의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노력은 인력이나 예산의 투입 없이 적극적인 정보공유만으로도 연간 2,4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물론 고질적인 부처 간 칸막이가 한순간에 허물어지지지는 않겠지만, 정부3.0에서 추진하는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 부처 간 소통과 협업으로 장병먹거리에 안전과 신뢰를 높인다

5-7 협업 · 방위사업청



최근 TV 예능방송의 병영생활 체험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군대음식에 대해 신드롬에 가까운 엄청난 호응이 쏟아졌다. 군대리아, 뽕글이, 건빵 등 군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에 많은 국민들이 큰 호기심을 보였다.

군대에 간 내 아들, 딸, 우리 형, 누나, 내 동생이 먹는 먹거리에 애정 어린 관심만큼이나 그동안 오해와 불신, 지탄의 목소리도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방위사업청은 급식 질 향상과 이물질 최소화, 부정한 업체의 군납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등 장병먹거리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민간에서 적용하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을 장병급식 품목에도 확대 적용하여 품질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계부처(식약처 등 7개기관)와 협력을 통해 민·관·군 합동위생 점검과 불시 긴급위생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다.

✦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의 제조-가공-유통-조리단계를 거쳐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중요 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 관리시스템



또한 급식품목의 사용자 불만 및 하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공유와 개방을 통하여 군 급식 안전성을 더욱 높였다. 무엇보다 군 식품류 하자발생 건수가 전년대비 350%나 대폭감소 하였으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장병먹거리의 획기적인 이미지 개선, 장병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밀과 같이 믿을 수 있고 몸에 좋은 우리 농산물과 멸치, 표고버섯 가루 등 천연조미료의 보급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신세대 장병들의 기호를 반영하여 소시지빵, 모닝빵, 씨리얼, 감자튀김 등 집과 학교에서 먹었던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여 우리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식생활 만족도도 여론조사 결과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군 식품의 신뢰와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당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여 입찰하는 행위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방위사업청 간의 소통과 협업 강화로 편법입찰을 차단하여, 청의 소송 승소율을 대폭 향상 시켰다. 특히 소송 시 발생하는 장병 미 급식 사태와 연계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약 500억 원의 국가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이는 국가 공공계약 질서를 바로잡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에 따라 국민들이 가졌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도 향상되면서 군 급식도 과거에 비해 월등히 좋아졌지만 병영생활을 하는 장병들의 눈높이도 함께 높아졌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은 장병 먹거리의 질적, 양적, 위생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해 항상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고객맞춤형 계약, 원가시스 템 개선을 통해 장병들이 선호하는 먹거리를 적시에 구매하는 개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원가 아웃소싱 등도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과 내 아들, 딸, 우리 형, 누나, 내 동생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장병 먹거리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이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TV 예능 장병 먹거리 체험, 방송인 생해밍턴 \_



장병급식 계약업체 불시 위생점검 \_



장병급식 안전하고 맛있게 먹어요 \_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권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창업 및 사업화가 될 수 있는지  
고민 되신다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재권에서 창업, 사업화까지  
특허청 · 미래부가  
협력해드립니다

5-8 협업 · 특허청

정부기관별로 아이디어 관련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었지만, 권리화 및 사업화에 대한 고민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지원을 개인들이 찾기로 쉽지 않다. 그래서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들은 이렇다가 자신의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이라면 특허청-미래부의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MOU 체결 소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 특허청-미래부,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화 및 보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특허청과 미래부는 지난 9월 11일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식재산, 창업 및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6대 공동 협력과제를 채택하고 이들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 ✦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온라인 교류·협력의 장 - 창조경제타운

특허청, 미래부는 상상과 도전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온라인 교류·협력의 장으로서 「창조경제타운(<http://www.creativekorea.or.kr>)」을 구축하여 9월 3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전하여 신기술, 신산업으로 성공하도록 다양한 경제주체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아이디어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이다.

### ✦ 아이디어를 돈 되는 특허와 사업 아이템으로 바꾸다

#### – 국민행복기술 구현사업

특허청은 창조경제타운에 모아진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를 특허와 사업 아이템으로 구현해주는 국민행복기술 구현사업을 연계 추진한다. 1차 서류심사와 기술의 혁신성, 기술 경쟁력, 시장 트렌드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아이디어별로 특허분석 전문가, 트리즈(TRIZ) 전문가, 기술사업화 전문가 등으로 전문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약 한 달간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켜주게 된다.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과정을 통해 탈바꿈된 실속형 아이디어들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는 아이디어 사업화 멘토링 서비스와 연계시켜 창업까지 지원된다.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면 시제품 제작은 물론 사업자 등록, 마케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 ✦ 아이디어도 쉽게 보호받을 수 있는 창조경제타운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화로 연계해주는 ‘아이디어 플랫폼’에 있어서 아이디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창조경제타운에 ‘아이디어 보호 요령’ 코너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창조경제타운  
주요 서비스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보호 코너



✚ 창조경제타운의 아이디어 사업화와 보호를 위해,  
부처의 벽을 넘어 협력하다.

앞으로도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창조경제타운이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 및 사업화로 연결되고 잘 보호되며, 이를 통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전초기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허권자가 주소변경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해 특허권을 잃어버리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과 안행부가  
정보공유의 손을 잡았습니다.



5-9 협업 · 특허청



## 출원인 주소자동변경시스템으로 특허권 소멸을 없앤다!

**✦ 제발, 저의 특허권을 되살려주세요!**

지난해 5월 발명가 A씨는 자신의 특허를 사업화하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업무차 특허청에 들렀다가 자신의 특허권이 소멸되었다는 담당자의 말에 망연자실했다. 소멸이유는 특허권 유지에 필요한 연차등록료 미납이었다. 특허권 등록후 권리의 등록유지를 위해서는 4년차부터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지 못한 것이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원래 납부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등록료와 실시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한내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업준비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 3배의 등록료는 여

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2년 전 사업확장을 위해 이사를 했는데 바뀐 주소를 미처 특허청에 신고(‘출원인 정보변경 신청서’)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특허청에서는 뜻하지 않게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연차등록료 납부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이 안내서가 이전 주소로 발송되는 바람에 연차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친 것이다.

[ 연차등록료 납부기간 및 안내서 발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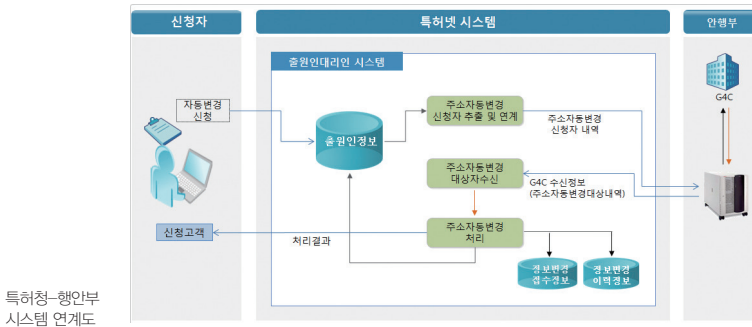
특허청에 신고된 특허 출원인의 주소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지 변경 신고만으로 자동 변경되지 않아 별도로 ‘출원인 정보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했던 것이다.

#### ✚ 특허청, 안전행정부와 소통하다.

특허권자와 같은 특허고객의 주소지 변동을 자동으로 특허업무에 반영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 특허고객의 전입신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특허업무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해결방안은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 시스템과 특허청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이었다. 일단 추진방침이 서자, 시스템 연계를 위해 안행부와 업무협약에 들어갔다. 안행부 역시 정부3.0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터라 안행부의 주민등록 전산시스템과 특허업무 시스템 연계는 신속히 진행되었다.

✚ 개인정보보호법의 장벽, '자동변경 신청서'로 풀다.

하지만, 특허고객의 바뀐 주소를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주소를 사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및 특허법상 신청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인의 동의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출원인코드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를 신설하여, 특허고객이 이 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이후 주소변동은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시스템 연계 구축과 동시에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7월 1일 출원인주소 자동변경 시스템을 개통하였다.



✚ 주소 자동변경 신청은 봇물을 이루고.

이 제도의 성공은 주소 자동변경 신청 건수로 알 수 있다. 개통 이래 불과 네달 동안 6,200여 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 신청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 시스템 연계후 자동변경 신청 현황 ]

구분	'13.7월	'13.8월	'13.9월	'13.10월
신청 건	1,304건	1,664건	1,329건	1,980건



한편, 신청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권리자의 주소변경으로 인해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가 반송되는 사례는 반비례하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한발 다가서다.**

특허청-안행부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국민의 불편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소중한 특허권을 보다 편리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 전에는 주소가 바뀔 때마다 ‘출원인 정보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특허청 업무시스템과 안행부의 주민등록 시스템이 연계됨에 따라 특허고객은 ‘출원인코드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특허청 내 고객정보가 실시간으로 갱신되어 특허고객의 주소 변경 부담이 줄어들고 특허청의 업무효율도 개선되리라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의 시행으로 특허권자의 소중한 특허권을 좀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받지 못해 3배의 추가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는 발명가 A씨와 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권리가 소멸되기까지 하는 경우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죽음의 붉은 띠 적조!  
다함께 손잡고  
이겨낸다!

5-10 협업 · 해양경찰청



속수무책이던 자연 재해도  
정부3.0의 패러다임 아래  
부처간 손을 잡고 고민하니까  
극복할 수 있습니다.

#### ✦ 적조가 휩쓸고 간 현장에서....

2013년 8월 2일 경남 통영의 학림도 적조 피해현장! 해양경찰청장 앞에 많은 어민들이 모여 들었다.

“경비함정 1척을 1시간 동원하면 어선 1척이 하루 종일 일한 것과 같습니다. 경비함정은 적조를 없애도 주지만 적조가 양식장으로 밀려오는 것까지 막아줍니다.”

“적조로 폐사된 고기를 수거하고 얼마 남지 않은 고기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우리 어선으로도 해 봤는데 효과가 미미했어요. 가뜰이나 고기가 다 죽어서 기름 값도 만만치 않은데 경비함정이 나서줘서 살았습니다.”

적조 발생기간 : '13. 7. 17. ~ 9. 2.

피해규모 : 271어가구에서 양식어류 2,809만미 폐사,

피해액 247억원

#### ✦ 적조에 맞서는 최종병기 워터제트!

이번 적조 방제작업 시 어민들로부터 가장 환영받은 것이 있다. 바로 경비함정의 워터제트 추진기를 이용한 방제작업이다. 적조가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자 해양경찰과 국립수산물과학원은 경비함정의 워터제트 추진기에 관심을 가졌다. 즉 워터제트 추진기가 해수를 흡입하여 다시 분출하면 적조의 원인인 코클로디니움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개체수를 줄이고, 해수 분출 시 발생하는 거품은 해수 내 용존산소량을 증가시켜 물고기의 호흡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발상인 것이다. 이러한 제안 이후 실

협, 결과 도출 그리고 현장 적용까지 24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 서로가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과는 대 성공이었다. 플랑크톤 개체수가 적조 주의보 발령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고 해수 내 산소량도 증가하여 어류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다.



#### **+ 우리도 몰랐던 협업의 힘**

이와 같은 사투의 결과 방제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던 한산도 주변 가두리 양식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규모가 적었다. 통영지역 전체 양식장 어가구 수에서 한산도 지역의 어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에 달한다. 하지만 통영지역 피해액 174억원 중 한산도 주변 지역의 피해액은 0.8%인 1억 4천만원에 그쳤다. 적조 방제 현장에서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부처의 칸막이를 없앤 모범적인 협업사례이다.”라는 평가를 하였다. 서로의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새삼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서로 힘을 모으면 국민들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 적조! 협업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

적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해양경찰과 관련부처는 함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적조는 일조량, 수온, 염분, 영양염류 등 대량 번식

에 알맞은 환경이 조성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중 일조량, 수온, 염분은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다. 하지만 영양염류의 해양유입은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매년 해상으로 유입되는 축산분뇨 등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정부3.0의 패러다임 아래 부처간 협업으로 충분히 막아 낼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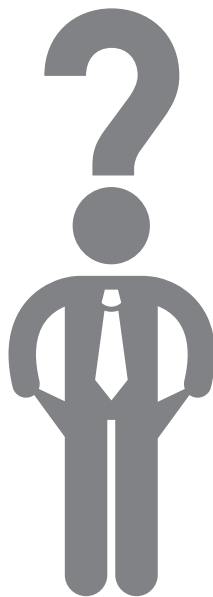
국립수산과학원은 적조를 대비를 위해 102개소의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시험 조사선이 남해안권 내에는 2척 밖에 없어 역부족이다. 이에 해양경찰은 301척의 경비함정과 23대의 항공기를 이용해 24시간 한반도 전 해상을 살펴보며 해수 시료를 채취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 이를 분석하게 된다. 또한 방제정에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가 탑승하여 조사활동도 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적조종합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상호 공유할 것이다. 이렇게 양기관이 협업으로 적조의 위험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적조 발생이 예측되면 전국 해안에 깔려있는 해양경찰이 지역 어민과 지자체에게 경보사항을 즉시 전파할 수 있다.

**정부3.0을 통해 적조는  
더 이상 속수무책의 자연재해가 아니다!**



## 상속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절차는 간소화~ 대상기관은 확대~

5-11 협업 · 금융감독원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의  
예금, 보험, 증권, 대출 등이  
어느 금융회사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셔서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계신가요?  
쉽고 편리하게 개선된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여러 금융권에 존재하는 피상속인(사망자·실종자·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명의 예금, 대출 등을 조회하는 서비스다.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감원, 은행(수출입은행·외은지점 제외),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약 5~15일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금감원·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4만4795건이었던 이용건수는 2011년 5만2677건, 2012년 6만1972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을 찾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어 편리하지만 일부 불편사항이 있었다.

A씨는 부친이 돌아가신 후 부친의 금융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했다. 서비스를 통해 A씨는 부친이 가지고 있던 국내 한 은행의 통장을 하나 발견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아 직접 은행을 찾았더니, 차비도 안 되는 2000원이 통장에 남아있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비용 2,000원이 들었으나 교통비를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었다.

B씨는 사망한 부친이 몇몇 대부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업체에서 얼마를 빌렸는지는 알지 못했다. 대출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친의 재산 상속을 결정했다가는, 뒤늦게 모르던 채무까지 같이 상속돼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부친이 거래한 대부업체와 금액을 확인한다고 애를 먹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9월2일부터는 예금 잔액을 구간별(▲0원 ▲1원~1만원 ▲1만원 초과)로 통보해 그동안에 예금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자 금융사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었다. 이와 같은 개선으로 상속인이 먼저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금융회사 방문 및 인출 여부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보험의 경우엔 가입 여부를, 투자상품은 잔고 유무를 통보한다.

이밖에 상속인 자격 확인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인이 3개월 이내에 금융사를 방문하면 추가서류 없이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도 정확한 잔액조회가 가능토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조회대상 금융기관도 대폭 확대되었다. 지금까지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만이 조회대상이었으나 2013년 9월 2일부터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과 보증채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자리론 및 주택연금,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대부업체 채무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1일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과 보험금에 대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중앙정부  
태풍이 접근하는데 전국 기상정보와  
재난 위험을 한 눈에 볼 수 있을까?

지방정부  
우리지역의 특색에 맞는  
재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일반시민  
집중호우로 강남역이 침수되었다는데,  
우리 집은 안전할까?

손 안의 재난상황정보,  
스마트빅보드!  
(Smart Big 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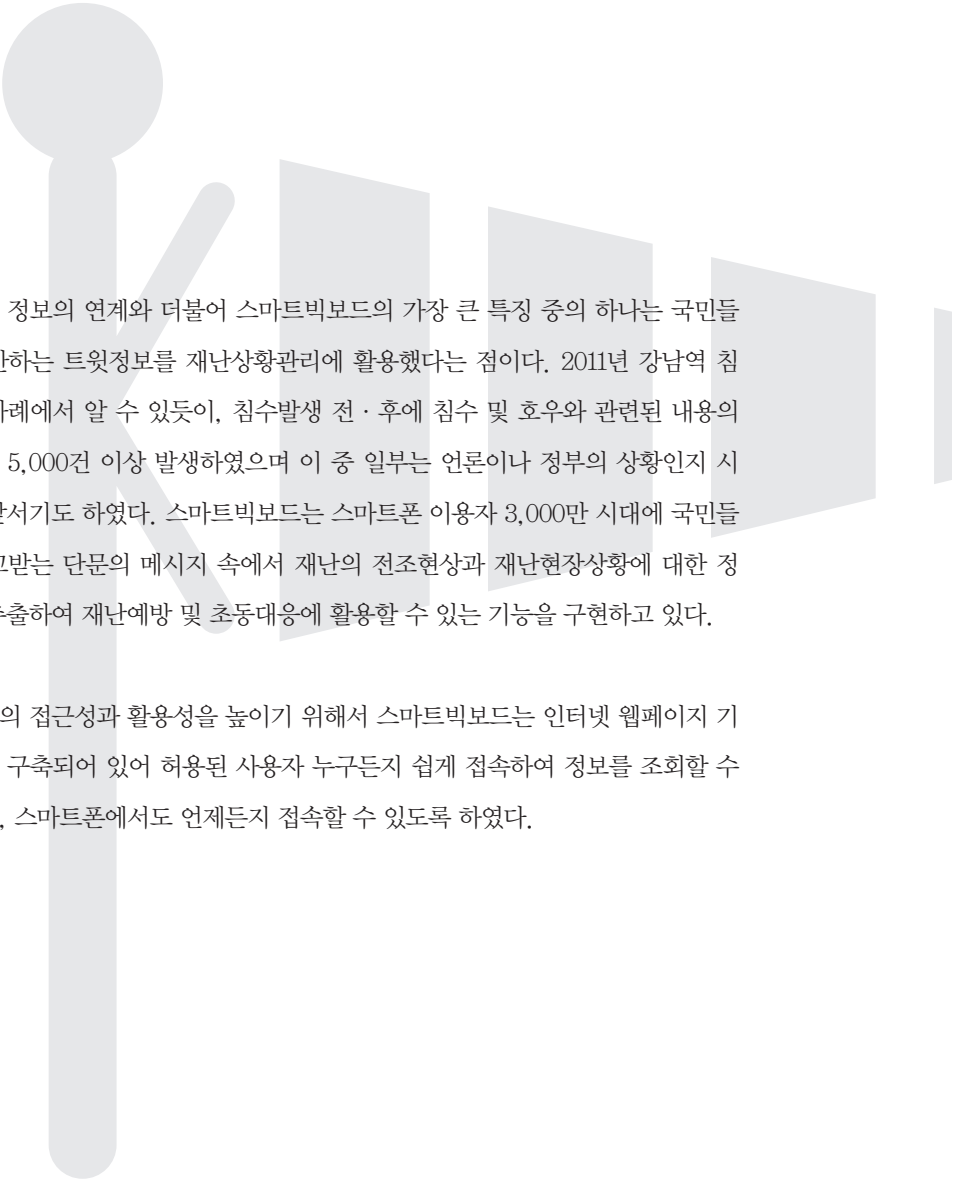


재난발생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국민들은 각자의 눈높이에서 위험상황인지를 위한 고민을 하게 된다.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중요한 가치로 한 정부3.0 추진을 배경으로 스마트 빅보드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빅데이터와 3,200만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서 찾았다.


스마트빅보드는 지도, 기상 데이터 등 국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형정보와 SNS, CCTV, 위성영상 등의 비정형 정보를 효과적으로 융합·분석하여 재난상황관리에 최적화된 정보로 재창출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다양한 정보의 연계와 더불어 스마트빅보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국민들이 생산하는 트윗정보를 재난상황관리에 활용했다는 점이다. 2011년 강남역 침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침수발생 전·후에 침수 및 호우와 관련된 내용의 트윗이 5,000건 이상 발생하였으며 이 중 일부는 언론이나 정부의 상황인지 시점을 앞서기도 하였다. 스마트빅보드는 스마트폰 이용자 3,000만 시대에 국민들이 주고받는 단문의 메시지 속에서 재난의 전조현상과 재난현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재난예방 및 초동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사용자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빅보드는 인터넷 웹페이지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어 허용된 사용자 누구든지 쉽게 접속하여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도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 11월 현재, 전국 30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스마트빅 보드를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시범운영기간 중에 얻어진 개선사항에 대한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와 개인에 최적화된 서비스 콘텐츠 개발을 추진 · 보급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재난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스마트빅보드가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본다



# 미리 알고 대비하니까 범죄가 발 디딜 틈이 없다

6-2 빅데이터 · 경찰청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처럼  
예지과학의 힘으로 일어날 범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범죄 없는 안전한 세상이 되겠죠?

A지역은 과거에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범죄발생률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가 발생한 현장에서 즉시 현행범을 검거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이는 경찰청에서 개발한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형사 활동을 전개한 덕분이다. 예전에는 “감(感)”과 경험에 의존했던 경찰 활동이 이제는 매우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형사가 강간을 하려던 범인을 발견하여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여 범죄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 형사가 강간 범죄 발생 위험지역을 분석하여 미리 잠복 중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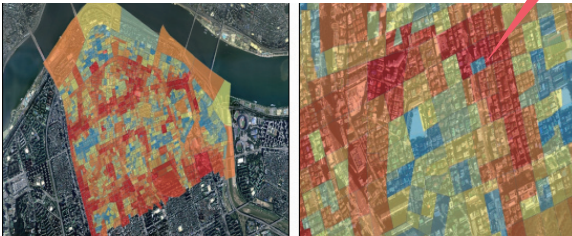
#### + 주요 사례

- 범죄예측지역 중심 순찰 활동 결과,  
강도 44.4%, 강간 22.1%, 절도 13.1% 감소,  
범죄예측 장소 형사 배치를 통해 강간 제지 및  
현행범 검거 등 효과 창출(서울 영등포서)
- 범죄위험지역 분석을 통한 효율적 인력 운영 결과,  
범죄발생 전년 대비 44.8% 감소(인천 연수서, 12년 상반기)
- 범죄예측지역 중심 순찰차량 배치, 112 신고 접수 시  
현장 도착 시간이 5분 6초 → 2분 32초로 감소(경기 파주서)

B씨는 A시에서 C시로 이사를 하였다.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고3 딸을 둔 엄마이기 때문에 새로 이사 온 동네의 범죄 위험도가 매우 궁금했던 C씨는 경찰청의 “우리 동네 범죄위험지수(가칭)” 사이트에 접속하여 새로 이사 온 동네의 범죄위험지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대의 성범죄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C씨는 딸이 귀가하는 시간에 맞춰 B시에서 운영하는 안심귀가 도우미 서비스 신청을 하였다. 일기예보에서 비가 올 확률을 알려주듯이 범죄가 일어날 확률을 미리 알려주니 스스로 범죄에 대비할 수 있어 매우 좋다.



강남서(1629개 블록) 폭력 범죄지수(30단계)





D씨는 퇴근길이 늘 걱정이다. 주변에 비해 가로등도 어두울 뿐만 아니라 인적이 드물어서 범죄가 많이 발생할 거 같고 언젠가는 피해자가 되는게 아닌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 마침 경찰청에서 내 현위치의 범죄위험지수를 알려주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퇴근길에 미리 범죄위험지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내 현위치를 전송하고 범죄위험지수를 확인했다. 다행히 강간 위험지수 20, 폭력 위험지수 10으로 생각만큼 높은 것은 아니다. 그래도 이 길이 어둡고 인적이 드물어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D씨는 현재 본인이 느끼는 두려움지수를 범죄위험지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근 경찰관서에 전송하였다. 인근 경찰관서에서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이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였다.



일방적인 경찰의 치안 활동이 아닌, 과학적인 프로파일링 분석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치안 활동으로 더욱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열리고 있다.

# 농업기상관측망으로 날씨를 지배하니까 농산물 수확이 달라진다!



6-3 빅데이터 · 농촌진흥청



농업은 날씨에 지배되는 산업이지만  
날씨를 예측하고 이용한다면,  
날씨를 지배하며 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산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의 상시화로 뜻하지 않은 기상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농산물의 생산성 저하, 수급불안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많은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농업생산이 날씨에 의하여 크게 지배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날씨를 인간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측이 중요하다. **최근 좋은 기상조건은 잘 이용하고 나쁜 기상조건은 그 발생장소나 시기를 피하여 영농에 활용하게 하는 농업기상정보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중인 자동기상관측장비(Automatic Weather Station; AWS)를 농촌진흥청의 전산망에 연결하는 농업 기상관측망 통합구축사업이 바로 그것 이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정보 통합이 어려웠던 AWS에 무선통신망(CDMA)을 연결하고 자료수집기를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기상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서비스 할 수 있는 웹기반의 농업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수요자에 따라 첫째는 농업인용(<http://weather.rda.go.kr>), 둘째는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농업 기상관측 담당자용(<http://weather.rda.go.kr/awsadm>), 셋째는 농업 기상 관 제 용(<http://weather.rda.go.kr/awsadm>), 마지막으로 연구자용(<http://weather.rda.go.kr/zone>)등 4종류로 구성되어 통합적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사에서는 ‘지난 날씨(과거날씨)’도 일보예보만큼 중요하다. 지난 날씨는 매우 구체적이고 확실하기 때문에 농업 기상정보로서 가치가 매우 높아 농촌진흥청은 인터넷으로 농촌지역의 날씨정보를 제공한다. 이 기상정보를 농업인이 아침에 열어보면,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할 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비료를 주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그동안의 작황과 흐렸던 또는 맑았던 날씨에 따라 비료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과 요령을 터득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농촌지역의 “지나간 날씨”와 기상청에서 생산한 농촌 지역의 “미래 날씨”를 농작물 재해발생 예측모형에 적용시키는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기상재해에 취약한 농촌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농업기상재해발생 위험 지도를 작성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서리발생 사전 알리미 문자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산·학·연 공동사업으로 농업기상재해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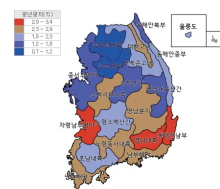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의 시대에서,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과 농산물 수급을 위해서 기상재해의 사후복구지원 뿐만 아니라 기상재해 사전예방조치에 농촌진흥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농업기상 전광판



농업기상서비스(모바일웹)



농업기후지대별 기상(월 3회)

##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점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6-4 빅데이터 · 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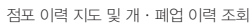


평소 눈여겨 보아왔던 점포에  
음식 업종을 차리려는 A씨는  
그 자리에서 그전에는 어떤  
장사를 했었는지, 권리금과  
임대료는 비싸지 않은지,  
업종별로 매출은 얼마나 될지  
알고 싶지만 물어볼 사람이 없다.  
창업 컨설팅 업체에서는  
좋은 자리라고 이런 저런 업종을  
추천하지만, 컨설팅 비용도  
부담스럽고, 상담내용을 100%  
믿어야 하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소상공인 시장은 1년에 약 36%의 손바꿈이 일어나는 시장(2011년 829,669개의 개인사업자 폐업)으로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이며, 잘못된 상권·입지와 업종의 선정이 창업실패로 이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많은 데이터와 과학적인 분석 기법 등을 통해 점포 출점을 결정하는 프랜차이즈와 달리, 소상공인은 다른 분야에 비해 정보서비스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이다.

앞으로 A씨의 고민은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점포의 이력 정보(음식 및 위생업종의 인허가 이력정보)와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 부동산 가격정보 등 약 7.4억 건에 달하는 빅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하고, 다양한 통계 기법을 적용하여 점포의 과거 개·폐업 이력과 업종별 매출 예측 정보, 입지특성 정보를 기존의 상권정보 서비스와 결합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점포평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사례가 가능하다.



상권·업종 평가 및 매출 예측 정보 제공



“퇴직금 3억원을 종자돈으로 호프집을 창업할 계획이었던 홍고민씨는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점포평가 서비스’ 도움을 받고 분식점 창업으로 마음을 돌렸다. 홍고민씨가 선택한 점포에 대한 최근 개·폐업 이력과 매출 예측 정보를 조회한 결과, 호프집보다 분식점이 비용 대비 수익성이 좋고, 해당 점포에서 과거에 호프집으로 1년 남짓 영업하다가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분식점이 호프집보다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 1억원의 투자금으로 월250만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는 중이다.”



점포 평가 서비스는 2014년부터 서울지역 16만개 음식점부터 시범 서비스 될 예정이며, 점차 광역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시세, 추정매출, 점포진단 평점 등 입지 상권 분석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경험적, 계약우선의 점포거래 관행에서 데이터를 기반한 합리적인 거래가 가능하고, 과대광고 등 불법 컨설팅 업체의 피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입지 특성에 맞는 점포 선택 (예를 들어, 소규모 자본금을 가진 창업자가 커피전문점, 치킨집, 퓨전주점 중 해당 점포의 입지에서 성공 가능한 업종 선택 가능)으로 ‘창업 성공 가능성 제고’ 및 ‘묻지마 창업’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t h e  
third  
chapter

# 정부3.0 서비스 센터!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중심 맞춤형서비스제공 / 협업을 통한 창업기업지원 /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  
새로운 정보기술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생애 주기별로  
유형화하여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평생동안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합니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인허가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저소득층가정 등  
정보 취약계층을 배려하며 최신 정보  
기술로 재난, 환경, 민생치안 분야등에서  
신개념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갑니다.

국민이 만족할때까지!  
여기는 대한민국 정부3.0  
서비스센터 입니다.

일을 통해 일어서는 당신,  
「일모아」가  
응원합니다!

7-1 맞춤형서비스 · 고용노동부



일자리 정보와 복지 정보를 모두  
모아 한눈에 맞춤형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만나세요



일모아 사이트 첫화면

“부산에 사는 이연기씨는 정부에서 생계비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이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 「일모아」를 통해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해 보기도 했다. 최근 이씨는 「일모아」가 예전과 확 달라졌음을 느낀다. 예전에는 원하는 일자리를 검색하기도 불편했고, 복지 혜택은 다른 홈페이지에서 따로 찾아보아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거주 지역, 소득수준 등 간단한 조건만 체크해주면 이 씨에게 딱 맞는 각종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복지 혜택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4년 8월이면 이러한 일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의 「일모아」시스템이 대폭 기능을 보강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모아 시스템([www.iloma.go.kr](http://www.iloma.go.kr))은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의 이름이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란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국민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근로’, 직업능력훈련을 받을 때 제공되는 ‘수당’, 지원금, 컨설팅 등을 통한 ‘창업 지원’등이 바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사업을 대폭 늘렸다. 갑자기 늘어난 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일모아」시스템이다. 부족한 예산으로 중복참여자 검색 등 초보적 기능만 탑재한 채 운영을 시작했던 까닭에 정보 검색에 불편함이 많고, 참여자 선발을 위해 확인해야하는 행정 정보 등에 대한 지원 기능도 없어 국민 및 일선 담당자 모두 시스템 활용도가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e-Government을 모두 연결하여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을 수행을 위한 업무를 원스톱으로

[illegible]

# 비 오는 날!

홍수가 궁금하다면  
홍수알리미를 확인하세요

7-2 맞춤형서비스 · 국토교통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한강변  
캠핑장으로 놀러온 C씨. 텐트를 치고,  
식사준비가 한창인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천내 캠핑이라 불안하기는 하나  
가족과의 여행을 망치는 것 같아 그냥  
철수하기가 망설여진다.

장마와 태풍으로 비가 많이 온다는데  
내 주변의 홍수위험은 없을까?

언제 어디서나 내 주변 홍수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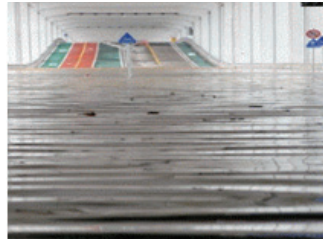




올림픽대로 침수



잠수교 침수



우리나라는 최근 10여년 동안 엘니뇨 현상,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매년 여름철에 집중호우와 강한 태풍이 발생하여 홍수피해가 대형화 추세에 있다.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많은 인명 손실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필리핀의 태풍 하이옌이 남의 얘기만은 아닐 것이다.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의 수위는 올라가며,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이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는 캠핑장, 자전거도로, 공연장이 있는 고수부지가 잠기게 된다. 이에 국민들의 하천변 여가활동의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고수부지의 침수시설이 언제 침수되는지 예측하여 알려주는 친수지구 홍수정보시스템을 한강 이포보~여주보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구축하였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홍수정보를 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홍수알리미” 모바일 앱을 개발하였으며, 한강권역에 대하여 강수량, 하천수위, 댐방류량 등 홍수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어 위험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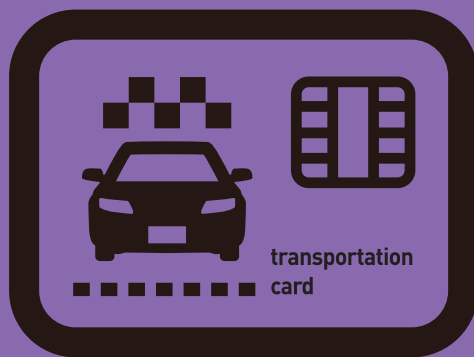
홍수알리미



국토교통부는 인터넷기반의 홍수정보를 모바일기반으로 확대하였으며, 홍수업무관련 공무원에게만 보내주던 정보를 국민들에게도 제공하기 위해 홍수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장쯤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 전국 어디서나  
다 통(通)하면 참 편리 할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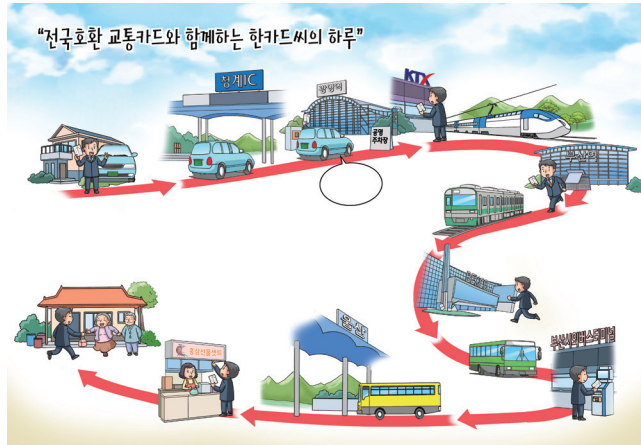


전국호환  
교통카드 한 장이면  
전국 어디서나 OK!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품으로, '96년 처음 도입되어 '13년 현재 일부 시·군 농어촌 버스를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의 버스·지하철에서 사용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95% 이상이 교통카드로 결제되고 있고, 누구나 지갑 속에 1장 이상 소지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통카드는 우리생활에 늘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었지만, 지역별 교통카드 사업자가 달라 여전히 타지역에서의 사용이 제한되고, 또 철도나 고속도로 같은 국가기간망에서는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에 이용가능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도 가능한 전국호환 교통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각기 다른 카드기술과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별 교통카드 사업자간 호환을 위해서, 모든 사업자들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기술을 개발하고, 전국의 버스·지하철·기차·고속도로의 교통카드 관련 장비개선을 지원해왔다. 또한 금년 6월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마지막 서울시까지 전국 17개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릴레이 협약을 맺어, 전국호환 교통카드 참여 지역을 확산해 왔다.



전국호환 카드 이용 사례

그 결과 금년말 부산지역 사업자를 시작으로 전국호환 교통카드가 출시 되어, 전국 철도역 기차표 구매,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도 가능하며, 전국으로 사용처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각 지역 사업자별로 전국호환 카드 발행과 서비스를 개통하고, 고속버스 교통카드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하반기 부터는 전국호환 카드 서비스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금년말 출시되는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충전해서 사용하는 선불형교통카드로 전국 지하철역, 편의점, 버스정류장 가판대 등에서 누구나 구입가능하며, 가격은 기능에 따라 2천원~5천원(하이패스 기능유무) 정도로 판매될 전망이다. 전국호환 교통카드가 도입 되더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선후불교통카드는 기존 사용처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지역과 교통수단에서 이용을 원하는 분들만 구입하시도록 해 국민들께 보다 다양한 선택권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소통(疏通)카드다!”

특히 그간 도로 지정체 예방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해, 통행료 지불에 현금을 소지하거나 별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및 하이패스 카드를 발급 받아야 했던 고속도로에서도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요금 지불이 가능해져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의 교통편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작은 교통카드 한 장으로 국민의 발을 편리하게 하고, 전국을 하나로 통하게 하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바로 정부3.0의 결실이 아니겠는가. 전국호환 교통카드가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속에 성공적으로 보급되어 전국 방방곳곳에서 통하는 그날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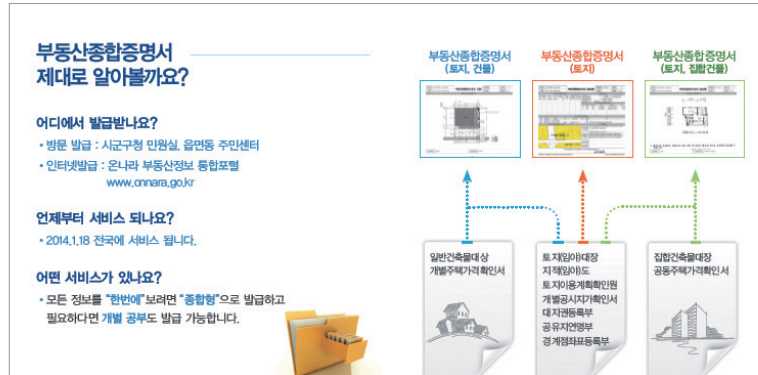
## 부동산 서류 하나로 편리하게 ‘일사편리’ 부동산종합증명서!

7-4 맞춤형서비스 ·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은 하나인데  
관련 서류는 많고, 비용은 또 이중,  
삼중으로 내야 하는지~!  
발급받은 증명서간에 정보가  
서로 다르면 또 고치기까지  
해야 하니 불편함이 많네요





2014년 1월 18일부터 이제 이런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그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15가지 서류로 따로 따로 발급 받았던 부동산 증명서를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하나로 제공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과다한 제공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증명서 서비스도 같이 시행합니다.

그동안 부동산 증명서가 여러 종류로 발급되어,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대출 등에 구비할 서류가 많고, 민원처리도 오래 걸려서 시간낭비와 수수료 등 경제적 손실이 많았습니다. 연간 발급되는 부동산 서류만 보아도 2억 2천만건이나 됩니다. 다수의 부동산 증명서를 관리하면서 5천만건 이상 발생한 공부 간 정보 불일치로 인해 국민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는데 일례로 화성시 임야대장 소유자 주민번호 오류 기재로 국가가 8억원을 배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국민들의 이러한 불편과 피해를 없애고, 국민들에게 가장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러한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검토하고 단계적 계획을 세워 이제 시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하고 친근한 “일사편리(一事便利)”라는 이름을 만들어 상표로 등록하고 전국적인 시행을 알리기 위해 포스터, 리플렛, 전광판 동영상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가 국민을 위한 서비스의 시작이라면, 부동산 통합정보의 구축 및 활용은 부처간 정보 칸막이를 제거하여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함으로써 행정을 혁신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13년 7월8일부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은 전입신고를 처리할 때, 해당 주소지의 항공사진, 지적도와 토지용도, 건물의 위치 및 형상정보, 건물용도 등의 행정자료를 공간정보 상에서 한 번에 확인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입신고 주소지의 현장 확인에 대한 공무원 부담이 대폭 줄고 위장전입의 사전예방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농림축산검역!

## 계신 곳에 직접 찾아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7-5 맞춤형서비스 · 농림축산식품부



다문화가정주부,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 이제 여행가방 속에  
금지품인 전통음식과 열대과일 등은  
가져오지 마세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검역안내

#### ✦ 베트남에서 시집온 응웬티엔씨

응웬티엔씨는 2011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왔다. 최근 친정을 다 니러 갔다가 망고와 축산물을 가져 왔지만 공항에서 금지품이라는 소리를 듣고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다. 친정 부모님이 사돈에게 보내는 정성어린 선물인데 폐기를 당한 것이다. 미리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쉽기만 할 따름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금지품을 반입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다문화가정이거나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임을 감안하여 이들이 주로 모이는 곳(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필수 교육장 등)을 직접 찾아가 검역을 안내하고 있다.

이런 찾아가는 검역안내는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평소 말이 통하지 않아 알기 어려웠던 검역정보를 손쉽게 제공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다문화가정(응웬티엔씨, 베트남) 신부는 ‘평소 이해할 수 없어 억울하기만 했는데, 이제 다소 맘이 풀린다.’며 ‘주위의 아는 분에게도 알려겠다.’고 했다.



중고등학생\_검역현장\_체험\_교육

#### ✦ 검역관의 길이 궁금한 D양

평상시 직업으로서의 검역관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D양, 학교에서나 부모님에게 들은 정보로는 뭔가 부족했다. 그래서 검역관들이 근무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험해 보고 싶었다.

최근 교육기관에서 각급 기관에 직업 체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종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어 학생들은 다양한 직업의 세계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점차 다양해지는 직업체험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검역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검역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교육기관(학교)의 직업체험 요청이 있을  
 경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업안내 및 검역현장 체험, 선배와의 대화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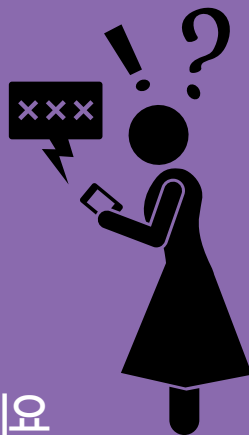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실험실 체험 교육



성추행 피해를 입었으나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안절부절하는 A씨!

이사 가느라 음주운전 벌금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미납으로 수배된 B씨!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주민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아 난감한 C씨!



**내 형사사건?**  
**방문NO! 전화NO!**  
**인터넷과 모바일로**  
**원스톱 서비스 받으세요**



이제 맞춤형 ‘형사사법서비스’를 통해 모두 해결 가능하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A씨는 형사사법포털에서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통합검색을 통해 도와줄 곳을 찾았다. 음주운전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B씨는 문자나 이메일 알림서비스로 신속하게 고지서를 받아보니 놓칠 일도 없어졌다. 또한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C씨는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앱, 내 사건조회로 더 이상 속을 일이 없어졌다.

국민들이 사건조회, 벌과금조회, 통지서조회, 범죄피해자 지원 등 사건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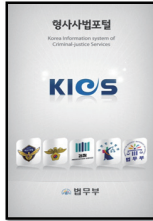
구체적 사례로 종로구에 근무하는 직장인 여성 A씨는 회식 후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A씨는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하였다. 두려움 속에 성폭행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도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 방법을 찾아보던 중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앱』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아 “범죄피해자 지원”에 접속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요령에 따라 집 근처 성폭력 상담소에 연락하였고, 상담을 받은 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후 A씨는 담당 형사나 검사에게 전화를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사건진행을 물어보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자기의 사건진행 상황을 조회해 볼 수 있었다.

앞으로는 A씨 같은 피해자는 더 이상 경찰, 검찰, 법원, 법무 등을 돌아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고, 형사 절차 과정에서 느끼는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2차 피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범죄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고, 자기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더 보장받게 되는 동시에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형사사법 분야도 작지만 국민과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행복도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 ✦ 「모바일 형사사법포털」앱 설치 및 이용방법



### 1. 앱 설치하기

'구글플레이'에 접속, '형사사법포털' 키워드로 검색하여 안드로이드폰 대상 앱을 다운로드 후 설치합니다.  
(향후 아이폰 앱 출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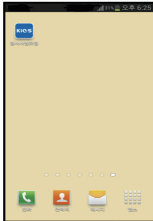


### 2.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 가져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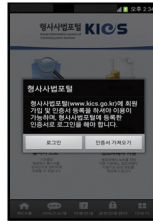
앱의 「공인인증센터」와 모바일 전자정부 인증센터를 이용하여, pc의 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가져옵니다.

※ 사건조회, 벌과금조회, 통지서조회 이용시 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에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 3.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접속 후, 서비스 이용하기



### ① 형사사법포털 접속 (형사사법포털) 앱 클릭



###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사건조회 / 벌과금조회 / 통지서조회 이용 시)



### ③ 사건조회 (예: 검찰사건 진행상황)



### ④ 벌과금조회 (예: 미납벌과금 조회)



### ⑤ 검찰 통지서 조회 (예: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조회)



### ⑥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및 기관 검색

여성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나 지원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필요한 때 꼭 알려주는**  
**알짜 여성정보 지원서비스~**

7-8 맞춤형서비스 · 여성가족부



여성들이 본격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청년기부터 정년이후인 실버세대까지 다양한 정책과 유용한 지원서비스가 여러 기관들의 노력을 통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정책의 수혜자인 여성들은 좋은 정보를 눈앞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다양한 여성정책 및 지원서비스 중, 꼭 필요한 알짜정보를 모아 누구나 보기 쉽고 이용하기 쉽게 한 곳에 집약하여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들의 전 생애주기를 볼 때 청년기, 결혼적령기, 임신·출산 등 특정 시기에 꼭 필요한 지원서비스가 있게 마련이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책과 서비스가 꼭 필요한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때·적기·적소에 제공될 수 있도록—보다 많은 수혜자들에게 제공되어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여성가족부의 포털인 ‘위민넷([www.women.go.kr](http://www.women.go.kr))’은 각 기관에 산재된 여성관련 정책 및 지원서비스를 여성의 생애주기/수요상황별로 선별하여 사이트에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위민넷 사이트 내 제공하고 있던 ‘여성지원정책’ 코너는 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원정책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제공하고 있어 누락되는 부분이 많았고, 관련 서비스 수행기관과의 시스템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원스톱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

먼저, 수많은 정책정보 중 이용자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분류하는 것이 첫 단계! 이용자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연령, 지역, 가족형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분류하고 이를 다시 생애주기별/수요상황별로 분류하였다. 생애주기별 분류는 총 6단계로 ‘청년여성 → 결혼기 여성 → 임신·출산여성 → 보육·육아여성 → 자녀교육여성 → 실버여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특정 생애주기에 포함되지 않고 여성들이 처한 특수한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한 수요상황별 분류로 ‘경력단절여성, 여성리더양성, 다문화여성, 위기여성, 취약계층여성’의 5가지 상황을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고려한 것은 각 분류에 포함할 콘텐츠의 내용이었다. 지원서비스별로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이용방법, 수행기관 정보’등 세부 카테고리를 나누어 내용을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정책을 이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다양한 여성정책정보 및 시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여성지원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각종 서식 및 서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한 자리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용자들의 다양한 상황(연령 · 지역 · 계층 · 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여성관련시설’ 정보의 확대 개편을 추진했다. 기존의 ‘여성중심 시설’에서 온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족시설찾기’로 정보의 범위를 확대했다. 사용자들이 내 집 주변의 필요한 시설의 위치와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는 ‘가족시설찾기 지도검색서비스’를 마련하였다. 시설의 기능별(제공서비스) 분류와 시설의 주이용 대상층(여성 · 아동 · 청소년 · 장애인)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시설 이용 목적과 이용대상이 효과적으로 매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54,852개 시설 정보 제공)

그동안 국내 대표 여성공익포털로써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온 ‘위민넷’은 이렇게 여성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이용자들의 정책 이해와 사용 편의성을 생각한 똑똑한 여성지원서비스 콘텐츠를 마련했다. 또한 정보의 홍수 속에 허우적대는 여성들을 위해 꼭 필요한 때 꼭 이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중계’ ‘연결’ 하는 ‘고급 정보의 고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도 제고는 물론 고급 정보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지원서비스

생애주기별 | 수요상향별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넓히고! 높이고!

7-9 맞춤형서비스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성가족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 등 노동인력 수급 차질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여성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할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조성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이들의 경제활동참여 지원은 시의적절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이에 정부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활성화”를 국정과제의 중요 아젠다로 채택하여, 이 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54%대에 머물고 있고 남성고용율과 20%p 격차를 보이고 있는 잠재된 여성인력인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더욱 더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확대를 통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하기 위하여 새일센터를 ‘12년에 100개소에서 ’13년에는 120개소까지 확대하는 한편, 별도로 운영되었던 e새일시스템(여가부)과 워크넷(고용부)을 ‘12년 6월부터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구직자와 구인자가 매칭할 수 있는 폭을 대폭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지속성 제고를 위해 새일센터와 1,151개 구인기업체간 여성친화협약을 맺고, 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양성평등, 유연근무, 성희롱 예방 등의 강의를 22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근무여건이 열악한 기업체 대상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환경개선 지원금을 '12년에는 300만원에서 '13년에는 400만원까지 확대하여 110개 기업체에 환경개선 지원금을 지원하였다.

직업교육훈련 등을 통한 직업역량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해 직업경력 및 능력수준 등을 고려한 취업유망직종에 대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663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해 SK 브로드밴드 등과 연계한 기업맞춤형 직업교육훈련(OJT)을 29개 과정 신설하였다. 또한, 훈련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전산응용기계설계 등 폴리텍 대학과 연계한 전문기술 직업교육훈련을 20개 과정 신설하였다.

취업이 다소 어려운 결혼이민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직업교육훈련을 이중언어 스토리텔링, 다문화 방과 후 영어지도사 등 84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소규모 온·오프라인 창업을 위해 실무 중심의 창업 훈련을 수공예 공방 창업, G마켓, 옥션과 연계한 온라인 창업 과정 등 73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기업에게는 경력단절여성 고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주이민여성 등 경력단절여성 인턴을 5,516명 연계하여 여성고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제공하며, 상당기간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는 사전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동안 로레알코리아, 포스코, SK텔레콤 등과 다양한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와는 통일부, 국방부, 고용부 등과의 협약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

‘13.3분기 기준으로 새일센터 이용자 수는 5천여명 증가한 16.2만명이며, 이용자 중 상용직으로 취업한 비율이 ‘12.3분기 대비 7.2%p 증가한 62.6%였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 임금근로자의 상용직 비율인 54.5%(‘13.3분기) 대비 높은 수치로 이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만의 특화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로 파악되며, 여성가족부의 노력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경력단절여성이 19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여 고용률 70%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해외여행 가시나요? ‘모바일 영사핫라인’ 다운받고 안전하게 떠나보세요

7-10 맞춤형서비스 · 외교부

 영어도 잘 못하는데  
길을 잃거나 강도를 만나거나  
여권을 잃어버리면 어찌지?  
안전 걱정에 해외여행 떠나기가  
무서운 세상이죠?



해외여행을 앞두고 A씨는 지인의 추천을 받고 ‘모바일 영사핫라인’ 앱을 다운 받았다.

다운받고 처음 열자마자 ‘동행’이라는 서비스에 가입하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떴다. 이 버튼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면 여행하는 국가와 여행일정을 등록하고, 그 국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여행지에서 만약 나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더 빨리 소재를 파악하고 국내 가족에게 연락도 갈 수 있다고 하니, 보험 삼아 등록하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외에서 소매치기, 강도를 당하거나 길을 잃거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등 등 ... ‘분실·도난’ 메뉴만 해도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강도를 만났을 때’ 등 8개 각기 다른 상황에 대해 대처요령을 알려주고, 혼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GPS시스템을 통해 내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영사관이 어딘지 알아내고, 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전화번호도 바로 검색할 수 있게 되어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바로 촬영하거나 녹취해서 애플리케이션에 저장할 수도 있다. ‘모바일 영사하트라인’으로 내 여권을 미리 촬영해서 사본을 저장해놓고 분실에도 대비할 수 있으니 마음이 놓였다.

우리국민의 해외출국자 수가 2012년 1,40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각종 분실, 도난, 사기 등 피해를 입는 여행자도 8,900여명에 달하는 등 해외에서의 사건사고 발생 위험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그 위험성에 대한 개인 차원의 대비는 소홀한 편이다.



외교부의 ‘모바일 영사핫라인’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현장에서 손 안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원스톱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외교부에서 세계 주요 지역에 대해 지정하고 있는 여행경보단계 정보, 여행자 보험·신분증·여권 등 중요 여행 문서의 사본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저장하는 기능, 전세계 170개 재외공관의 대표전화와 해당 국가의 경찰/화재신고/응급환자 신고 번호 등을 모두 담았다. 또한, GPS 시스템을 통해 현재 ‘내 위치’를 추적하고, 가장 가까이 위치한 재외공관을 지도상으로 확인하여 해당 공관의 연락처까지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앞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도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영사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영사핫라인’의 보급으로 인해 국민들이 더욱 체감 가능한 재외국민보호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에게 필요한  
생활법령정보!  
이제 **맞춤형**으로 찾아보세요

7-11 맞춤형서비스 · 법제처



어렵다고 생각하는  
생활법령정보가  
알기 쉽고 찾기 쉽게  
모두 **여기**([oneclick.law.go.kr](http://oneclick.law.go.kr))  
있다고?!





일반 국민들은 ‘법령’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렵고 접근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는 법령정보가 주로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 약 4,500건의 법령과 14,000여건의 행정규칙 등 그 양이 방대하고, 법문이 어렵게 서술되어 있어 국민이 일일이 찾아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법제처는 2008년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oneclick.law.go.kr)을 통하여 생활분야별 법령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2013년 현재 약 220여개의 생활분야별 법령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분야별 법령정보의 내용이 주제에 따라 흩어져 있어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부3.0이 추구하고 있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인의 연령, 성별, 직업 등의 조건에 따라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3년 12월부터 서비스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만약 자녀가 있는 45세 주부가 개인별 맞춤형 생활법령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5가지 체크리스트 중 ‘중장년-여성-기혼-자녀 유-주부’ 라는 카테고리를 각각 체크하면 총 47건의 관련 생활법령정보가 검색된다. 해당 법령정보에는 층간소음, 전월세계약, 학교안전사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소비자 분쟁, 식품영양표시 등 자녀가 있는 45세 주부가 관심을 가질 만한 모든 생활분야의 법령정보를 검색하여 제공하게 된다.

특히 해당 분야의 법령정보를 클릭하면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법령조문, 판례, 서식, 절차 등을 소개하고 있어, 평소 생활속 법령에 관해서 궁금한 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메인 화면



개인별 맞춤형 생활법령 예시



또한 이렇게 누적된 생활법령정보시스템 DB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Open-API 형태로 공개하여, 더 많은 국민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고 부가가치 있는 사이트나 앱을 만들어 국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법령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3.0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수요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령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조달물자 대금납부!

## 은행에 가지 않고 가상계좌로 쉽고 빠르게!

7-12 맞춤형서비스 · 조달청



바쁜 업무시간에  
조달물자대금 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현금을 찾아 국고금 취급창구에서  
납부하느라 번거로우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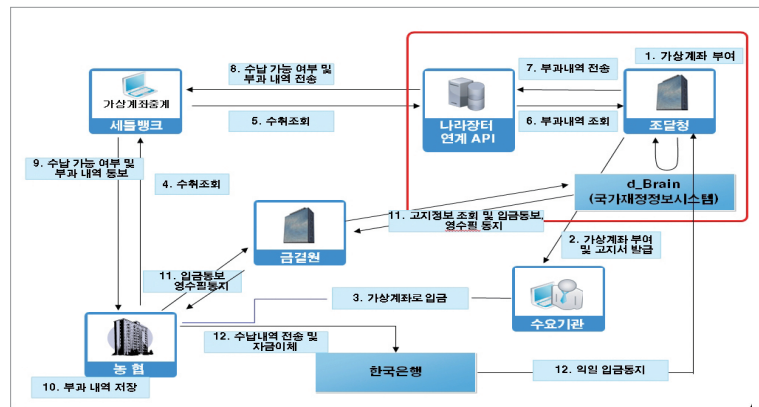
조달청은 조달물자대금과 수수료를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물자 대금 입금전용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201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하였다

가상계좌 납부방식은 납부자가 하나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다양한 납부방식(은행창구, 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선택하여 휴일에 관계없이 연중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납부자** : “고지서 들고 은행가서 납부하기 번거로워서 그러는데...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나요?”

**조달청 고지서 담당** : “네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귀 기관명의 은행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시스템 업무 흐름도 〉



**납부자 :** “기관명의 인증서는 없습니다만 인증서발급 후 어떤 절차로 납부하면 될까요?”

**조달청 고지서 담당 :** “납부 절차가 복잡하여 메모가 가능하면 메모하시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① 우선 인증서 발급한 은행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고 ② 은행홈페이지 공과금센터에서 국세 항목을 찾으세요. ③ 국세 항목 중 기금 및 기타국고를 찾으셔서 ④ 조달청을 클릭하고 납부번호를 조회 후 ⑤ 해당 납부번호 19자리를 클릭하여 수납처리 후 ⑥ 영수증 출력하시면 됩니다.”

**납부자 :** “기관명의 인증서도 아직 없지만 너무 복잡하여 차라리 은행가서 납부 하겠습니다”

**조달청 고지서 담당 :** “불편을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듯 조달청은 시스템 미비나 복잡한 인터넷 뱅킹 이용으로 인한 불편과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은행 방문 없이 조달물자대금과 수수료를 무통장 입금할 수 있도록 「입금전용 가상계좌」 도입을 모색하게 되었다.

가상계좌 도입이 정부3.0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과제로 선정된 후, 운영은행으로 선정된 농협은 이미 개발된 농협, 세틀뱅크(가상계좌 중계), 국가재정정보시스템, 한국은행과 전산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모듈을 조달청

에 제공하고, 조달청은 연계서비스를 개발하여 시물레이션 테스트 및 실제 테스트를 통한 검정을 거쳐 2013년 9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시행 초기에는 나라장터 수수료 및 비축물자 판매대금 11만 여 건, 연간 4,300억원의 고지서에 우선 입금전용 가상계좌 고지서를 도입하여 시범 운용하고, 오는 2015년까지 약 110만 여 건, 연간 15조 8,500억 원에 달하는 조달물자 전체 고지서에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참여 은행을 확대하는 등 납부자 4만 7천여 수요기관 및 26만여 조달등록업체가 기존 입금 방법(d-Brain, e-호조, 은행인증서, 은행창구 입금방법 등)에 추가하여 납부방법을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9월 가상계좌로 5천9백여만 원의 대금을 납부한 (주)피\*\*\*\*\*의 경우 “이전에는 비축물자대금을 고지서를 들고 거래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수납 여부도 납부 익일에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가상계좌 납부 방식은 은행에 가지 않고 회사에 앉아 납부하고 납부 상황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위 사례와 같이 가상계좌 납부제도 시행으로 납부자가 부득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청으로부터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구제절차는 어떻게...  
행정심판 청구는 어떤 곳에...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은  
어떻게 할지... 많이 어렵고  
고민이 되셨죠?



이제 행정심판이라면  
청구에서 재결까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해결하세요

7-13 맞춤형서비스 · 국민권익위원회





허브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관협력 및 소통(1차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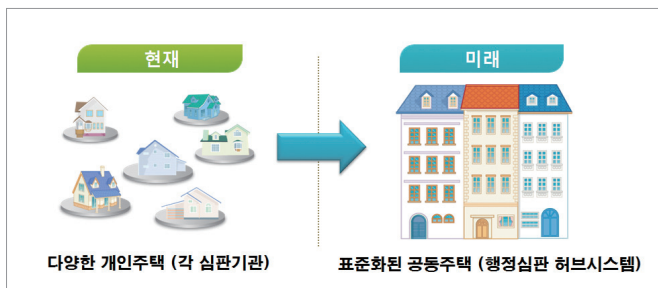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개 이상의 행정심판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조차 얼마나 많은 행정심판기관이 존재하는지 알기 어려운 형편이니, 처음으로 행정심판을 이용하려는 국민이 행정심판을 제대로 청구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행정심판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사례 1)**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A”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이 아닌 관계로 이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던 중 15일의 영업정지기간이 경과되어 행정심판 청구가 실익이 없어 각하재결을 받음.

**사례 2)** 시장으로부터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B”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빠서 심판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변의 얘기를 듣고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는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부득이 위원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함.

**사례 3)** “C” 행정심판위원회와 “D” 행정심판위원회가 같은 법규위반 사건에서 서로 다른 재결을 하였는바, 기각재결을 받은 청구인이 해당 지역에 따라 재결결과가 달라진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에는 재심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함.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심판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행정심판허브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행정심판허브시스템은 전국 어디서나 소관 심판기관의 구분 없이 심판청구부터 재결까지 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이다.

2014년 2월부터 행정심판허브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국민들은 재결례·판례·상당 사례 및 심판단계별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고, 본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검색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 재결례 지식 DB를 통해 다른 행정심판의 재결례를 공유할 수 있고, 사이버 소통창구를 통해 다양한 소통 및 협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구서와 답변서의 온라인 제출을 통한 행정심판 처리기간의 단축, 개별 심판기관별 시스템 개발비용(약 1,900억) 절감 역시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구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수적 효과이다.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심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만들어진 One-Stop 행정심판서비스. 앞으로 행정심판허브시스템을 통해 국민, 행정청, 행정심판기관의 지속적인 개방과 공유 및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져 국민이 행복해지고, 정부3.0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 집배원이 전국 방방곡곡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를 배달한다!

7-14 맞춤형서비스 · 우정사업본부



요즘 집배원은  
우편물만 배달하지 않습니다.  
소외계층과 주민 민원해결을 위해  
빨간자전거로  
행복까지 배달합니다





2013년 9월 24일 오전 9시, 공주우체국 소속 권오건 집배원은 어느 때와 같이 배달할 우편물을 오토바이에 가득 싣고 우체국 정문을 나섰다.

한참동안 배달하던 중에 그가 갑자기 골목 가로등 앞에서 오토바이를 멈췄다. 전신주 위의 가로등이 파손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매일 밤 어두운 골목길을 환하게 비춰주어야 할 가로등이기에 그는 핸드폰을 꺼내 공주시청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고장 난 사실을 제보하였다.(가로등은 그날 오후 공주시청에서 바로 수리를 마쳤다.)

계속해서 배달을 하던 권 집배원은 어느 할머니 댁에 들렀다. 골목 안 비좁은 쪽방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집 밖까지 나와 집배원을 반가이 맞아 주셨다. 할머니는 평소 찾아오는 이가 거의 없는 당신의 집에 와서 친아들처럼 챙겨주는 권 집배원이 너무나도 고마웠다. 그는 배달할 우편물 때문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지만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여쭙보며, 공주시에서 보낸 복지안내 우편물의 내용도 천천히 설명해 드렸다. 문득 곧 다가올 겨울동안 할머니께서 잘 지내실지 걱정이 되 시청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생활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독거노인 가구 수가 45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반면에 접근성은 도시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만으로는 그들의 늘어나는 행정서비스 수요를 100%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농어촌 및 산간 지역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방안이 올해 5월부터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 9월 5일 우정사업본부와 안전행정부 간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업무 협약’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사업)이 체결되었다.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는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중 독거노인의 생활 상태나 주민들의 불편·위험사항(도로파손, 산불 등)을 발견하면 지자체에 제보하여 즉시 조치되도록 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복지 제공 및 주민 민원 해결이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11월 현재까지 전국 145개 농어촌 소재 우체국과 지자체 간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노인 응급 조치, 파손된 도로 및 산사태 방지망 제보 등 80건이 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복잡한 기업행정은 이제 기업지원 통합포털 G4B에서 하세요!

8-1 창업기업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시험성적서 신청·발급, 기업  
애로 처리, 회사설립 안내·신청,  
방산수출입 신청, 자금지원 정보까지  
기업 행정업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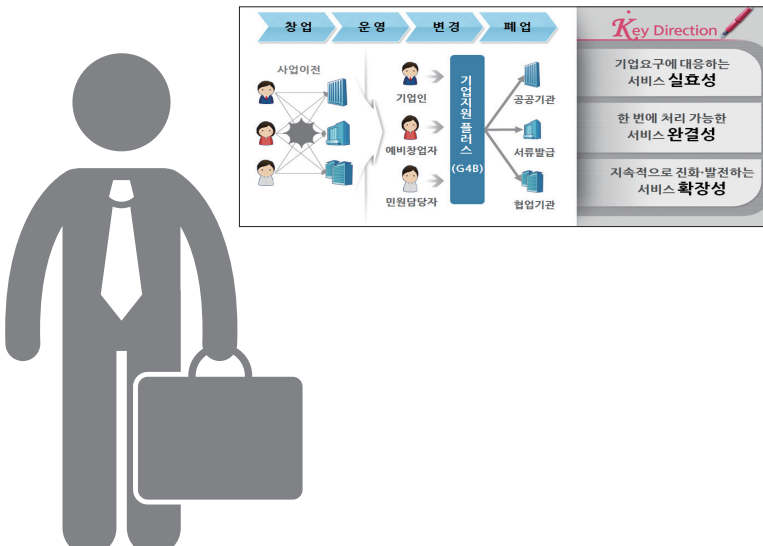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운영하는 기업지원 통합포털 G4B([www.g4b.go.kr](http://www.g4b.go.kr))가 바로 그 곳으로 기업의 창업부터 운영전반에 이르기까지 기업지원에 관한 모든 민원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한다.

G4B는 특히 기업 유형 및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정보를 안내하고, 통합신청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업활동의 원스톱 지원 강화에 서비스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조직, 인력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지원플러스(G4B)는 미래부, 중기청, 방사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대법원, 국세청,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시험인증기관 등 서비스 관련 연계기관(224개)과의 긴밀한 협조가 성공의 핵심요인이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 담당자는 약 300여번 이상 연계기관의 방문, 주관부처의 협조공문요청, 수차례 방문을 통한 협조요청, 부처간 양해각서 체결(지경부-안행부 기업애로연계협력), 워크숍 개최를 통한 협조요청 등으로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 서비스를 완성하였다.

G4B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기업민원행정안내(3,941종), 민원24 연계(800여종), 기업민원해결(3,468건), 사업내용일괄 변경처리(대법원, 국세청, 특허청, 4대보험 등 연계), 시험/인증/실적서 신청 및 발급서비스(산업기술시험원 등 100개 기관), 기업애로 연계·협업처리 서비스(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21개 기관 연계), 산업정보 및 신성장 동력정보, 입찰정보, R&D 자금지원정보 제공, 온라인 재택창업 및 방산수출입지원 민원신청(22종)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G4B서비스 중 일괄변경 서비스는 법인등기 변경, 사업자 정정신청, 4대 사회보험 변경신청, 자동차 등록변경, 특허변경 등 기업의 사업내용을 온라인으로 일괄적으로 변경해주는 것으로써 '10년 법인등기 변경 약 56만건, 사업자 정정 약 90만건 등 연간 약 146만건, 자동차 정정신고 797,000건(12년 추정치), 지적재산권 정정신고 41,865건을 처리하고 있다.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기업지원플러스(G4B)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사장으로부터 얼마 전 정부의 온라인 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덕분에 정부 공공기관 입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사연을 들었다. 그 사장님은 처음 해보는 입찰 준비에 까다롭게 요구하는 구비서류로 정신없던 중 제출 마감시간에 닥쳐 납품물건에 대한 시험성적서 하나를 빠트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당해 연구원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마감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입찰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때 ‘기업지원플러스(G4B)’라는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면 어디에서나 시험성적서를 프린트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렸고, 실제 무사히 제출하고 입찰에 낙찰되었다고 한다. ‘기업지원플러스(G4B)’의 효과를 톡톡히 느낄 수 있는 감사한 순간이었다고 웃음 지었다.

앞으로 ‘기업지원플러스’는 부처별로 벽을 허물고 기관별로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합하여 국민들에게 R&D사업공고, 입찰정보 등 관심 사업분야, 신청자격, 지원규모 등 자신의 조건에 매칭되는 맞춤형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정부3.0의 선도과제로 역할을 수행하여 1인 창조기업/벤처기업/중소기업의 창업부터 중견기업으로 성장까지를 지원할 수 있는 ICT기반의 기업생애 전주기적 정부통합 기업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완벽히 구현할 계획이다.

“중전에는 중소기업들이  
출연(연)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어딜 찾아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기술지원 원하는 中企  
**☎ 1379** 출연연구소들이  
원스톱 상담

8-2 창업기업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그동안 중소기업은 기술 분야에서 어려움을 느껴 정부 연구소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생산 기술연구원 등 총 25개 연구소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그동안 복잡하고 어려웠던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 지원 채널을 하나의 콜센터로 통합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통합 지원창구 구축을 통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한 중소기업 지원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통합센터로 전화만 하면 센터가 알아서 관련 기관을 찾아 애로사항을 해결해줍니다. 기술 자문, 기술 이전, 연구장비 사용 등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전화(1379)나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애로사항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령, 중소기업에서 연구, 인증을 위해 고가의 연구장비가 필요할 경우 ☎1379 전화 한통이면 출연연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의 목록을 검색하여 중소기업과 매칭을 시켜 줍니다.

“중소기업 H사는 중요 납품처인 철도공사 및 대기업 등에서 신뢰성 있는 인증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필히 요구하였으나 적절한 시험장비 및 기관을 찾지 못하였다. 이에 통합기관에서 기술애로 상담을 신청하였고, 필요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청권지역본부에 시험가능 장비 보유를 확인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하여 철도공사, 현대중공업 등 주요 고객사에 납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통합지원센터는 12개 지역센터('13.12월 개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출연(연) 본·분원, 과학·산업단지 간의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기술 교류회 등)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접수 & 연계 Process

# 중소기업, 관세청 FTA 컨설팅을 받고 해외수출이 늘어났어요!

8-3 창업기업지원 · 관세청



FTA 교역시대가 됐다는데  
해외수출은 아직  
남의 이야기일 뿐인 중소기업이라면  
관세청의 FTA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부산에 소재하는 B사는 전기부품을 생산하여 국내 판매하고 일부는 해외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B사는 그동안 해외 수출은 중국의 저가공세 등 가격경쟁력에 밀려 전체 매출액의 10%에 그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 B사 대표 김모씨는 계속 웃는 일이 많아졌다. 세관의 도움을 받아 FTA를 활용하고 난 뒤부터 미국, EU 등으로 수출이 전년에 비하여 900%나 증가하고 외국 바이어로부터 계속 주문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세관의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이 늘게 되어 공장을 증축하고 인력을 10% 추가 고용하는 등 자신과 근로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요즘 정부가 확 달라졌다는 것을 몸소 느낀다고 한다.

2011년 한-EU FTA,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되는 등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FTA 교역시대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FTA를 선제적으로 준비한 대기업과 달리 인력이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원산지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약 40%가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별 기업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파악하여 끝까지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먼저 세관에서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FTA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후 해당기업에 꼭 맞는 컨설팅과 지원을 진행하였다. 즉, 원산지관리에 애로를 겪는 기업에게는 관세청이 직접 개발한 ‘FTA-PASS’라는 시스템을 무료 구축하고, 스스로 FTA 활용을 할 수 있도록 1개월 이상 사후관리를 지원해 주는 한편,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관 상설교육센터를 통하여 무료 교육을 지원하는 등 개별기업의 취약부분에 맞추어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정보취득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세관이 가지고 있는 각종 정보를 개방하여 기업이 각종 FTA 무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FTA 무역 리포트 등 각종 통계 및 분석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실무자를 위한 원산지관리 실무사례, FTA 활용 성공사례 등을 수집·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FTA 활용 역량을 제고하였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은 전년 대비 32%나 증가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소요되던 원산지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으며, 향후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까지 감안하면 연간 약 7,000억원의 기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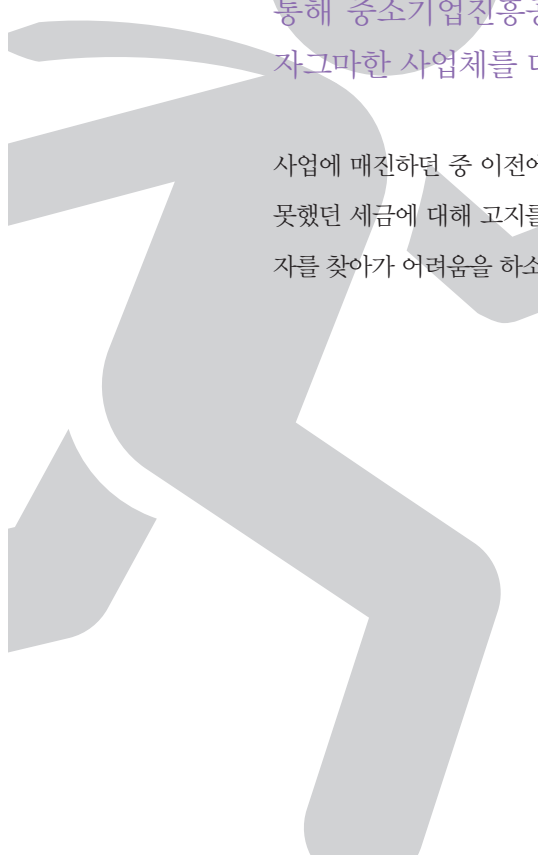
기업현장방문

## 납세담보 면제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의 새 출발의 꿈을 응원한다

8-4 창업기업지원 · 국세청



어려워진 사업체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재기 중소기업인들이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3년 5월 30일부터  
납세담보 면제 한도를 1억원 까지  
확대합니다



“남모씨는 2009년까지 20여년 간 영위하던 사업을 거래처의 연쇄 부도로 인해 한 순간에 접어야 했던 중소기업인이다. 갑작스런 사업실패로 인해 많이 방황하며 노숙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방송을 통해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전해 듣게 되었고 다행히 그 동안의 기술력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아 자그마한 사업체를 다시 운영하게 되었다.

사업에 매진하던 중 이전에 하던 사업을 정리하면서 경황이 없어 신고하지 못했던 세금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되었으며 망연자실한 남씨는 세무서 담당자를 찾아가 어려움을 하소연하였다.

담당공무원에게 상담을 받던 중 2013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확대 제도에 대해 듣게 되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는 제도였다. 마침 요건과 기준에 맞았던 남씨는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6개월의 징수 유예 승인을 받았고 사업정상화에 매진할 수 있었다. 이후 자금사정 회복으로 당초 약속했던 유예기간보다 빨리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그간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납세담보면제 규정을 적용, 납세유예 세액 5천만원까지 납세담보 면제를 해주었으나 2013년 5월 30일부터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 납세담보면제 규정을 1억원까지 확대했다.

앞으로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확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세징수사무처리 규정(개정 전)>

제77조(납세담보의 요구)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예세액 5,000만원[생산적 중소기업, 장기계속사업자, 사회적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일자리창출중소기업 · 모범납세자의 경우 5억원, 관세청장이 선정한 종합인증우수업체(AEO)의 경우 2억원을 한도로 유예신청 해당 세목의 직전 1년간 납부세액] 이하인 경우

#### <국세징수사무처리 규정(개정 후)>

제77조(납세담보의 요구)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예세액 5,000만원[생산적 중소기업, 장기계속사업자, 사회적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일자리창출중소기업 · 재기 중소기업인의 경우 1억원, 모범납세자의 경우 5억원, 관세청장이 선정한 종합인증우수업체(AEO)의 경우 2억원을 한도로 유예신청 해당세목의 직전1년간 납부세액]이하인 경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징수유예기간과 분납 한도】 ① 세무서장이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중략)…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 사업계획에서 마케팅까지 농축식품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프로그램 실시!

8-5 창업기업지원 · 농촌진흥청



농축식품분야에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창업초기의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면?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우리나라 농축식품 분야 창업기업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농림어업 관련 신설법인 수는 ('08)36개 → ('12)197개로 약 5배정도 증가하였으며,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수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생존을 위한 전략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 **영농조합법인** ('09) 5,597개 → ('10) 8,107개 → ('11) 8,724개  
**농업회사법인** ('09) 940개 → ('10) 1,633개 → ('11) 2,143개  
(자료출처 : 국가통계포털)

영농 경험이나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국내에서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창업 2년 후 49.1%에 불과 한다고 하니 농축식품 분야 창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이런 창업초기 기업들의 문제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아이들에게 아토피가 있어 일반 과자를 먹이지 못하던 정○○씨는 유기농 쌀로 과자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주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2009년 5월 나홀로 창업을 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사업계획은 어떻게? 생산은 어떻게? 판매는 어디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등등 막막하기만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때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만나 사업계획에서, 마케팅, 법률자문, 수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업지원프로그램 컨설팅을 받아, 공장 설립은 물론 호주, 중국으로의 수출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정○○씨는 창업이 미래라고 말한다.

이처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축식품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을 위한 역외창업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업체간 경영 노하우 및 사업 공유와 협력을 통해 농축식품 분야로 창업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현재 50여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영지도, 자금·인력 알선, 맞춤형 정보제공과 더불어 기술기획, 기술이전, 제품기획, 시장개척 등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업체들의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축식품 업체들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농축식품 창업경진대회 등 앞으로도 우수한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 업체를 발굴하고, 창업성공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 역외창업보육이란 일정 건물에 입주하지 않고 찾아가는 창업지원을 말함



농식품 창업 교육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창업기업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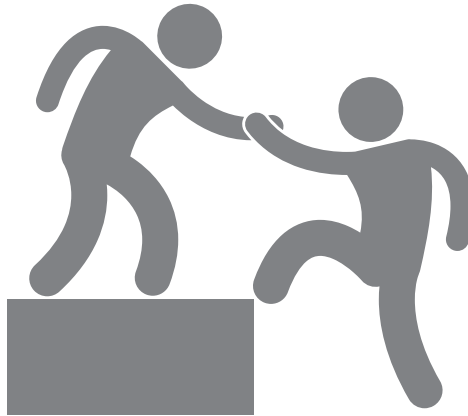


작은 아이디어가 수출 제품으로



창업초기 기업,  
어렵게 기술 개발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지만 민간에서는 브랜드  
파워가 없다고 안팔리고  
공공에서는 납품실적이 없어 늘 심사  
에서 탈락하셔서 많이 힘드셨죠?

창업초기  
중소기업,  
이제는 **공공조달시장**으로  
오세요!



통계청 기업생멸통계에 따르면 창업한 지 2년 후 유지되는 기업이 63%이고, 5년이 지나면 45%만이 폐업되지 않고 기업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 같이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기업의 절반 이상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폐업을 한다는 현실은 창업의욕을 꺾게 만든다.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지원, 창업자금 지원 등 여러 가지가 모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판로지원이다. 결국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도 브랜드가 없어 팔리지가 않으면 초기 기업이 마케팅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민간 뿐 아니라 공공시장에서도 대부분의 계약에서 기본적인 납품실적을 요구하거나 적격심사 등 각종 심사과정에서 납품실적에 배점을 두어 평가하고 있어 공공계약이 쉽지가 않았다.

조달청은 올해 조달기업과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한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도 창업초기 기업들의 하소연이 나왔다. A기업은 공공시장에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납품실적이 필요한데 창업초기 기업은 납품실적이 없어 계약이 어렵고, 이로 인해 계속 납품을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이를 개선해줄기를 요청했다.

이에 조달청은 창업초기 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MOU를 체결하여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창업초기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창업초기 중소기업 중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새싹기업@나라장터”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입상담을 지원하고, 납품실적을 면제하거나 적격심사에서 우대하여 창업초기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손쉽게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원정책의 효과로 인해 2013년은 창업초기 기업의 조달등록 업체 수가 지난해 대비 약 7.4%가 증가하였다. 또한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 실적도 2013년말 약 6,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지난해 대비 약 5.6% 증가한 수치이다. 적격심사 우대의 경우 아직 개선초기로 직접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존 탈락업체 중 약 36%가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초기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기본 토대가 되는 성장거름이다. 앞으로도 조달청은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공공판로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초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넘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나라장터에서 스타트-업 하세요!

4만 6천여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100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  
빛나는 아이디어 가득한 중소벤처기업에 새로운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조달 판로개척에 도전하세요!

## 「스타트-업@나라장터」란?

풍풍 솟아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공조달시장에 도전할 개척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선정 시 혜택

**혜택 01**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맞출형 컨설팅** 제공  
다수공급자계약(MAS)이면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제품이면 우수조달제품!  
해외조달시장 진출까지!!!

**혜택 02** 내 상품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기회! **구매상담회** 개최  
수요기관 구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절호의 기회 제공!



## 신청 안내



### ● 대상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가진  
기업 또는 창업희망자



### ● 신청방법

조달청(www.pps.go.kr), 나라장터(www.g2b.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스타트-업@나라장터 공고문 참조

### ● 접수기간

'13.07.25.(목) ~ 08.23.(금)

### ● 문의처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신상품 개발 팀 070-4056-6470  
정보기술응역과 070-4056-7161

나라장터 스타트-업 프로그램 포스터

특허 상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창업자들이라면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 가공할 수 있는  
키프리스플러스를 만나보세요.

아이디어만  
가지고 오세요~  
특허청이  
창업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 ✦ 사업 아이디어는 있는데...

한·영 번역기를 개발한 벤처사업가 S씨 요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하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번역기로 특허공보를 번역하여 이를 국내·외 시장에 팔고 싶은데, 고민이 많다. 특허 번역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특허공보 데이터도 구매해야 하고, 이 데이터를 가공·분석할 시스템도 개발해야 하고, 또 개발 상품을 홍보도 해야 하는데 개발 자금을 마련할 길은 없고, 이래저래 S씨의 시름만 깊어지는데...

### ✦ 창업 아이디어, 키프리스플러스(KIPRIS<sup>Plus</sup>)를 만나 현실이 된다.

그러던 차에 지난 6월, S씨는 특허청으로부터 정부3.0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특허정보 활용서비스(키프리스플러스)의 안내 메일을 받고 기뻐한다. 키프리스플러스를 통해, 특허정보를 CD나 FTP(파일 전송)로 제공해오던 방식에서 민간과 아예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는 내용이었다.



키프리스플러스 개념도



특허정보 개방·활용 자문위원회 발족  
('13년 11월)



특허정보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정보 유통 플랫폼



이렇게 되면, 창업자들이 별도로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고도 특허서비스 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 7.3억 원의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키프리스플러스에는 데이터베이스 가공에 필요한 시스템이 모듈화(API)된 형태로 373가지나 제공되고 있어, 창업자는 뷔페에 온 것처럼 필요한 시스템 모듈을 저렴한 비용으로 골라 쓸 수 있다.

#### ✦ 키프리스플러스, 상품의 유통 · 판매도 지원.

키프리스플러스는 창업자들의 상품 개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개발 상품을 유통 · 판매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창업자들은 지식재산 DB 상품들을 웹하드처럼 키프리스플러스에 등록(업로드)할 수 있으며 자기 상품을 홍보도 할 수 있다. 오픈 API 형태로 개발 상품을 등록해 두면 타 창업자가 그 상품과 타 API와 결합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그 파급효과는 상당하리라 기대된다.

#### ✦ 키프리스플러스, 비즈니스 창출의 길을 트다.

키프리스플러스를 통한 비즈니스 창출의 열기는 뜨겁다. 지난 8월 수요기업 신청을 받아 2개 기업 2개 과제에 대해 상품개발을 지원하였고, 8개 기업이 자사상품 20개를 키프리스플러스에 등록하여 홍보하고 있다. 올해 들어 9개 기업이 신규로 키프리스 유저로 등록하여 전년 대비 170%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 ✦ 특허청, 끊임없이 국민을 위해 개방 · 공유하다.

특허청이 기존의 수동적인 데이터 제공에 그치지 않고 창업자들을 위해 특허청 지식재산 DB 자체를 개방, 창업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창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추가비용을 해소한 결과였다. 이메일을 읽고 사기가 충전한 S씨 혼자 말로 중얼거린다. “사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네, 특허청이 다 도와주는데 뭐.” 키프리스플러스에 접속하는 S씨 입가에 미소가 흐른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근무할 회사를 찾아가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에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외국인 근로자  
알선 채용!  
스마트폰으로 OK!



9-1 취약계층지원 · 고용노동부



을 초부터 10월말까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사업장변경신청을 통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한 외국인근로자는 4만2천명에 달한다. 고용센터에서는 이직을 원하는 외국인과 사업주를 알선을 통하여 이어주고 있다.

그러나,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는 영세한 사업주들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PC를 이용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주로 밖에서 일을 봐야하는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의 사업주인 경우에는 여건이 좋지 않아 불편이 많았다.

외국인 또한, 알선받은 사업장의 정확한 위치와 교통편 정보를 몰라 채용되지 않을 경우 택시비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곤 했다.

이에,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민원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외국인고용관리 앱을 개발하여 2013년 10월 1일 서비스 개시하였다.

실제로 최근에 앱을 이용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농장주 강모씨와 베트남 외국인근로자의 사례를 소개해 보면,

경기도 평택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강모씨는 2013년 10월 28일 서비스 오픈공지로 발송된 메일을 확인하고 외국인고용관리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였다. 마침 일손이 바쁠 때라 농장에 있는 경우가 많아 고용센터에 외국인 알선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외국인고용관리 앱서비스를 통하여 고용센터에 알선요청을 할 수 있었고,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PUSH 알람을 통하여 빠른 시간에 알선된 외국인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적격자 선정까지 할 수 있었다.

한편, 베트남 외국인 H모씨는 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를 하여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상태였는데, 고용센터에서 알선해준 강모씨의 농장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앱에서 제공하는 지도서비스와 길찾기 대중교통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려움 없이 방문할 수 있었다.

앞으로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특례외국인 구인/구직 서비스 등 콘텐츠 추가 및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사업주와 외국인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알선요청 및 적격자 선정



# 탈북청소년들의 두 번째 엄마! 1:1 전담코디네이터 제도!



9-2 취약계층지원 · 통일부

대한민국에 온지 갓 6개월이 된  
탈북청소년 김군.  
남한 학생들과 적응하라,  
생소한 과목들 공부하라,  
진로고민 하라 막막하기만 한  
학교생활을 1:1로 도와주는  
전담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있다면?





2010년에 부모님과 함께 대한민국에 들어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 탈북 학생 김군은 이제 학교생활이 즐겁고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 작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숙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학교가기가 두려웠던 김군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이 학교 전담코디네이터인 이○○ 선생님 덕분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이○○씨(40,여)는 탈북학생들에게는 두 번째 엄마라 불린다. 낯선 대한민국에 와서 모든 것이 새롭기만 한 탈북학생들에게 1:1 학습지도는 물론, 친구관계, 방과후 학습, 진로상담, 지역사회 문화 체험활동까지 학교생활 면면을 엄마처럼 세심히 챙겨주기 때문이다.

통일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탈북 청소년 전담코디네이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탈북청소년들이 처해있는 특별한 정착 환경 때문이다. 국내에 취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2,200여명이며, 중도탈락률은 3.3%(2012년 기준) 일 반국민(1%)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기존 학생들과의 문화적 차이 등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개인별로 처해있는 환경이나 요구하는 서비스 수요가 달라 천편일률적인 상담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 등 획일적인 프로그램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학생 개개인의 비정형적인 서비스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학생들을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전담 코디네이터가 오히려 효과적이다.



남북청소년\_음악단

전담코디네이터는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연수를 통해 선발된 탈북교사 1명이 하나원 인근의 삼죽초등학교에 배치된 것이 최초로, 2013년부터는 통일부와 교육부, 북한이탈지원재단이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전담코디네이터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에서 교사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탈북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에도 안성맞춤이다.

전담코디네이터 이 씨는 반에서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이 부진한 학생을 교육하게 하는 방식을 적용해 탈북학생들과 기존학생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줬다. 또한 탈북학생 11명과 남한학생 9명이 함께 남북청소년 음악단을 결성하게 하기도 하였다. 탈북학생과 관련된 모든 영역(학습, 심리정서, 문화, 진로적성)에 대한 관리와 담임선생님, 같은 반 학생, 학부모들에게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시키는 것도 전담코디네이터 이 씨의 몫이다.

통일부와 교육부는 2013년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일선학교의 수요조사를 통해 전국의 전담코디네이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에 맞춘 기상정보 서비스가 기상복지를 실현합니다

9-3 취약계층지원 · 기상청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날씨를 찾아보고,  
출근길 복장과 우산 등을 챙기고,  
집 여기저기를 한번 더 단속하는게  
요즘의 흔한 풍경이죠. 하지만  
스마트기기과 친하기 힘든 이들은  
이런 실시간 기상정보를 얻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기상청에서는 기상정보를 빠르게 접하기 힘든 노인들,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위험기상정보와 생활기상정보를 SMS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러한 정보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SMS는 전달할 수 있는 정보량에 한계가 있어 최대한 짧게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가령 혼자 사시는 연로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시설에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애인에게 “금일(8.15)자외선, 식중독 위험. 썬크림, 모자이용, 손씻기, 익히고 끓여먹기”, “7월8일 서울 호우 주의보 20시50분 발효,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요망” 이런 SMS가 전송된다면 실제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기상청은 제공된 정보의 의미를 바로 파악하고, 필요할 때 신속하게 이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노인 돌보미나 장애인시설 관리자, 보육시설 관리자 등에게 이런 SM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식중독 위험이 높은 날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지적 장애인들의 모임 활동 시간에 반복적으로 손씻기, 음식 조심하기 등을 주의 시킨다.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경증 지적장애인의 경우 이런 주의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 2013년 현

재 서울시 전역에서 활동하는 노인 돌보미 등 관련 담당자 1500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또한 결혼 이민자나 이주 노동자 등 한국어로 전달되는 기상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사회 문화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국어 기상정보 SMS 서비스도 시작했다.

2013년 남원시와 장수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을 조사하고, 기상정보를 영어와 베트남어로 번역할 수 있는 단문 번역시스템과 전송시스템을 마련하여 4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탕티만(한국명 남희주, 26세, 베트남)

한국으로 시집을 오고 4년 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꾸준히 교육을 받아 한글을 간신히 읽을 수는 있으나.... 특히 더운 나라에서 온 탓에 매서운 추위와 변덕스런 한국의 날씨는 적응이 쉽지 않았고, 기상정보를 얻는 것도 쉽지 않았다. 날씨를 잘 몰라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베트남어로 (기상정보를) 보내주니까 너무 좋다.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상청과 복지서비스는 친숙한 조합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소외받는 취약계층이 늘어가는 폭염과 한파에도 건강하고, 강한 기상 재해에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상청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노인돌보미와의 의견교환



다문화 가족 대상 업무소개



다국어 서비스 관련 업무협의



# 청각언어장애인!

집, 사무실, 공공기관에서  
수화로 민원상담하세요~

9-4 취약계층지원 · 국민권익위원회

청각언어장애인이 어려운 일,  
궁금한 일,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가 있다면...?





2011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각언어장애인은 278,530명이다. 그동안 민원 접수 및 상담을 위하여 공공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민원해결이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청각언어장애인들이 공공기관을 방문하려면 우선 수화통역사를 미리 예약해서 데려가야 하고, 만약 혼자일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글을 쓴 쪽지를 주고받으며 의사소통을 해야 했다. 하지만 글을 알고 있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많지 않고, 복잡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 수화통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불편함과 답답함을 해소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들이 혼자서 공공기관을 방문하고 수화로 편하게 이야기하며 민원을 해결할 순 없을까?

**사회적 약자 배려 눈높이 민원창구**

**“손짓과 표정으로 민원업무 상담해요”**

정보 손짓과 표정으로 민원업무 상담해요

청각언어장애인이 '수화 화상수화통역서비스' 제공  
청각언어장애인이 민원업무 상담을 받기 위해 수화통역사를 불러 상담을 받는다. 수화통역사는 청각언어장애인의 말을 듣고, 이를 공무원에게 전달한다. 공무원도 수화통역사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말을 듣고, 이를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전달한다. 수화통역사는 청각언어장애인의 말을 듣고, 이를 공무원에게 전달한다. 공무원도 수화통역사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말을 듣고, 이를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전달한다.

... 28만명에 달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이 ... 상담을 바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 110콜센터가 화상수화통역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주시 이도2동 주민센터에 민원인이 찾아왔다. 민원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짓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담당 공무원은 웹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 책상으로 민원인을 안내하고 110홈페이지에 접속했다. 110수화상담사와 수화통역을 통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상담을 해드렸다. 예전에는 행정기관을 방문하려면 며칠 전부터 수화통역사와 방문 날짜도 예약하고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110수화통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혼자서 아무 때나 주민센터를 찾아갈 수 있게 되어 편리해진 것이다.

110화상수화 민원상담 서비스 이용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청각언어장애인이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수화통역을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110 공공기관 화상수화 통역서비스”에 접속하여 3자간 수화와 음성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물론 가정, 사무실에서도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에 웹카메라 한 대만 설치하면 110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화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휴대폰으로도 상담할 수 있다.

홈페이지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이용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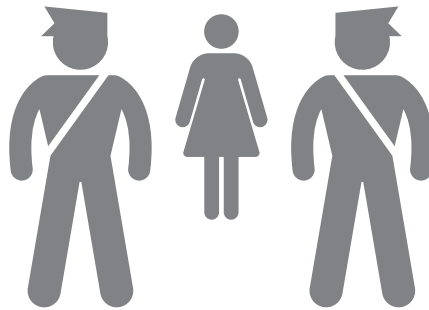
‘정부3.0시대’ 권익위 행정혁신 앞장선다  
(파이낸셜뉴스, 9. 13.)

이런 110 화상수화서비스를 통한 민원상담은 2013년 10월 현재 3,915개의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개시 이후 20,538건을 상담하였다. 또한, 예산절감 효과측면에서 각 공공기관별 수화전담인력을 배치 시 매년 2천만 원이 소요되는 반면에 본 서비스의 경우, 최초 설치비 15만원만 소요된다. 청각언어장애인의 민원수요가 많은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 도입 시 매년 1,201억 원이 절감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병원과 터미널, 공항 등의 공공시설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화상수화통역서비스는 대한민국 전체에 차별 없는 소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 우리 가족의 귀갓길...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로 지킨다!

10-1 신기술 · 안전행정부



아내가 밤늦게 퇴근 할 때,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귀가할 때,  
고향에서 올라오시는  
부모님 마중을 나가지 못할 때.  
항상 불안하고 걱정되셨죠?

어린이,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율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은 가족의 안전한 귀갓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걱정 또한 늘게 되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모바일 기반의 실시간 생활안전 정보서비스인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를 2012년 11월부터 전국서비스로 오픈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는 어린이나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한 통학/귀가를 위해 사용자의 이동 중 위치정보를 보호자에게 알려주고, 생활주변 안전시설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지도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사례 1)**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초등학교 2학년 김○○ 어린이가 교통이 혼잡한 곳으로 접어들자 스마트폰에 위험지역이라는 표시가 뜨고 동시에 김○○ 어린이 어머니의 스마트폰에는 아이의 현재 위치가 표시된다. 또한 평소 다니던 귀갓길을 벗어나도 곧바로 어머니에게 위치 정보가 전달된다.

**사례 2)** 김○○ 어린이의 어머니는 스마트폰 위험 알람이 뜨자 김 어린이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교통사항 주의 및 귀갓길 안내를 해준다.

김 어린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오는 길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었고, 김 어린이는 어머니의 안내를 받아 무사히 집으로 도착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 이용자가 출발지와 목적지, 보호자를 등록하면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위치정보가 전달된다. 특히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과 같은 위험지역을 지나갈 때, 스마트폰의 소리나 진동으로 이용자·보



호자에게 알려주어 위험지역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또한 서비스 사용 중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신고 버튼을 눌러 경찰서(112) 또는 미리 설정되어 있는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연락을 할 수도 있다. 아울러, 예약한 시간에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예약 기능을 갖추고 있어 경로 이동 때마다 앱을 실행시키고 설정해야 하는 불편함도 덜어주고, 스마트폰 사용이 미숙한 어린이나 노인 등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는 야간 및 위급 상황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병원/의원, 약국위치, 비상대피시설 등 생활안전시설에 관한 정보 제공하여 준다.

본 서비스는 2012년 11월에 전국서비스로 오픈한 이후 2013년 11월 현재까지 약 16만건의 앱 다운로드와 48만건에 이르는 앱 이용 횟수를 보이고 있는 등 지속적인 호응과 관심을 끌고 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기능 개선 및 이용활성화를 통해 국민 생활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 안전을 위한 대표적인 대민 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 수산물 원산지!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하고 안심하고 드세요~

10-2 신기술 ·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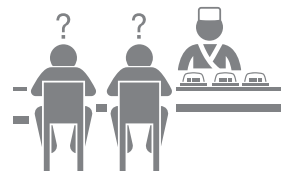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바다로의 방사능 유출.  
과연 평소 즐기던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  
국내산은 괜찮다는데, 혹시  
원산지를 속이고 팔지는 않을까?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A씨는 요즘 수산물을 구입하는 것이 불안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방사능이 바다로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과연 평소에 자주 먹는 고등어, 삼치 등을 저녁 식탁에 올려도 되는 지 걱정이다. 아이들이 생선을 좋아하고 영양 섭취를 위해 아예 안 먹을 수도 없으니 말이다.

정부의 지난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로 원전사고 인근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국내 유통은 전면 금지되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에도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은 사실상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염된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는 존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가 직접 유통 현장에서 원산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한 먹거리 정보를 제공하고,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입·소비할 수 있도록 나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수산물 종/원산지 자동판독시스템의 개발·보급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유전자분석 전문가들이 고도의 장비를 갖춘 실험실에만 가능했던 것을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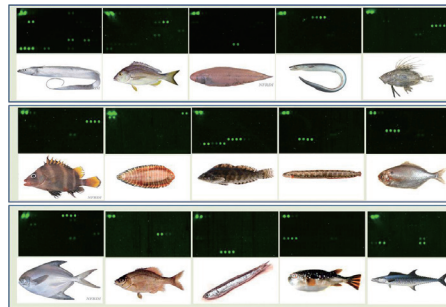
자동판독시스템을 활용하면 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수산생물의 일부를 자동판독기에 투입함과 동시에 유전자(DNA)가 분리 되고, 증폭한 뒤, 종/원산지 판별 DNA칩과 반응하여 유전정보의 일치 여부에 따라 종명 및 원산지를 식별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차후에는 농어업, 임업,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판정, 의학에서의 질병 진단(암/바이러스 진단)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플루, 조류독감의 신속한 확산에 응용이 가능하여 개발이 성공한다면 폭넓은 분야에서 실용 가능한 기반 기술이 될 것이다.

서울에 사는 주부B씨는 수산물 자동판독기 덕에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수산물 자동판독기를 활용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수산물의 살점을 조금 떼어내어 확인하면, 현장에서 1시간 이내에 국내산인지 여부가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산물 DNA 칩



실시간 자동 판독기



선물로 받거나,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수입식품들  
혹시나 몸에 나쁜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나 불안하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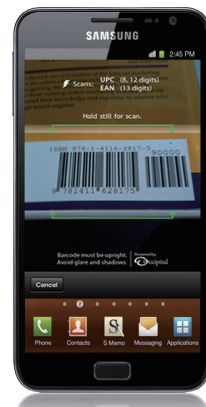


스마트폰 바코드 App으로  
안전한 수입식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사례 1)** (수입 식품상가에서) 이 모 씨는 가끔 D시장으로 헬스보충제를 사러 간다. 인터넷 판매가보다 싸게 나온 제품들이 간혹 있기 때문이다. 주안아저씨가 효과가 좋다는 말에 바로 사려다 혹시나 싶어 스마트폰으로 찍어봤더니 ‘불합격’이라는 메시지가 뜬다. ‘실테라필’이라는 식품에 사용될 수 없는 성분이 들어있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관계 당국에 알려주었다.

**사례 2)** (세관 입국장에서) 여행자들을 검사하는 모습도 많이 달라졌다. 검사대마다 하나씩 붙어있던 큼직한 바코드 리더기는 사라졌고, 직원들은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찍어 식품이 안전한지 쉽게 확인한다.

세관에서 수입식품 위해(危害) 스마트폰 App을 개발·보급한 이후 달라진 풍경이다.





경인지방식약청과 MOU 체결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수입식품의 위해성 여부를 알 수 있는 App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세관은 지난 2011년 이미 「바코드 위해물품 정보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중국산 식품들을 검사하는 데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보따리상 반입 물품에 집중되어 있는 D/B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Open-API 형태로 외부 서버에 공개한 후 바코드 App을 개발하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우선 D/B를 전체 수입식품으로 확대 구축하는 일은 세관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식약처와의 협업이 꼭 필요

했지만, 여느 부처와 마찬가지로 협업은 지지부진했다. 그 간 협업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다른 기관에 끌려 다니면서 일만 늘어나고 생색도 나지 않는 것’이라는 인상이 컸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D/B를 공개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발이 컸다. 정보는 요청한 것만, 법률 규정상 걸리는 게 있는 지 꼼꼼하게 검토해보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다.

이 ‘부처 이기주의의 넓은 강’과 ‘행정 비밀주의의 깊은 계곡’을 건널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바로 정부3.0 패러다임이다. ‘정보는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소통하고 협업할 때 비로소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정부3.0의 가치는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이 되어 정부 부처들의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2013. 8 인천세관과 경인지방식약청이 서로의 칸막이를 허물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위해 식품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고심하였고, App 개발에 이르렀다. 향후 데이터가 누적되면 Big-data 분석을 통해 시기별 · 지역별 반입 예정 수입식품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니 정부3.0의 가치가 국민 참여를 통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기대해 본다.

## 전세계 하늘 길에서 우리의 기상정보로 안전하게 여행하세요!

10-4 신기술 · 기상청



2002년 4월,  
중국 베이징을 떠나 김해를 향하던  
중국 항공기가 김해공항 인근에  
추락하여 승객 12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김해공항은 짙은 안개로 인해  
시정이 매우 나쁘고  
강한 바람까지 겹쳐  
소규모 항공기는 이·착륙이  
중단된 상태였다.



흔히 항공기는 첨단 기술의 결정체라고 말한다. 하지만 급변하는 기상 앞에서는 무엇도 승객의 안전을 장담하지 못한다. 항공기 최대의 ‘적’은 기상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를 오가는 비행기의 특성상 전 세계를 아우르는 방대한 양의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승객의 안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껏 국내 항공사는 외국 회사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하지만 올 4월, 항공기상청에서 독자적인 한국형 항공기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항공기상 지원 서비스’를 시작하며 항공 여행객의 안전과 국내 항공사의 의사결정 편의를 지원하고 나섰다. 항공기상청은 “우리 국민이 여행하는 지역이면 어디든 출발에서 도착까지 우리의 기상정보를 서비스하자”는 마음으로 항공기상지원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다.



항공정보센터와 국내 항공사로부터 국내 항공편의 운항정보와 상세한 운항 스케줄을 제공받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국적 항공기의 해외 주요 취항공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여러 기관의 협조로 확보한 항공 정보와 기상청의 세계기상정보를 분석·융합하여 비로소 독자적인 항공기상지원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이 시스템은 비행편 입력만으로 비행기의 이륙에서 착륙까지 운항 경로상의 모든 기상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 등 기상지원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항공기의 안전한 이륙과 착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 200여개 공항의 기상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7개의 국내 항공사가 외국의 유료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데에만 3.5억 가량의 비용을 쓰고 있으며 회항, 운항지연, 결항 등 기상악화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운항 차질이 유발하는 부차적 경제 손실은 연간 7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항공기상청의 서비스는 국내 항공사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맞춤형 기상지원으로 이러한 비용을 상당부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일반 국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쉬운 기상정보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라 하니 기대해도 좋다. 대한민국의 항공기상 지원 서비스에 날개를 달았다.



기상정보는 완전한 항공운행의 필수요소!  
왜냐 할 기상자료가 너무 많는데,  
이중 또 어디서 찾지?

**비행편(KE123,QZ456등)만 입력하세요!**

출발에서 도착까지의 필요한 기상정보가 바로바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운항기상지원 검색 시스템이 출발, 도착,  
대체공항, 항로상의 현재날씨와 예측정보를 초간편 초고속으로 제공합니다.

아직! 아무런 할만도  
예측되지 날씨예보가 없어!  
어떡하지?

**항공기상정보도 신토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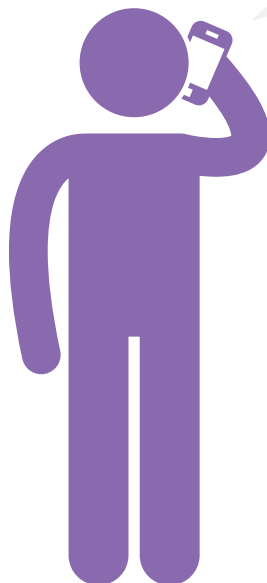
비행기는 이륙도 착륙도 기상상황에 크게 좌우됩니다.  
주요 국제공항뿐만 아니라 기상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개도국 공항까지 전세계 200개 공항의 날씨정보를 알려줍니다.

항공기상지원 시스템

우리 시대 최고의 명인,  
인간문화재의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우리 소리 한 소절 멋들어지게  
불러보고 싶지 않으세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모바일로  
즐기는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휴대전화 속  
인간문화재와 함께  
우리 소리 한 소절을~

10-5 신기술 · 문화재청





휴대전화만 있으면 인간문화재의 소리와 연주 원음을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인간문화재로부터 직접 우리 소리를 배울 수도 있다. 그동안 인간문화재의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어디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형 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국민이 무형 유산에 쉽게 접근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문화재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쉽고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나라 무형유산의 기·예능에 대해 쉽게 접하고, 전문기관을 찾지 않더라도 쉽게 체험하고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무형유산의 전승기록을 위하여 제작한 인간 문화재의 최고의 기량을 담은 전통소리, 연주원음을 누구나 들을 수 있다. ‘모바일로 즐기는 무형유산’ 모바일 웹에 들어가면 원하는 음원을 들을 수 있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우리 소리 한 자락, 한 소절 따라할 수 있도록 체험 서비스(누구나 한 자락, 한 소절 배워보는 “나도 인간문화재”)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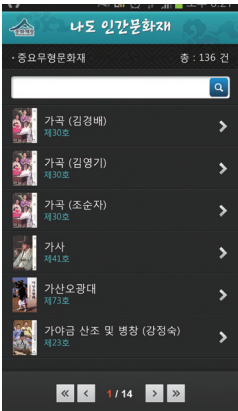
특히 우리 소리 한 소절 한 소절 따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체험 서비스는 관련 분야 최고 명인이라 할 수 있는 인간문화재로부터 일대일로 배우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시범과 해설을 곁들여 구성하였다.

문화재청은 인간문화재의 원음정보 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인간문화재의 원음을 듣고 즐기고 배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교육, 음반, 영화제작 등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또한, 중요 무형문화재 전승자와 협력체계 유지로 무형유산 체험서비스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 제작하여, 국민 누구나 우리 고유의 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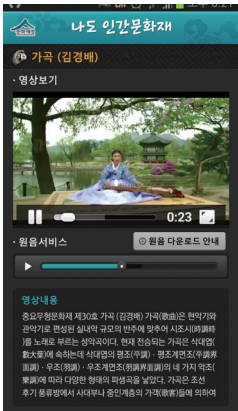
경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정보개방과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무형유산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국민 누구나 인간문화재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무형유산의 전승저변 확대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나도 인간문화재 초기화면



검색리스트 화면



상세 서비스 화면

어렵고 낯선 문화유산에 대해  
누군가 옆에서 쉽고 다정하게  
설명해주면 좋겠지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문화유산에  
다가가는 순간,  
나의 스마트 폰 속에서 해설사가  
마술처럼 나타납니다.

**스마트 폰이  
나의 문화유산  
해설사!**



10-6 신기술 · 문화재청



그동안 석굴암과 같이 우리나라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찾아가기 전에 미리 정보를 검색하거나, 문화유산 안내판을 읽거나, 해설  
사의 설명을 들어야 했다.

아 들 : “아빠, 여기 석굴암은 언제, 누가 만들었어요?”

아 빠 : “음....글쎄, 아빠도 잘 몰라. 옛날 사람이 만들  
었겠지. 책 찾아봐. 알았지?”

아 들 : “에이, 아빠는 그것도 몰라?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안했나보다. 엄마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엄마, 석굴암은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엄 마 : “그럼, 석굴암은 8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에 김대성이라는 통일신라의 재상이  
만들었어. 전생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만들었  
다는구나. 그리고 그 분은 우리가 아침에 다녀온  
불국사도 만드셨는데, 불국사는 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만드셨지.”

아 들 : “우와, 우리 엄마 멋지다 !

황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경주로 역사여행을 떠났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사진으로만 봤던 석굴암과 불국사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 들떠 있었다. 불국사에 들어서니 마침 단체관광객을 데리고 온 관광안내원이 있어 황씨 가족은 그 옆에서 설명을 들으며 불국사를 구경했다. 그런데 석굴암에 갔을 때에는 해설사가 없었다. 아이들이 석굴암에 대해 질문을 하자 황씨는 순간 당황했다. 어릴 때 배웠지만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았다. 그런데 옆에 같이 있던 아내가 석굴암에 대해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아내는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내 손안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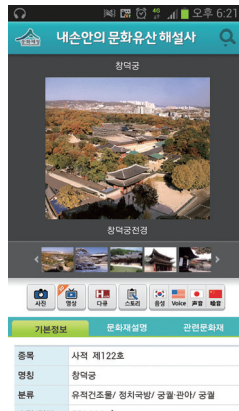


이제 스마트 폰에 ‘내 손안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을 다운 받으면, 문화유산에 가까이 가는 순간 해설사가 등장한다. 산간 오지에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도 들려주고, 관람객이 들어갈 수 없는 내부 모습도 3D 영상을 통해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외국인들은 관광안내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자국의 언어로 한국 문화유산의 역사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최근에 교육적인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문화재청의 '내 손안의 문화유산해설사'는 그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역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외국관광객이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관광효과를 높이고, 다문화 가정이나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문화유산”의  
문화유산해설사 클릭



해당 문화유산 관련정보  
보기 또는 듣기



현재 위치 주변의 문화재를  
모두 보여줌

## 시각장애인의 글자 도우미, ‘보이스아이 코드’

10-7 신기술 ·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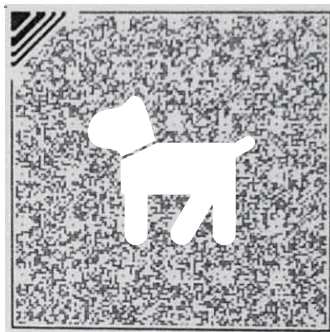
우리 문화재에 대해 알고 싶어도  
시각적인 불편함으로 인해  
그 문화재의 역사와 유래,  
이야기를 알기 힘들었던  
많은 분들께....

아이: “(보이스아이 코드를 가리키며) 아빠, 페이지마다  
오른쪽 위에 네모나게 표시된 마크는 뭐예요? 아,  
QR 코드 인가요? 그런데 QR 코드랑은 좀 다르게  
생겼는데...”

아빠: “(책을 뒤적이며) QR 코드는 아닌 것 같구나.  
표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코드’라고  
설명되어 있네”

아이: “보이스아이 코드요? 처음 들어보네요. 시각장애  
인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음성지원이 되는  
서비스인가 봐요.”

보이스아이 코드



QR코드는 바코드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2차원 코드로,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그 활용도와 인지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QR코드는 사용이 간편하기는 하지만, 인터넷이 연결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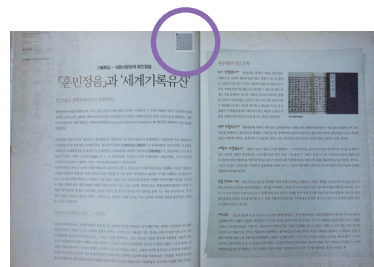
한편 ‘보이스아이 코드’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본 분들도 많을 것 같다. 보이스아이 (VOICEYE) 코드는 한글 문서의 크기를 확대해서 보여주거나 문서내용을 소리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는 서비스로,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의 정보취약계층이 인쇄출판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려고 개발되었다. 게다가 QR 코드와 달리 보이스아이 코드 자체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지 않아 언제든지 정보 접근이 쉽다. 보이스아이 코드는 그동안 기업, 법원 등에서 한정적으로 이용해 왔는데, 요즘에는 점차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으로 그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문화재청도 정보취약계층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보이스아이 코드를 도입했다. 현재는 공문서 시행문과 매월 발간하는 소식지 ‘문화재 사랑’ 등에 보이스아이 코드를 이용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모든 부서 및 산하 기관에서 인쇄물을 제작할 때 보이스아이 코드를 삽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정보 활용 영역을 계속 넓혀갈 예정이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에 대해 배우고 즐기고 싶지만 이런 정보에 쉽게 다가서기 힘들었던 많은 분들에게 보이스아이 코드의 도입이 정말 좋은 소식일 것 같다.



보이스아이 코드 문화재사랑 적용 예



보이스아이 코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간 월간문화재 적용 예

# 산행정보와 조난신고 등을 내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10-8 신기술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  
설치 하나로, 산행정보, 조난신고,  
내비게이션 기능에서  
실시간 기상정보까지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고요?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취미 1위가 바로 ‘등산’이라고 한다. 특히 지리산, 설악산과 같은 전국의 주요 명산들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년 4천 만 명이 넘는 탐방객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그런데 탐방객 수가 증가하면서 조난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산행지역에서 조난자는 통화가 가능하더라도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눈, 비와 같은 급작스런 기상변화는 안전산행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탐방객에게 보다 쉽고 편하게 다양한 탐방정보를 제공하고 조난구조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모색 하던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든 서비스를 한손에 제공하는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을 개발하게 되었다.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 주요화면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은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앱 마켓에서 누구나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전국 국립공원의 모든 데이터를 탐방객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일단 산행 초입부에서 산행정보 앱을 켜고 출발점과 도착점을 지정하면, 남은시간과 거리를 차량 내비게이션처럼 안내해주며, 탐방로 상 나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샘터나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16개 항목의 위치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내가 가고 있는 경로를 저장하는 트래킹 기능, 정규탐방로에서 벗어나면 사이렌 알림, 이용자가 만들어가는 참여마당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산행정보 앱의 핵심기능은 조난신고 기능이다. 산악지역에서의 조난은 도심처럼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형지물로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조난사고 접수에서 구조까지 걸리는 시간은 수 시간에서 수일까지 소요되며, 이렇게 지체되는 시간에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이다.

산행정보 앱은 조난자가 앱의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조난자의 GPS 위치를 공단 재난상황실로 자동 전송하게 된다. 이렇게 전달된 조난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이용하

여 기존에 비해 보다 빠르고 신속한 조난구조가 가능하게 되었다. 실제로 2012년 7월에는 설악산 화재능선에서 산행정보 앱을 이용한 실제 조난구조에 성공하였으며 현재 까지 280여건의 조난신고가 앱을 통해 접수되었다.



2013년 부터는 기상청과의 협업을 통해 산행정보 앱에서 국립공원의 실시간 기상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립공원 내에 기상특보가 발령될 시에는 탐방로 입산이 통제된다. 신규 버전(2013년 12월 예정)은 이러한 기상정보를 기상청에서 실시간 전송받아 앱을 통해 서비스하게 된다. 입산특보 발령 시에는 자동으로 알림 메시지가 표현되며, 해상공원에서는 해양기상정보도 연계하고 제공된다. 지난 2012년에 산행정보 서비스는 베트남에서 개최된 아시아 지리 공간 포럼(Asia Geospatial Forum)에서 모바일 부문 GIS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산행정보 앱을 이용한 설악산 조난구조 현황



아태지역 GIS 최우수 사례 수상과 발표

# 정부3.0

## 행복한 우리나라 만들기

정부3.0 우수사례집  
• 중앙행정기관편 •

---

인쇄일 | 2014년 1월 13일  
발행일 | 2014년 1월 13일

---

발행처 | 안전행정부  
발행인 | 안전행정부 장관  
기획편집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기획과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1864

---

디자인·기획 | 컬러커뮤니케이션즈(02-333-6555)  
인쇄 | 현대원색문화사(02-2272-4338)

---